

2007년도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추계와 OECD국가의 노후소득보장체계

보 건 복 지 가 족 부
한 국 보 건 사 회 연 구 원

머 리 말

최근 우리나라는 OECD회원국으로 가입한 이래 국제기구가 요구하는 공공사회복지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 민간사회복지지출(Private Social Expenditure), 사회복지지출(Social Expenditure), 총사회복지지출(Gross Social Expenditures), 그리고 순사회복지지출(Net Social Expenditure)의 추계와 국제비교에 관심을 두고 있다. 실제 이들 통계들은 우리나라가 OECD회원국으로 활동하는 동안 매년 제출해야 할 의무의 이행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출규모와 추이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들이다.

본 보고서는 매년 지출규모 파악과 추이분석에 초점을 두고 보고서의 기본골격을 유지하여 발간되고 있다. 보고서에는 작성기준의 변경이나 분류체계의 변경, 그리고 기존 미생산된 부분의 추가생산 등 OECD에 제출한 Social Expenditure Database를 지속적으로 최신화하고 나아가 이에 대해 설명을 추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관계전문가의 연구활동에는 물론 복지재정을 포함한 사회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복지재정 문제와 사회정책에 관심 있는 사회학자 및 정부부처의 정책수립자, 정부의 통계담당자들에게 一讀을 권하고 싶다.

본 연구는 고경환 연구위원의 책임 하에 원내 장영식 연구위원, 강지원 연구원과 원외 김재진 박사와 정무성 교수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 연구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동안 助言과 協助를 해주신 보건복지가족부 정책통계담당관실 신준호과장, 연구진행과 원고검독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현영남사무관, 연구결과와 추이 등에 수시로 관심을 보내주신 여러 독자와 전문가들께 깊이 감사하고 있다. 아울러

OECD 사무국 사회정책과의 Willem Adema Senior Economist, Maxime LADAIQUE Manager, 교육지표분석과의 Etienne ALBISER, 고용노동사회부의 David GRUBB 에게도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한다.

그리고 본 보고서를 읽고 有益한 助言을 주신 本院의 윤석명 연구위원과 류근춘 연구위원에게 謝意를 표하고자 한다. 또한 研究進行 過程에서 기초자료 제공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공공 및 민간기관 관계자들에게 감사하고 있으며, 본 보고서가 발간 되기까지 조사와 자료정리를 꼼꼼히 해주신 정영애 선생에게 감사하고 있다.

끝으로 本 報告書에 수록된 모든 內容은 어디까지나 著者の 意見이며 本 研究院의 公式見解가 아님을 밝혀둔다.

2009년 9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김 용 하

| | |
|----------------------------------|-----|
| 요약..... | 11 |
| 1장 서 론..... | 19 |
| 제1절 연구배경 | 19 |
| 제2절 연구목적 및 내용 | 21 |
| 제3절 연구방법 | 22 |
| 2장 OECD 사회복지지출의 개념과 작성기준 | 25 |
| 제1절 사회복지자원의 개념 | 27 |
| 제2절 OECD 사회복지지출의 개념과 구조 | 33 |
| 제3절 OECD의 사회복지지출의 작성기준 | 43 |
| 3장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자원체계와 추계방법 | 51 |
| 제1절 한국의 사회복지자원과 공급주체 | 53 |
| 제2절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추계방법 | 60 |
| 제3절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통계의 생산현황 | 86 |
| 4장 한국 사회복지지출의 추계결과 | 89 |
| 제1절 공공사회복지지출 | 91 |
| 제2절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 95 |
| 제3절 사회복지지출 | 99 |
| 제4절 총사회복지지출 | 110 |
| 제5절 순사회복지지출 | 112 |
| 5장 국제비교 | 117 |
| 제1절 사회복지지출 수준의 국제비교 | 117 |
| 제2절 노령연금지출과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국제비교 | 121 |

| | |
|----------------------|-----|
| 6장 결론 및 연구의 한계 | 147 |
|----------------------|-----|

| | |
|------------|-----|
| 참고문헌 | 151 |
|------------|-----|

| | |
|----------|-----|
| 부록 | 163 |
|----------|-----|

표목차

| | |
|---|-----|
| 〈표 2-1〉 공공 및 법정민간지출의 데이터베이스(SOCX) 구조 | 37 |
| 〈표 2-2〉 자발적 민간지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조 | 41 |
| 〈표 2-3〉 순사회복지지출의 산출구조 | 42 |
| 〈표 2-4〉 사회복지자원 형태와 범위 | 43 |
| 〈표 3-1〉 사회복지자원총량 세부 분석모형: 공공부문 | 54 |
| 〈표 3-2〉 사회복지자원총량 세부 분석모형: 민간부문 | 59 |
| 〈표 3-3〉 공공부조제도와 사회보상제도의 개관 | 61 |
| 〈표 3-4〉 사회복지서비스의 제도별 개관 | 62 |
| 〈표 3-5〉 4대 사회보험의 도입과 확대과정 | 63 |
| 〈표 3-6〉 교통·통신요금 감면제도별 조사대상기관과 조사방법 | 67 |
| 〈표 3-7〉 총사회복지지출의 개념적 구성항목 | 68 |
| 〈표 3-8〉 자발적민간부문의 개념적 구성항목 | 70 |
| 〈표 3-9〉 순사회복지지출의 개념적 구성항목 | 72 |
| 〈표 3-10〉 조세와 사회보험료의 개념적 구성항목 | 73 |
| 〈표 3-11〉 두 가지 유형의 이전소득에 대한 평균항목별세율(AITR) 산출 | 74 |
| 〈표 3-12〉 우리나라 연금소득의 범위 | 76 |
| 〈표 3-13〉 OECD 지침서에 의한 간접세 개념과 해당 세목 | 79 |
| 〈표 3-14〉 공공·민간부문별 간접세액 추계범위 | 81 |
| 〈표 3-15〉 우리나라의 4대 사회보험 요율(2007) | 82 |
| 〈표 3-16〉 사회복지지출 통계의 생산현황: 기능별 | 87 |
| 〈표 3-17〉 사회복지지출 통계의 생산을 국제비교(2005) | 87 |
| 〈표 4-1〉 공공사회복지지출의 추이: 연도별, 기능별 | 92 |
| 〈표 4-2〉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의 추이: 연도별, 기능별 | 96 |
| 〈표 4-3〉 사회복지지출의 추이: 연도별, 기능별 | 102 |
| 〈표 4-4〉 제도별 사회복지지출 현황(1990~2007) | 105 |

| | | |
|----------|--|-----|
| 〈표 4-5〉 | 재원별 사회복지지출 현황(1990~2007) | 108 |
| 〈표 4-6〉 | 우리나라의 총사회복지지출 규모(2000~2007) | 111 |
| 〈표 4-7〉 | 우리나라의 순사회복지지출 규모(2000~2007) | 112 |
| 〈표 4-8〉 | 사회복지지출과 순사회복지지출의 비교 | 113 |
| 〈표 5-1〉 | OECD 주요 회원국의 사회복지지출의 비교(2005) | 117 |
| 〈표 5-2〉 | OECD 주요 회원국의 총사회복지지출 및 순사회복지지출 비교(2005) | 119 |
| 〈표 5-3〉 | 사회복지지출과 순사회복지지출의 국제비교(2005) | 120 |
| 〈표 5-4〉 | 세계은행의 노후소득보장체계 분석틀 | 125 |
| 〈표 5-5〉 | OECD 사회복지지출의 부문별 구분기준 | 127 |
| 〈표 5-6〉 | OECD의 노후소득보장체계 분석틀 | 127 |
| 〈표 5-7〉 | OECD SOCX 중 ‘노령(현금)’세부항목(2005) : 스웨덴·영국 | 130 |
| 〈표 5-8〉 | OECD SOCX 중 ‘노령(현금)’세부항목(2007) : 한국 | 132 |
| 〈표 5-9〉 | 클러스터별 소득보장체계와 재원별 특징 | 135 |
| 〈표 5-10〉 | 클러스터별 노후소득보장과 관련된 요인들 | 136 |
| 〈표 5-11〉 | 클러스터별 대표국가의 항목별 지출 비교 | 137 |

그림목차

| | | |
|----------|----------------------------|-----|
| [그림 2-1] | 사회복지지출 통계의 종류별 포괄범위 비교 | 35 |
| [그림 3-2] | 퇴직소득세 계산방식 | 77 |
| [그림 4-1] |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의 구성비율 | 95 |
| [그림 4-2] | 사회복지지출의 추이: 제도별(1990~2007) | 100 |
| [그림 4-3] | 사회복지지출의 추이: 재원별(1990~2007) | 101 |
| [그림 5-1] | 영국의 다층적인 연금체계 | 128 |
| [그림 5-2] | 스웨덴의 2중구조 연금체계 | 129 |

| | |
|---|-----|
| [그림 5-3] 클러스터 분석 결과 | 134 |
| [그림 5-4] 클러스터별 대표국가의 재원별 지출 비율(2005) | 137 |
| [그림 5-5] 클러스터별 대표국가의 공공부문 '노령'지출과 노인빈곤율 | 138 |

부표목차

| | |
|--|-----|
| 〈부표 1〉 OECD 사회복지지출 항목의 분류 | 163 |
| 〈부표 2〉 한국의 공공부문 기능별 분류와 관련부처, 프로그램 예시(2007) .. | 165 |
| 〈부표 3〉 한국의 법정민간부문 기능별 분류와 관련부처, 프로그램 예시(2007) | 166 |
| 〈부표 4〉 교통·통신요금의 감면대상자와 감면기준 | 167 |
| 〈부표 5〉 사회복지지출 | 168 |
| 〈부표 6〉 사회복지지출(구성비) | 169 |
| 〈부표 7〉 사회복지지출(증감률) | 170 |
| 〈부표 8〉 사회복지지출(GDP 대비) | 171 |
| 〈부표 9〉 기능별 사회복지지출 | 172 |
| 〈부표 10〉 기능별 사회복지지출(구성비) | 173 |
| 〈부표 11〉 기능별 사회복지지출(증감률) | 174 |
| 〈부표 12〉 기능별 사회복지지출(GDP 대비) | 175 |
| 〈부표 13〉 재원별 사회복지지출 현황 | 176 |
| 〈부표 14〉 재원별 사회복지지출 현황(증감률) | 180 |
| 〈부표 15〉 재원별 사회복지지출 현황(구성비) | 182 |
| 〈부표 16〉 제도별 사회복지지출 현황 | 184 |
| 〈부표 17〉 제도별 사회복지지출 현황(증감률) | 186 |
| 〈부표 18〉 제도별 사회복지지출 현황(구성비) | 188 |
| 〈부표 19〉 총사회복지지출 및 순사회복지지출 현황 | 190 |

| | |
|---|-----|
| 〈부표 20〉 총사회복지지출 및 순사회복지지출 현황(증감률) | 194 |
| 〈부표 21〉 총사회복지지출 및 순사회복지지출 현황(구성비) | 196 |
| 〈부표 22〉 연도별 사회복지지출 | 198 |
| 〈부표 23〉 공공사회복지지출(2005) | 200 |
| 〈부표 24〉 법정사회복지지출(2005) | 201 |
| 〈부표 25〉 사회복지지출(2005) | 202 |
| 〈부표 26〉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2005) | 203 |
| 〈부표 27〉 총사회복지지출(2005) | 204 |
| 〈부표 28〉 순사회복지지출(GDP대비, 2005) | 205 |
| 〈부표 29〉 중앙행정부처의 정권시기별 명칭 | 206 |

부도목차

| | |
|--|-----|
| [부도 1] 순사회복지지출 구성도: 추계과정 측면 | 207 |
| [부도 2] 사회적 급여의 범위: 의사결정나무분석 | 208 |
| [부도 3] GDP와 총사회지출 추이 | 209 |
| [부도 4] 재원별 사회복지지출 현황 | 209 |
| [부도 5] 재원별 사회복지지출 현황(구성비) | 210 |
| [부도 6] 총사회복지지출 및 순사회복지지출 현황 | 210 |
| [부도 7] 총사회복지지출 및 순사회복지지출 현황(구성비) | 211 |

요약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래 매년 사회복지지출 (Social Expenditure) 통계를 추계하여 국내에 공표하고 OECD에 제출하고 있음.

- 통계제출은 OECD 회원국으로서의 의무이자 국내 사회복지지출의 추이를 파악하고 국제비교를 통해 국내 사회복지지출의 수준을 파악함.
- 이러한 연구를 매년 수행하는 이유는 신규년도의 생산 및 OECD 작성기준 변경에 따른 대응, 그리고 추계할 수 있는 자료원이나 새로운 생산방법 등의 발견으로 기 제출한 과거통계의 보완 때문임.

○ 최근 OECD는 사회복지지출의 기능별 항목을 변경하고, 새로운 급여를 포함.

- 2003년부터 기존의 13가지 기능별 지출 항목을 9가지로 축소함.
- 2004년에는 공공임대주택 건설비를 노령·장애·기타에 반영함.
- 2006년에는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ALMP)의 구성항목을 재구조화함.
- 2009년에는 법정퇴직금의 포함여부를 둘러싼 지난 2년간의 논의 끝에 작성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함(Adema and Ladaique, 2009).
 - 정년퇴직자의 퇴직금만 노령급여에 포함하고, 자발적 퇴직자와 해고자의 퇴직금은 제외. 다만, 노동시장요인에 의한 해고시 공공재원에 의한 지출만 실업에 포함.
 - 이러한 기준에 따라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은 GDP 대비 약 1.5%포인트

낮아짐(2007년도).

- 또한 OECD는 1980년 이래 20여년 동안 사회복지지출(Social Expenditure)을 제출하였으며 2000년부터는 총사회복지지출(Gross Social Expenditure), 2003년부터는 순사회복지지출(Net Social Expenditure)까지 확대.

□ 본 연구의 목적은 OECD의 작성기준에 따라 한국의 사회복지지출(Social Expenditure)을 추계하여 한국정부 및 OECD에 제공하는 데 있음.

- － 사회복지지출은 공공사회복지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Mandatory private Social Expenditure), 사회복지지출(Social Expenditure), 총사회복지지출(Gross Social Expenditure), 순사회복지지출(Net Social Expenditure)로 구성됨.

2.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

□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는 다음과 같음.

- 2007년도 공공사회복지지출은 72조 9,640억원으로 국내총생산(경상GDP) 대비 7.48%임.
- － 2000년도 5%대에, 2004년도 6%대에, 2006년 이후 7%에 수렴하고 있음.
- － 최근 17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16.5%로 경제성장률(10.2%)보다 높은 속도(1.6배)임.

〈표 1〉 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 추이

(단위: 조원, 경상GDP 대비 %)

| | 1990 | 1995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연평균증가율 | |
|----|------|------|------|------|------|------|------|------|------|------|--------|-------|
| | | | | | | | | | | | 90~07 | 00~07 |
| 금액 | 5 | 13 | 29 | 34 | 36 | 41 | 49 | 56 | 66 | 73 | 16.5 | 14.3 |
| % | 2.91 | 3.33 | 4.74 | 5.18 | 5.04 | 5.29 | 5.97 | 6.42 | 7.30 | 7.48 | - | - |

- 2007년도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은 5조 7,320억원으로 국내총생산(경상GDP) 대비 0.59%임.

－ 2000년도는 기업구조조정 영향으로 7%에, 2003년 이후는 6%대에 머물고 있음.

〈표 2〉 한국의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추이

(단위: 조원, 경상GDP 대비 %)

| | 1990 | 1995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연평균증가율 | |
|----|------|------|------|------|------|------|------|------|------|------|--------|-------|
| | | | | | | | | | | | 90~07 | 00~07 |
| 금액 | 1 | 1 | 4 | 4 | 4 | 4 | 5 | 5 | 5 | 6 | 15.4 | 3.6 |
| % | 0.27 | 0.32 | 0.74 | 0.59 | 0.51 | 0.57 | 0.60 | 0.57 | 0.58 | 0.59 | - | - |

○ 2007년도 사회복지지출은 78조 6,960억원으로 국내총생산(경상GDP) 대비 8.07%임.

－ 2000년도 6%대에, 2004년도 7%대에, 2007년도에 8%에 도달함.

〈표 3〉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추이

(단위: 조원, 경상GDP 대비 %)

| | 1990 | 1995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연평균증가율 | |
|----|------|------|------|------|------|------|------|------|------|------|--------|-------|
| | | | | | | | | | | | 90~07 | 00~07 |
| 금액 | | 15 | 33 | 38 | 40 | 45 | 54 | 61 | 72 | 79 | 16.4 | 13.2 |
| % | 3.18 | 3.65 | 5.48 | 5.77 | 5.55 | 5.86 | 6.57 | 7.00 | 7.88 | 8.07 | - | - |

○ 2007년의 총사회복지지출은 98조 6,500억원으로 요소비용에 의한 GDP의 11.44%임.

－ 총사회복지지출의 주요 급여부문을 백분율로 보면 ‘총공공지출’이 7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법정민간지출’이 5.8%를, ‘총자발적민간지출’이 20.2%를 차지하고 있음.

〈표 4〉 한국의 총사회복지지출 추이

(단위: 조원, 요소GDP 대비 %)

| | 1990 | 1995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연평균증가율 | |
|----|------|------|------|------|------|------|------|------|-------|-------|--------|-------|
| | | | | | | | | | | | 90~07 | 00~07 |
| 금액 | 6 | 23 | 45 | 50 | 54 | 62 | 68 | 76 | 89 | 99 | 17.7 | 11.8 |
| % | 3.70 | 6.35 | 8.47 | 8.80 | 8.60 | 9.11 | 9.21 | 9.83 | 11.06 | 11.44 | - | - |

- 2007년 순사회복지지출은 101조 1,790억원으로 요소 GDP의 11.73%임. 순 사회복지지출이 총사회복지지출(11.44%)보다 0.29% 포인트 높게 나타남.
- － 이는 우리의 사회복지관련 조세감면이 조세부과 보다 0.29%포인트 높다는 것을 의미함.

〈표 5〉 한국의 순사회복지지출 추이

(단위: 조원, 요소GDP 대비 %)

|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연평균증가율 | |
|----|------|------|------|------|-------|-------|-------|--------|-------|
| | | | | | | | | 90~07 | 00~07 |
| 금액 | 50 | 55 | 63 | 69 | 77 | 90 | 101 | 17.9 | 12.4 |
| % | 8.71 | 8.76 | 9.28 | 9.33 | 10.00 | 11.24 | 11.73 | - | - |

3. 국제비교

- 우리의 사회복지지출 중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과 순사회복지지출 OECD평균의 50% 수준이며, 기타의 지출수준은 OECD평균의 약 40%대임.
- － 법정민간 및 순사회복지지출 수준이 높은 이유는 우리나라가 기업복지(법정퇴직금, 출산휴가급여, 유급질병휴가급여)를 중심으로 성장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조세지출이 높기 때문임.

〈표 6〉 5개 종별 사회복지지출의 수준과 국제비교(2005)

(단위: 정상GDP¹⁾, 요소GDP²⁾ 대비 %)

| | 한 국(A) | OECD평균(B) | OECD 평균 대비 한국(A/B) |
|-----------------------------|--------|-----------|--------------------|
| 1. 공공사회복지지출 ¹⁾ | 7.48 | 20.6 | 36.3 |
| 2.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¹⁾ | 0.59 | 1.1 | 53.6 |
| 3. 사회복지지출 ¹⁾ | 8.07 | 21.2 | 38.1 |
| 4. 총사회복지지출 ²⁾ | 11.44 | 27.0 | 42.4 |
| 5. 순사회복지지출 ²⁾ | 11.73 | 23.2 | 50.6 |

□ 순사회복지지출 수준을 OECD회원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11.73%(’07)로 OECD 회원국 평균(23.2%)의 50.6%로 여러 통계 중 가장 높음.

— 이는 정부와 사회의 복지에 대한 노력 총합을 반영하였기 때문임.

□ SOCX 데이터베이스에서 노령연금(SOCX NO.1) 지출과 연금편람(OECD, Pensions at a glance, 2009)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OECD회원 21개국(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공화국,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아일랜드,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 영국, 미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를 유형화하고 각각의 클러스터별 특징과 클러스터별 대표 국가들의 노후소득보장체계를 분석함. 이를 토대로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 선택의 옵션들을 살펴봄.

□ 노후소득보장체계는 크게 사회보험유형과 다층체계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각국이 처한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정책 수단을 사용함으로 인해 5개의 유형(정부지출의존형, 사회보험의존형, 약한 사회보험형, 자발적 부문이 강조된 다층구조형, 형식적인 다층구조형)으로 구분되었음.

□ 한국은 노령급여지출 항목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사회보험유형의 국가들처럼 사회보장체계에서도 노후소득보장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노후소득보장체계에 대한 제도적 비교에서는 형식적으로 다층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남.

- － 이러한 이중적인 위치가 현재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가 가진 한계임.

01

K
I
H
A
S
A

서론

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의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래 매년 사회복지지출(Social Expenditure)통계를 생산 및 제출하고 있다. 사회복지지출은 사회적 위험에 대한 국가의 보장노력을 나타내는 통계로 국내에서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는 수준으로, 국제적으로는 경제규모와 복지욕구에 근거한 사회복지 수준을 평가하는 척도로 이용되고 있다. 실제 사회복지지출은 공공부문과 법정민간부문을 포함하고 있으며 복지국가들은 GDP 대비 약 30%정도를 지출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부문과 법정민간부문 못지않게 자발적민간부문이 큰 국가들도 있어 국가의 복지수준을 사회복지지출로만 비교하는 데 한계가 있다.

최근 OECD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나아가 한 나라의 총체적 사회복지지출 수준을 나타내고자 사회복지지출과 자국의 자발적민간급여를 합한 총사회복지지출(Gross Social Expenditure) 추계를 권유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총사회복지지출에서 사회복지와 관련한 조세제도상의 혜택은 더하고 부담은 공제한 순사회복지지출(Net Social Expenditure)¹⁾이라는 새로운 통계를 개발하여 회원국에 연구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8년에 순사회복지지출 통계의 추계준비를 요구받아 2000년에 처음 제출하였다.

1) Net Social Expenditure란 ‘총사회복지지출’에 사회복지와 관련한 조세제도상의 혜택과 부담을 반영한 통계이다. 이는 마치 총소득(Gross Income)에 조세를 공제한 후의 순소득(Net Income)을 추계하는 것과 같다.

최근 OECD가 복지선진국인 스웨덴, 덴마크와 복지후진국인 미국을 대상으로 추계한 순사회복지지출의 특성을 간략히 살펴보면 사회복지지출에 비하여 국가간의 차이가 현저히 줄어들어 일정수준에서 수렴함을 알 수 있었다. 즉, 국가간 요소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의 차이는 약 13% 포인트로 큰 데 반해 순사회복지지출은 약 4%포인트로 현저히 줄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요소GDP 대비 사회복지지출(2005년)은 스웨덴 35.1%, 덴마크 32.0% 그리고 미국 17.5%로 격차가 크게 나타난 데 반해 순사회복지지출은 스웨덴 29.2%, 덴마크 25.4% 그리고 미국 27.2%로 차이가 줄어드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OECD 주요 국가들의 요소GDP 대비 순사회복지지출은 약 27% 전후 수준임을 알 수 있다³⁾. 이는 각 국가별 복지수준인 사회복지지출에 자발적 민간부문과 조세제도를 반영하면 비슷한 수준으로 수렴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이들 통계는 국내적으로도 매우 필요한 연구이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를 합한 전체의 외형적인 지출규모는 얼마나 될 것인가, 그리고 조세부담에 따른 실질이전소득의 감소와 반대로 조세감면에 의한 실질이전소득의 증가분을 모두 감안한 지출규모는 얼마인가, 나아가 그 수준은 국제적으로 어느 위치인가에 대한 해답을 제공할 기초통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발적민간부문과 조세부문의 추계에서 선행연구와 기초자료가 부족하여 통계 생산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면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통계를 생산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축적되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국제통계의 생산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 시장가격에 의한 GDP에 정부부문(간접세, 정부보조금)을 제외한 요소비용만을 고려한 GDP를 의미한다.
3) 일본(20.7%, 2005)과 한국(9.12%)의 사회복지지출은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데 반해 순사회복지지출은 각각 22.8%(일본, 2005), 11.73%(한국, 2007)로 적어도 일본은 선진국들과 유사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제2절 연구목적 및 내용

본 연구의 목적은 OECD통계생산기준에 따라 그 동안 공공부문 지출과 법정민간 부문 지출을 추계한 ‘사회복지지출’에 자발적민간급여를 추가한 ‘총사회복지지출’과 여기에 사회복지와 관련한 조세제도상의 혜택과 부담을 반영한 ‘순사회복지지출’을 추계하는 데 있다.

이러한 통계들은 복지수준을 총량적 또는 실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계열 통계들으로써 사회복지 지출수준과 한 국가의 복지동향을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OECD국가들과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 특성을 규명하는 데 이용되리라 본다.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장에서는 OECD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회복지지출에 대한 개념과 작성기준, 최근 변경된 작성기준에 대한 논의들을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한국의 사회복지자원에 대한 총체적인 검토를 시작으로 OECD 작성기준에 따른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작성의 개념과 범위, 각 부문별 추계방법에 대해 기술한다. 제4장에서는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추계 결과를 공공사회복지지출, 사회복지지출, 총사회복지지출과 순사회복지지출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제5장에서는 한국의 사회복지수준을 가늠하기 위한 잣대로서 먼저 사회복지지출 측면의 국제비교를 실시하고 다음으로 노령급여지출을 통한 노후소득보장에 대한비교 따른 이러한 국가간 비교는 한국의 사회복지의 현재를 파악하는 데 유용할 뿐만 아니라 향후 나아가야 할 바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주요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제언을 제안하고 연구의 한계점을 제시한다.

제3절 연구방법

본 연구는 크게 국내외 문헌연구,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OECD사무국 관계자와의 사례연구(Case Study), 관계전문가 회의 등의 연구방법에 의하여 진행하였다.

1. 국내외 문헌연구

문헌연구는 국내자료와 국외자료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국내자료는 사회복지관련 문헌을 참고하여 사회복지의 개념과 범위, 제도, 그리고 기존연구 등을 살펴보았다. 특히 사회복지지출에 대한 추계는 80년대부터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순사회복지지출에 대한 기존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다만 순사회복지지출을 구성하는 각 분야별 연구는 일부 있다. 기업복지제도의 실태, 민간부문의 모금활동, 종교계의 사회복지 참여현황, 도시·농촌가구의 조사자료를 이용한 간접세 추계 등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들 연구는 실태에 대한 현황분석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 필요한 지출규모 등에 대한 제시가 부족하다. 특히 사회복지분야의 조세혜택에 대한 규모를 추계한 연구는 미약한 실정이다.

한편 세부적으로 참고한 자료는 각 복지사업별 사업개요와 업무지침서, 통계자료집, 법령집, 그리고 각 단체나 기관의 보고서 또는 내부자료 등의 관련 문헌을 검토하여 제도의 세부내용과 재원의 흐름을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외국자료는 OECD가 최근 발간한 통계작성기준(Adema, 1999; Adema et al., 2009)과 추계자료(OECD, 2009; 2007; 2005; 2001a; 2001b; 1998), 사회복지 관련 외국참고서, 그리고 UN의 국민계정체계(1993), 간접세의 거시자료로 OECD의 Revenue Statistics(2007; 2002; 2000; 1999)를 참고하였다.

2. Bottom-up 방법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는 여러 행정부처에 분산·운영되고 있는 만큼 제도의 특성파악과 자료수집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기초통계자료는 사회복지관련 각 행정

부처의 세입세출예산서와 각 공단의 통계연보(결산서), 여러 관련 기관의 전산자료 분석, 그리고 지방세법과 지방조례에 의한 조세감면 자료가 수록된 행정자치부의 지방세정연감을 사용하였다. 이 중 세입세출예산서와 통계연보는 공표자료를 이용하여 하위단위의 지출항목을 재분석하였다. 즉 공표자료를 세부 분해하여 전체구성을 파악하는 Bottom-up 방법을 사용하였다.

3. 2차자료 수집 및 가공분석

일부 복지제도의 급여를 추정하기 위해 2차자료를 수집하여 가공분석하거나 담당 기관에 분석을 의뢰하여 결과를 얻었다. 먼저 2차자료를 수집하여 가공분석한 것은 정부부문의 공공임대주택의 건설비용(직접현물급여)에 임대수입을 공제한 주거지원 급여, 법정민간부문의 사회복지지출인 산전후휴가급여, 유급질병휴가급여 등이다.

다음 급여내용이 수록된 원자료의 경우 외부유출이 제한되어 있어 사전에 산출방법과 분석형태를 해당기관에 제공한 후 분석결과를 수집하였다. 여기에는 국세청의 법정퇴직금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출산휴가급여 등이 있다. 이렇게 수집된 기초자료는 OECD 추계방법에 따라 기능별 급여주체별로 분류하였다. 이때 기능별 분류를 더욱 명료화하기 위해 사회보험 등의 급여나 정부의 세출항목, 그리고 전산분석자료를 가능한 세분화하여 분류하는 데 노력하였다. 다만 자료수집이 불가능한 분야에 대하여는 자료원을 언급하면서 향후 생산방안을 제시하였다.

4. Survey(조사연구)

조사연구는 사회복지지출의 주요 영역인 취약계층의 교통통신요금의 감면액, 또한 자발적민간부문인 민간모금단체·종교단체의 사회복지참여 실태 등이다.

5. OECD 관계자와의 사례연구(Case Study)

국제기구가 제시하는 통계작성 기준은 개괄적이며 관념적인 경향이 있다. 이는 각 국가간 상이한 제도에 대해 공통의 목표성을 포괄적으로 수용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특징이라고 본다. 즉, 국가간 다양한 사회보장제도에서 지출하는 급여를 국제 비교 가능한 형태로 추계 하고자 공통의 기준을 설정하는 본질의 한계이다. 하지만 통계를 생산하는 연구자로서는 보다 구체적인 작성기준이 필요할 수 밖에 없다.

OECD가 제시하는 사회복지지출이나 순사회복지지출의 개념과 통계작성의 기준 및 예시가 충분하지 못하여 이를 참고로 통계를 생산한다는 것은 선진국과 다른 사회보장 체계를 지닌 우리나라로서는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이 통계산출 과정에서 우리 제도를 각 기능별로 분류하거나 또는 포함여부에 대한 고심스런 내용에 대하여 OECD관계자들⁴⁾과 OECD회원국의 통계생산 연구자들⁵⁾과 Case Study를 병행하였다. 이들 관계자와의 끊임없는 질의와 토의는 OECD 작성기준에 적합한 추계가 달성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6. 관계전문가 회의 및 실무간담회

연구의 방향이나 범위, 추계결과를 검토하기 위해 관계전문가 회의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중요한 과정 중의 하나로 추계의 정확성은 결국 통계의 신뢰성과 국제비교 가능성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관계전문가는 당원의 연구진과 사회복지학과 교수, 보건복지가족부 정책통계팀, 노동부, 행정안전부, 재정경제부, 그리고 한국종교계 사회복지대표자협의회로 구성되었다.

또한 본 연구가 필요로 하는 통계가 생산가능한 기관과의 통계산출 방안에 대한 업무협의와 추계결과에 대한 실무간담회를 활용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통계생산을 용이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추계결과의 한계점이나 향후 생산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었다. 실무간담회 관계자는 주로 업무협의와급여와 관련된 기관들이다.

4) 'OECD 사무국' 사회정책과의 Willem Adema Senior Economist, Maxime LADAIQUE Manager, 교 육지표분석과의 Etienne ALBISER, 고용노동사회부의 David GRUBB 등이다.

5) 독일 연방보건복지부(Federal Ministry of Health & Social Security)의 Dr. Roland Berntsen, Dr. Jörg Peschner,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의 Yukiko M. Katsumata 실장, 그리고 유럽연합의 사회복지계정 통계담당자인 Mr. Arne Kubitzka 등이다.

02

K
I
H
A
S
A

OECD 사회복지지출의 개념과 작성기준

2장 OECD 사회복지지출의 개념과 작성기준

제1 절 사회복지자원의 개념⁶⁾

본 장에서는 한 국가에서 지출되고 있는 사용가능한 사회복지자원의 총량을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사회복지자원의 개념과 유형 및 특성을 규정하고,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를 통해 사회복지자원과 총량 추계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복지자원 총량은 본 연구의 작성기준인 OECD보다 범위가 넓은 것을 밝히며, 본 장에서는 자원총량의 추계방법에 대한 이론적 논의에 초점을 두고 서술하는 만큼 혼동의 여지가 없기를 바란다.

1. 사회복지자원의 개념과 특성

가. 사회복지자원의 개념

사회복지자원(social welfare resources)이란 사회복지(social welfare)와 자원(resources)이라는 두 개의 단어가 결합된 합성어이다. 따라서 이러한 용어의 특성을 고려하여, 어원적 측면에서 두 단어의 개념을 살펴봄으로써 사회복지자원의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사회복지(social welfare)에서 복지(welfare)는 어의적으로 ‘사회구성원 다수가 평안하고 만족스러운 생활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개념에서 핵심은

6) 본 절은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추계(1990~2005)와 자발적민간급여 실태 조사』, 2007의 제2장 제1절 내용(김교성 집필) 일부를 재정리한 것이다.

사회구성원이 평안하고 만족스러운 생활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욕구(needs)의 범주를 어느 정도로 규정하느냐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베버리지 보고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요람에서 무덤까지’와 같은 욕구인식의 틀과 그것을 구체화하여 어떤 자원을 공급할 것인가에 대한 요구 대(對) 자원에 관한 제도적 목록이 욕구의 범주를 나타내고 있다.

한 개인이 살아가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개별적 차원의 욕구(individual needs)는 무한하며 매우 다양하다. 개인적 수준과 범위에 따라 상이한 이러한 욕구들을 일일이 충족시키는 것은 일차적으로 개인의 역할과 책임이다. 하지만 사회적 차원에서 볼 때, 한 사회의 구성원인 개인이 하나의 사회적 개체로써 생존하기 위해서는 인종, 종교, 성별, 계층을 막론하고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수렴되는 기본적(basic) 욕구, 즉 사회적 욕구(social needs)가 존재한다. 이러한 인간의 생존, 성장,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사회적 욕구가 제대로 충족되지 않고 결여되거나 결핍된 상태가 장기간 지속될 때 각종 사회적 문제(social problems)가 발생하고, 이것은 사회의 유지와 발전에 위협적인 요소로 작동한다. 한편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은 다양한 사회적 위험(social risks)에 직면하게 되는데, 한 인간의 전 생애에 걸친 시간적 변화 상태를 의미하는 생애주기(life cycle)에 따라 나타나는 다양한 위험요소인 질병, 장애, 노령, 사망, 실업 등을 의미한다.

한편 사회적(social)이라는 표현은 사회적 인간으로써 경험하게 되는 사회적 욕구와 문제, 그리고 위험을 개인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기보다 사회구성원들의 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구성원들의 집합적 노력에 의해 해결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복지지는 이윤추구와 같은 경제적 동기가 아닌 이타주의와 상부상조, 연대의식과 같은 사회적 동기에 의해 추구된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사회복지란 ‘인간의 사회적 욕구, 문제, 위험을 사회적 차원에서 공동으로 대처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회적 체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자원(resources)이란 사전적 의미에서는 인간의 생존을 위한 의식주를 비롯하여 경제적 생산을 위한 원료와 에너지 등 자연에 의해 주어져 인간을 활동하게 하는 요소를 의미한다. 이는 인간의 삶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물질적, 정신

적, 환경적, 사회적, 인적차원의 자원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이다. 이렇게 다양한 자원들 가운데, 앞서 살펴본 사회복지의 개념을 결합하여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며,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유·무형의 서비스와 물질적 요소를 총칭하여 사회복지자원(social welfare resources)이라 규정할 수 있다.

나. 사회복지자원의 특성

사회복지자원의 범주와 총량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자원이 일반적 의미의 자원과 다른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 특성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자원은 인간에게 효용을 제공할 때 자원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다시 말하면, 자연상태의 자원이 적절한 방식으로 가공되어 인간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며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복지적 목적에 맞게 적절히 사용될 수 있을 때 비로소 사회복지자원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인간에게 효용을 줄 수 없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거나 가공되지 못한다면 현실적 의미에서 사회복지자원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사회복지자원은 양적으로 제한적일 수 밖에 없으며, 그 규모는 한 사회의 생산 및 동원능력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능력은 경제발전의 수준과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둘째, 사회복지자원의 범위와 형태는 당시의 역사성·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는 역사적 산물이며, 자원을 둘러싼 정치적·조직적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사회복지자원이 어떤 형태로, 어느 정도 규모로 사용되는가에 따라 이를 둘러싼 다양한 이익집단의 헤게모니는 크게 변화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사회복지자원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그 개념과 범위가 변화되어 왔다. 예를 들어, 역사적으로 볼 때 자본주의 형성 이전에 복지의 성격은 빈곤층만을 대상으로 하여 매우 잔여적이었으며 자원의 범위 역시 매우 협소했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의 본격적인 시작과 함께 한 소위 복지국가의 발달 단계에서 사회복지의 의미는 보편성을 가지게 되고 가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자원 역시 더욱 확대되었다.

그러나 사회복지자원의 확대가 총체적 차원에서 복지발달로 단선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즉 양적 측면에서 사용가능한 사회복지자원자원의 종류와 양이 증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질적 측면에서 복지발달로 해석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존재한다. 질적 측면을 파악하는 단계에서는 자원의 성격이 어떠한가가 매우 중요하다. 에스핑 앤더슨(Esping-Andersen, 1990)이 탈상품화와 계층화 같은 지표로 복지발달의 성격을 유형화했듯이, 질적 측면에서 복지발달을 보다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구체적 분석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즉 전체적인 총량의 많고 적음을 단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총량을 파악하기 위한 과정을 통해 드러나는 구체적 항목의 내역과 성격, 지출의 정도를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자원은 대체로 영리적 목적의 상품성으로부터 벗어나 비영리성 내지 탈상품성을 띤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자원의 공급주체 가운데 하나인 시장의 범주에 포함되는 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위이지만, 기업이 제공하는 기부 및 후원, 또는 기업복지적 차원에서 제공되는 노동자들에게 제공되는 복지혜택과 법정퇴직금 등은 그 자체로 판매되는 상품은 아니기 때문에 사회복지자원으로 간주된다. 다만, 시장에서 제공하는 사보험 보험금은 이러한 특성의 예외적인 경우이다.

2. 사회복지자원체계

앞서 살펴본 추상적 개념의 사회복지자원이 현실에서 지출되고 있는 총량을 어떻게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까? 이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자원이 현실에서 어떤 형태로 전달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파악해야 하며, 이는 사회복지자원체계(social welfare resources system)에 대한 이해를 통해 가능하다. 체계(system)란 상호의존적이고 역동적인 부문들 간의 유기적 관계로 형성된 일련의 복합체를 말한다. 체계를 구성하는 부분적 요소들은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개별적으로는 완전히 기능하지 못하고 전체로서 작동할 때 완전한 의미와 그 본래의 목적을 비로

소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자원체계란 사회복지자원이 최종적으로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일련의 과정으로 작동하고 있는 현실적 구조를 의미한다. 사회복지자원체계는 크게 최종수요자에게 사회복지자원을 생산하고 이를 전달 또는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공급주체’와 제공되는 ‘자원의 형태’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가. 공급주체에 따른 유형화

공급주체라 함은 사회복지자원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이를 직·간접적으로 전달하는 주체를 모두 포괄하는 의미로 길버트와 테릴(Gilbert & Terrell, 2004)이 정의한 전달체계(delivery system)의 의미를 포함한다. 길버트와 테릴의 전달체계란 서비스의 제공자와 클라이언트를 연결시키기 위한 체계적이고 조직적 장치(arrangements)를 의미하는데, 이는 현실에서는 다양한 제도의 형태로 가시화되어 나타나며, 일반적으로 공공성(公共性)을 기준으로 공적주체와 사적(민간)주체로 구분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공급주체에 따른 사회복지자원의 유형을 보다 세분화하여 정부, 기업, 시장, 제3섹터(the third sector), 공동체의 5가지 형태로 구분하고자 한다.

먼저 공적주체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 대표되는 국가와 공기업 및 공단을 포괄하는 공공기관과 단체를 의미한다. 이러한 부문을 통해 지출되는 자원의 유형에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등의 사회보장제도와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한 공적이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 통신, 문화 등의 공공서비스 이용요금의 감면, 소득공제와 세금감면 등의 조세지출 등이 해당된다.

한편 공급자로서 사적주체는 민간에 의해 운영되는 모든 조직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윤추구의 유무에 따라 영리조직과 비영리조직으로 구분되며, 다시 전자는 기업과 시장으로, 후자는 제3섹터와 공동체로 구분된다.

여기에서 제3섹터(the third sector)란 비정부기구(NGO)와 비영리기구(NPO)를 포함하여 국가와 시장의 영역이 아닌 법인형태의 공식적 조직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구체적으로는 시민단체, 공익재단, 종교단체,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등이 해당되며,

공동체는 법인의 형태가 아닌 비공식적 조직형태를 띠는 가족, 친척, 이웃 등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민간부문을 통해 지출되는 자원의 유형을 살펴보면, 먼저 영리부문에서는 기업에서 제공되는 모든 유형의 기업복지와 사회공헌성 후원 및 기부금, 시장에서 사보험 상품을 통해 지급되는 보험금이 해당된다. 민간 비영리부문에서는 제3섹터를 통해 제공되는 각종 모금과 후원, 사회복지및 성 지출, 자원봉사활동 등과 가족 친척 등에 의해 제공되는 사적 현금이전과 공제회의, 공제급여 등이 있다.

나. 자원형태에 따른 유형화

사회복지자원은 공급되는 형태에 따라서 크게 현금자원과 현물자원, 그리고 그 외의 형태로 구분될 수 있다. 길버트와 테렐(Gilbert & Terrell, 2004)은 사회적 급여(social benefits)를 크게 현금(cash)방식과 재화(goods)나 서비스(services)와 같은 현물(in-kinds)방식, 그리고 그 외의 형태로 증서(vouchers)와 세금공제(tax credits), 권력, 신용 등으로 분류했다.

현금은 급여수급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직접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화폐로 지급되는 형태로, 자원의 소비시점에서 소비행위를 통제할 수 없어 목적효율성이 낮아지는 반면 보다 많은 소비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며, 자원의 전달이 용이하고 비용이 적게 들며, 사회적 낙인감을 유발하지 않는다. 현물방식은 그 반대의 특성을 갖는다. 한편 증서는 현금과 현물방식의 장점을 접목시켜 소비자의 선택과 사회적 통제를 조화시키고자하는 의도에서 구상되었다. 정해진 범위 내에서 일정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주면서 동시에 그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소비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제2절 OECD 사회복지지출의 개념과 구조

1. OECD의 사회복지지출 개념

OECD에서 정의하는 사회복지지출(Social Expenditure)이란 가구와 개인이 복지에 불리한 환경에 처해있는 동안 공적제도에 의해 조달되는 사회적 급여나 재정적 지원이다. 사회적 급여나 재정지원 중에서 특정 재화와 서비스의 직접적인 지급이나 개별 계약 또는 이전은 포함하지 않는다⁷⁾.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사회복지지출의 공급주체는 공공부문이며, 객체는 복지혜택이 필요한 가구와 개인으로 매우 협소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지출의 정의에 따르면 급여는 공적 제도에 의한 기관에 의해서 제공되어야 하므로 가구간 이전이나 개인의 후원 등은 사회복지지출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사회지출은 근로에 대한 임금을 포함하지 않으며 교섭에 의한 임금도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업에서 제공하는 교통수당, 휴일수당, 보너스 등은 사회지출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회적 급여는 현금으로 제공되기도 하고 사회서비스와 사회적 목적을 가진 조세 수단으로 제공되기도 한다. 현금급여의 대표적인 예로는 연금과 출산수당, 공공부조에서 제공되는 생계급여 등이 있으며, 사회서비스의 대표적인 예로는 보육 서비스와 노인 및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돌봄서비스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조세 수단의 대표적인 예로는 유자녀 가족에 대한 조세감면혜택(한국에는 부녀자공제 및 자녀교육비 공제 등이 있음)과 사적 의료보험 혹은 사적연금저축에 대한 세금공제 등이 있다.

다음으로 총사회복지지출(Gross Social Expenditure)이란 “사회복지지출(Social Expenditure)에 자발적민간부문을 포함한 총괄적인 사회적 급여(Social benefits)”를

7) “Social expenditure is defined as the provision by public institutions of benefits to, and financial contributions targeted at, households and individuals in order to provide support during circumstances which adversely affect their welfare, provided that the provision of the benefits and financial contributions constitutes neither a direct payment for a particular goods or service nor an individual contract or transfer. Such benefits can be cash transfers, or can be the direct(“in-kind”) provision of goods and services(OECD, 2006)”

의미한다. 여기서 총(Gross)의 뜻은 자발적민간부문을 포함하고 사회보장 수급자가 수령하는 급여인 이전소득 또는 근로소득의 소득세와 소비생활에서 부담하는 간접세 부분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즉 총사회복지지출은 사회복지지출에 비해서 범위가 넓어지고 공급주체에 따른 구분도 가능해진 장점이 있으나 이들 자료는 조세 전 지출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제 복지 수준을 가늠하는 데는 한계도 있다. 왜냐하면 각 부문별 복지 정책의 경향과 변화를 나타내기에는 용이하지만 조세시스템이 어떻게 사회보장체계에서 공·사지출에 영향을 끼치는가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의식에 OECD는 순사회복지지출(Net social expenditure)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순사회복지지출이란 “정부의 사회복지 차원의 노력은 공공과 민간의 사회적 현금급여와 서비스 제공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조세제도를 통하여 사회정책 목표를 실현하려는 노력에 의해 좌우된다. 따라서 税前 총사회복지지출 측면에서 복지효과 측정의 기준은 사회적 목적의 조세혜택(예: 아동에 대한 조세감면혜택)과 급여소득에 대한 직접세, 급여수령자의 소비에 따른 간접세와 같은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총 사회지출에서 급여범위와 사회복지와 관련한 조세제도상의 혜택과 부담만 추가한 것이 순사회복지지출이다.

순(税後)사회복지지출이란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사회복지부문에서의 조세정책을 구사하는 재정적인 노력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복지수혜자의 입장에서 보면 국가경제의 생산량 중 그들이 배분받는 비중으로 볼 수 있다⁸⁾. 순사회복지지출은 국가간 비교를 위해, 정부가 사회복지 차원의 재분배(re-allocate) 노력을 얼마나 기울이는가를 평가하기 위해 가장 빈번히 사용하는 지표 중의 하나이다.

OECD가 순사회복지지출을 추계하는 주된 목적은 사회복지에 필요한 국민에게 실제 돌아가는 몫이 국내총생산(요소GDP) 중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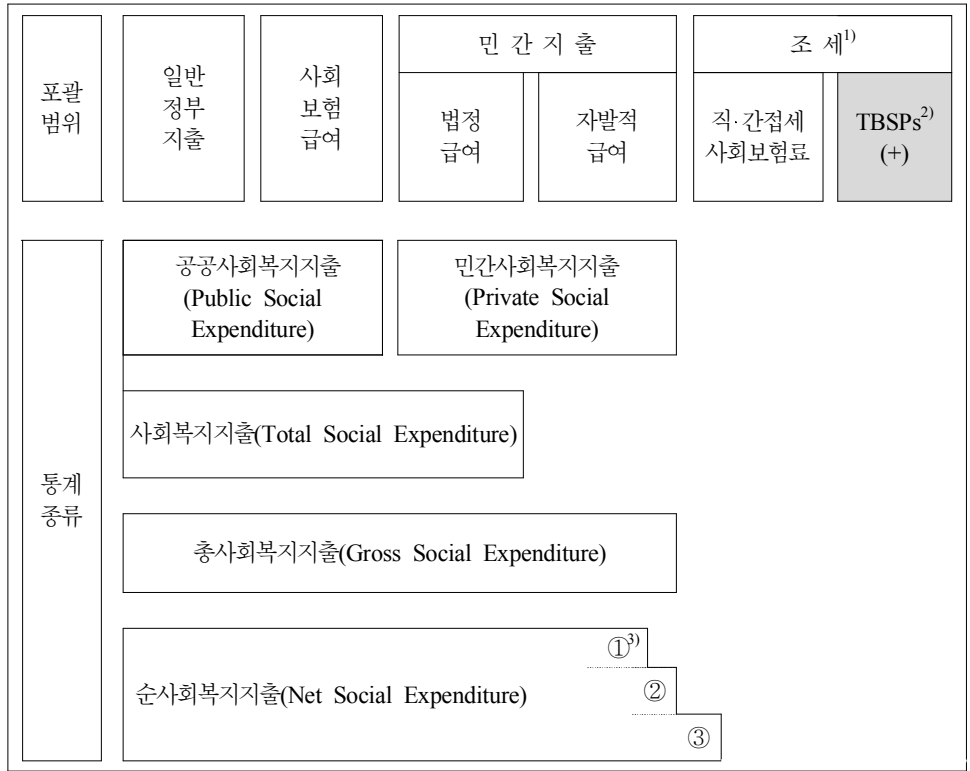
8) “Social effort is not just determined by the prevalence of public and private social cash benefits and services, but also by the extent to which governments pursue social policy objectives through the tax system. To measure this effect on gross(before tax) social expenditure indicators, account has to be taken of tax advantages for social purposes(e.g. child tax allowances): direct taxation of benefit income: and, indirect taxation of consumption by benefit-recipients. From the government perspective, “net(after tax) public social expenditure” gives an impression of budgetary efforts in the social field after tax. From the perspective of benefit-recipients “net total social expenditure” gives an impression of the proportion of an economy's domestic production to which they lay claim(OECD, 2001a)”

를 포괄적으로 파악하는 데 있다(Adema, W., 1999). 이는 한 국가의 복지 수준을 순지출로 보아야 한다는 데 근거가 되기도 한다.

총사회복지지출과 순사회복지지출 중 어느 것이 더 클 것인가는 그 나라의 조세 제도에 따라 다르다. 즉, 사회보장수급자가 부담하는 조세부담금액이 조세경감액(Tax Breaks for Social Purposes: 이하 TBSPs, 조세혜택)⁹⁾보다 크면 순사회복지지출이 작을 것이다.

[그림 2-1]은 사회복지지출의 종류와 범위에 대한 이해를 도시키고 있다.

[그림 2-1] 사회복지지출 통계의 종류별 포괄범위 비교



주: 1) Tax: 이전소득자가 부담하는 직·간접세임.
 2) TBSPs(Tax Breaks for Social Purposes): 비영리법인재산·근로자소득공제·지방세감면대상자·장애인용의료용구관세 등에 대한 조세혜택임.
 3) ①은 Tax > TBSPs, ②는 Tax = TBSPs, ③은 Tax < TBSPs 임.

9) 조세혜택(Tax Break with a Social Purpose)이란 i) 사회 지출로 분류될 수 있는 이전 급여와 동일한 정책적 기능을 수행하거나, ii) 사적 이전을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을 때 정부가 개인에게 조세의 감면(reduction), 면제(exemption), 공제(deduction)와 연기(postponement) 등의 통해서 지원하는 사회적·재정적 혜택을 뜻한다(OECD, 2005c:24).

[그림 2-1]에서 보듯이 사회복지지출(Social Expenditure)은 공공사회복지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에 법정민간지출(Mandatory Private Social Expenditure)을 더한 것이며, 총사회복지지출(Gross Social Expenditure)은 사회복지지출에 자발적민간지출(Voluntary Private Social Expenditure)을 더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순사회복지지출(Net Social Expenditure)은 총사회복지지출에 조세혜택은 더하고 이전소득자 등이 부담하는 직·간접세는 공제한 것이다. 이 때, 조세혜택의 총액이 조세징수총액(직·간접세의 합)과 같다면 총사회복지지출과 순사회복지지출은 같을 것이다(그림 2-1에서 ②부분). 반면에 조세부담이 조세혜택보다 크다면, 그 차이만큼 왼쪽으로 이동(그림 2-1에서 ①부분)하게 되어 결국 순사회복지지출은 총사회복지지출보다 작게 될 것이다. 그 반대의 경우는 그 차이만큼 오른쪽으로 이동(그림 2-1에서 ③부분)하게 되므로 순사회복지지출은 총사회복지지출보다 크게 될 것이다.

OECD가 사회복지지출, 총사회복지지출, 그리고 순사회복지지출을 구성하는 각 포괄범위에 대하여는 [그림 2-1]과 같이 설정하고 있으나 각 부문간 이중계산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어 향후 일부 통계작성 방법의 지침이 마련되리라 본다.

또한 [그림 2-1]에서 살펴본 순사회복지지출의 포괄범위를 추계과정 측면에서 도시하면 [부도 1]과 같다. 특히 본 연구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교통·통신요금의 감면’은 비근로연계의 법정민간지출로 분류하여 도시하였다.

참고로 OECD가 일부 회원국에 대하여 이들 통계를 추계한 결과 순사회복지지출이 총사회복지지출보다 낮았다. 우리나라는 조세부담이 조세혜택보다 낮아 순사회복지지출이 총사회복지지출보다 높게 나타났다.

2. OECD의 사회복지지출의 구조

여기서는 사회복지지출의 종류별 Database(SOCX)구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사회복지지출은 사회적 목적에 따라 급여를 9개의 정책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즉 노령, 유족, 근로무능력, 보건, 가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실업, 주거, 그리고 기타로 구성되어 있다. <표 2-1>은 공공부문과 법정민간부문 프로그램의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보여준다(상세한 내용은 부표 1참조).

<표 2-1> 공공 및 법정민간지출의 데이터베이스(SOCX) 구조

| | |
|---|---|
| 1. 노령(OLD AGE) | 5. 가족(FAMILY) |
| 현금급여 | 현금급여 |
| 연금 | 가족수당 |
| 조기퇴직연금 |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
| 기타 현금급여들 | 기타 현금급여들 |
| 현물급여 | 현물급여 |
| 돌봄서비스/가사보조서비스 | 보육/가사보조서비스 |
| 기타 현물급여들 | 기타 현물급여들 |
| 2. 유족(SURVIVORS) | 6.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ACTIVE LABOUR MARKET PROGRAMMES) |
| 현금급여 | 고용서비스와 행정 |
| 연금 | 노동시장훈련 |
| 기타 현금급여들 | 청년에 대한 지원 |
| 현물급여 | 고용보호지원 |
| | 장애인 고용 지원 |
| 3.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INCAPACITY-RELATED BENEFITS) | 7. 실업(UNEMPLOYMENT) |
| 현금급여 | 현금급여 |
| 장애연금 | 실업보상/해고수당 |
| 연금(산업재해) | 노동시장 환경으로 인한 조기퇴직 |
| 유급상병휴가(산업재해) | 현물급여 |
| 유급상병휴가(기타 상병수당) | |
| 기타 현금급여들 | 8. 주거(HOUSING) |
| 현물급여 | 현물급여 |
| | 주거보조 |
| 4. 보건(HEALTH) | 기타 현물급여들 |
| 현물급여 | 9. 기타(OTHER SOCIAL POLICY AREAS) |
| | 현금급여 |
| | 소득보조 |
| | 기타 현금급여들 |
| | 현물급여 |
| | 공공부조 |
| | 기타 현물급여들 |

자료: OECD, 2007, p.12.

각 정책영역별로 살펴보면 현금과 현물로 분류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보건(SOCX No 4)과 주거(No 8)는 현물급여만, 적극적노동시장프로그램(No 6)은 현금과 현물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 9개의 정책 영역별 개념은 아래와 같다(OECD, 2009)

1) 노령(Old-age)

노령은 노령연금에 대한 모든 현금 지출(일시금)을 포함한다. 노령현금급여는 노동시장에서 은퇴한 사람들에 대한 소득을 제공하거나 ‘법적인’ 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하거나 노령연금 기여의 필수요건을 완수한 사람들의 소득을 보장한다. 이러한 범주는 또한 조기은퇴연금을 포함한다. 조기은퇴연금이란, 연금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법적인’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시장 환경 때문에 조기퇴직을 하는 사람들은 실업으로 분류되고 노령에서는 배제된다. 노령은 현금급여하에서 부양자가 있는 노령연금 수급자에게 지불되는 부양자에 대한 보조금을 포함한다. 노령은 또한 돌봄서비스, 재활서비스, 가사보조서비스와 다른 현물 급여 등 노인서비스에 관한 지출을 포함한다. 그것은 또한 기관에서 시설보호에 이용되는 지출(예를 들면, 노인 그룹홈 운영 경비)을 포함한다.

2) 유족(Survivors)

많은 국가들은 배우자나 부양자가 사망한 사람들에게 공적 영역에서 급여(현금 혹은 현물)를 제공하는 사회지출 프로그램을 가진다. 이러한 정책영역에서 지출은 유족으로 그룹핑된다. 유족급여는 크게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로 구분한다. 현금급여에는 유족급여 수급자의 수당과 부양자에 대한 보조금과 기타 현금급여가 있고 현물급여에는 장제비와 다른 현물급여가 있다.

3)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Incapacity-related benefits)

근로무능력 급여는 노동시장에 참여하다가 장애를 입어 완전한 혹은 부분적인 무능력을 가질 때 지급하는 현금급여로 구성된다. 장애는 선천적일 수도 있고 사고자 질병의 결과일 수도 있다. 유급질병휴가, 특별 수당과 연금과 같은 장애 관련 지급

금 등 산업 재해와 질병으로 인한 지출은 유급질병휴가(occupational injury and disease) 항목에 포함된다. 질환으로 인한 일시적인 근로무능력으로 야기된 소득의 상실과 관련한 현금급여는 유급질병휴가(other sickness daily allowances)에 포함된다. 그러나 부양 아동의 질병이나 부상과 관련하여 지급된 급여는 가족 현금 급여에서 기록하므로 이 항목에서는 제외한다. 의학적인 보호에 대한 공적인 지급금 전체는 보건에서 기록된다. 이 항목에는 또한 돌봄서비스와 재활서비스, 가사보조서비스와 다른 현물 급여 등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관련 지출이 포함된다.

4) 보건(Health)

보건정책영역에서 사회지출통계는 OECD Health Data의 자료를 이용한다. 보건부분의 공공지출은 모두 포함되는데, 개인 서비스와 집단보건의료서비스, 투자 등이다. 이들 항목에는 입원환자요양서비스와 보행의료서비스와 제약품에 관한 지출이 포함된다. 보건지출에서 공공기관의 용자 상환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질병과 관련된 현금급여는 상병급여에 포함된다. 자발적 민간 보건지출은 재분배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민간의료플랜의 수급자에 대한 급여만 추정한다(이러한 민간의료보험플랜은 주로 고용에 기반하거나 조세 혜택이 있음).

5) 가족(Family)

이 항목은 가족을 지지하는 지출을 포함한다. 이 지출은 종종 자녀를 양육하는 비용과 다른 부양자의 지원과 관련된 비용과 연관된다. 현금급여에는 가족수당과 산전후와 육아휴직 관련 지출, 기타 현금 급여들이 포함되고 현물급여에는 돌봄서비스와 가사보조서비스, 기타 현물급여들이 포함된다.

6) 적극적노동시장프로그램(Active labour market programmes)

적극적 노동시장프로그램은 수급자의 고용상황 개선이나 그들의 소득능력을 증가시키는 활동들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지출을 포함한다. 이러한 항목은 공적인 고용서비스와 행정, 노동시장 훈련, 학업에서 직장으로 이동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특별 프로그램, 실업자나 다른 사람들(아동과 장애인 제외)의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고용을

촉진하는 노동시장 프로그램에 관한 지출을 포함한다.

7) 실업(Unemployment)

이 항목은 실업자에게 지급되는 모든 현금 지출을 포함한다. 현금급여에는 실업자에 대한 소득보상과 해고수당이 포함된다. 해고수당은 그들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기업 때문에 고용이 중단되거나 임금이 삭감된 사람들에게 공공자원에서 급여를 지급할 때만 해당된다. 또한 급여가 퇴직이나 다른 노동시장정책의 사유로 ‘법적인’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연금처럼 수급자에게 지급될 때, 노동시장적 이유로 인한 조기은퇴 항목에 포함된다. 이 외에도 현물급여가 있다.

8) 주거(Housing)

이 항목에 기록되는 지출항목은 임대료 보조와 개인에게 주거비용을 보조하는 다른 급여를 포함한다. 이는 임대주택에 배정된 사람들에게 대한 직접적인 공공 보조를 포함한다(노르웨이에서 주택 소유자가 그의 집에 살 때에만 제공). 왜냐하면 여기에서 급여는 관습적으로 현물급여로 분류되는 ‘배정된’ 현금 급여와 관련되기 때문에 포함된다. SOCX는 또한 노인과 장애인, 피해자들에게 즉시적으로 제공하는 직접적인 현물 주거 급여는 다른 영역에서 각각 포함한다(노령, 장애관련, 기타 항목에서 각각).

모기지론, 공사비용 보조, 공공시설 비용에 대한 보조와 같은 다른 형태의 주거 지원은 사회적인 속성을 가질 수 있지만 그건 시설이 저소득 가구에 직접적으로 제공될 때에만 포함된다. 그러나 그러한 지원을 측정할 때의 방법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는 없다. 따라서 현재로는 그런 주거 지원은 SOCX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원은 상당할 수 있다.

9) 기타 사회정책(Other social policy areas)

이 항목은 다양한 이유로 관련 프로그램의 범위에서 배제된 사람들에게 임시적으로 제공되거나 다른 급여들이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제공되는 지출을 포함한다. 이민자와 탈북자, 토착민에 대한 사회복지지출은 이 항목에서 각각 분리되어 기

록된다. 마지막으로 다른 항목에 분류되지 않는 사회복지지출 역시 이 항목의 기타에 포함된다.

다음으로 자발적 민간부문의 지출구조는 <표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령,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 보건, 그리고 기타급여로만 분류되고 있다. 이는 재정 할당의 성격이나 범위가 위의 네 가지 영역에 국한되기 때문이다. 자발적 민간부문의 지출 구조는 공공 및 법정민간지출에 비해 단순화된 구조를 보여준다. 이 중에서도 특히 노령부문의 자발적민간부문의 지출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있다.

<표 2-2> 자발적 민간지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조

-
- 1. 노령(OLD AGE)
 - 이전 민간영역에서 근무한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연금
 - 이전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연금
 - 3.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INCAPACITY-RELATED BENEFITS)
 - 4. 보건(HEALTH)
 - 9. 기타(OTHER SOCIAL POLICY AREAS)
-

자료: OECD, 2007, p.12.

끝으로 순사회복지지출의 산출과정은 <표 2-3>과 같다. 먼저 조세의 부과과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순사회복지지출의 추계는 총공공지출(1)과 총법정민간지출(7) 그리고 총자발적민간지출(10)에 각각 직접세와 사회보험료, 간접세를 공제한다. 이 때 각 부문별 지출 중 조세가 부과되는 현금급여만 추계에 포함하고 현물급여는 제외한다¹⁰⁾.

특히 정부가 생활안정과 사회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회적·재정적 조세 혜택(T1, T2)은 ‘현금급여적 조세혜택’과 ‘민간부문의 조세혜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T1은 근로가구 중 아동·노인·장애인이 있는 가구와 여성가구주 등에 대한 조세감면이다. 이 때, 직접세 계산에 반영된 현금급여는 TBSPs에서 제외한다. T2는 민간급여와 같은 효과가 있는 지원금 또는 시설에 대한 TBSPs이다. 예를 들어 기업의 복지지출에서 법인세 감면에 대한 조세혜택 등이 있다. 이렇게 구한 각

10) 현물급여는 정부나 민간의 사회복지서비스로 그 범위는 보건, 복지, 노동, 교육, 의료서비스 등이다.

부문별 세부항목의 세 가지 부문 - 순공공지출(6), 순법정민간지출(6), 그리고 순자발적민간지출(11) - 의 총합에서 민간부문의 조세혜택(T2)을 제외한 것이 바로 순사회복지지출이다.

민간부문의 조세혜택(T2)은 순공공지출(6)을 추계하는 과정에는 더하지만 순사회복지지출(13)을 계산할 때에는 공제하고 있다. 이는 이중계산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예로서 기업의 복지지출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들 수 있다. 이미 기업의 복지지출은 총자발적민간지출(10)에 포함되어 있으며, 기업이 정부로부터 법인세출은 받을 때 둘을 동시에 포함하면 이중계산이 된다. 본 연구의 구체적 추계과정은 제4장 제3절을 참고하기 바란다.

〈표 2-3〉 순사회복지지출의 산출구조

| 부 문 | 가 감 | NO. | 산 출 구 조 |
|------------------|-----|-----|--|
| 공 공 부 문 | — | 1. | 총공공지출(직접) 직접세와 사회보험료 |
| | — | 2. | 순공공지출(현금형태) 간접세 |
| | + | 3. | 순공공지출(직접) |
| | — | T1 | 현금급여적 조세혜택(TBSPs) ¹⁾ 간접세 |
| | + | 4. | 순TBSPs(현금형태) |
| | | T2 | 민간부문의 조세혜택(TBSPs) ²⁾ |
| | | 5. | 순TBSPs(연금 제외) |
| | | 6. | 순공공지출(경상)[3+5] |
| 민 간 부 문 | — | 7. | 총법정민간지출 직접세와 사회보험료 |
| | — | 8. | 순법정민간지출(직접) 간접세 |
| | | 9. | 순공공·법정지출[6+8] |
| | — | 10. | 총자발적민간지출 직접세와 사회보험료 |
| | — | 11. | 순자발적민간지출(직접) 간접세 |
| | | 12. | 순민간지출[8+11] |
| | | 13. | (총)순사회복지지출[6+12-T2] ³⁾ |

주: 1) 조세혜택제도(TBSPs)의 한 유형으로 근로가구 중 아동·노인·장애인이 있는 가구와 여성가구주 등에 대한 조세감면임.

2) 조세혜택제도(TBSPs)의 한 유형으로 민간급여와 같은 효과가 있는 지원금 또한 시설에 대한 조세감면임.

3) T2의 공제는 이중계산을 피하기 위함.

자료: Adema & Ladaigue, 2009: 46.

제3절 OECD의 사회복지지출의 작성기준

1. 재원범위와 급여요건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의 재원범위는 순수공공부문과 순수민간부문의 양극단 사이에 존재하게 된다. 이들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으로는 첫째, 사회적급여인가? 둘째, 누가 재원을 부담하는가? 셋째, 누가 서비스를 제공 또는 운영하는가? 이러한 측면에서 재원범위를 분류하고 있다.

OECD가 요구하는 사회복지지출의 재원범위는 순수공공급여, 공공급여, 그리고 민간급여로 하고 있으며, 순수민간급여는 제외하고 있다(표 2-4 참조). 순수민간급여란 사회적 급여 성격이 없거나 있어도 개별적 계약으로 재원과 제공(운영)이 전적으로 민간부문에 의해 이루어지는 형태를 의미한다. 그러나 오늘날 정부로부터 세제혜택 등을 받는 부분이 확대되면서 이러한 형태는 차츰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서 사회적 급여라 하면 사회적 목적을 가진 급여로 공식화된 조직이 지출하는 재분배적·무상거래적 성격을 가진 급여를 말한다. 여기서 공식화된 조직은 일반정부(사회보험기관 포함), 고용주, NPO, 그리고 사회적 위험을 가진 특정집단의 공제회 등이 해당된다. 다만, 사회적 목적을 가진 급여라 할지라도 시장가격에 기초한 개별적 계약의 급여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

〈표 2-4〉 사회복지재원 형태와 범위

| 형 태 | 순수공공급여 | 공공급여 | 민간급여 | 순수민간급여 |
|-----------|--------|-------|-------|--------|
| 사회적급여 여부 | ○ | ○ | ○ | × |
| 재 원 부 담 | 공공 | 공공/민간 | 공공/민간 | 민간 |
| 제 공 주 체 | 공공 | 공공 | 민간 | 민간 |
| 본 연구포함 여부 | ○ | ○ | ○ | × |

주: ○표는 포함, ×표는 불포함

본 연구에 포함되는 사회적 급여는 사회적 목적을 가진 공공급여와 민간급여를 포함하되 시장가격에 기초한 개별적 위험에 대한 민간급여와 비사회적 급여는 제외하고 있다. 이에 대한 흐름은 [부도 2]의 의사결정나무분석을 통해 나타내고 있다.

의사결정나무분석으로 볼 때 ‘비사회적 급여(1)’은 뿌리마디에 해당하며 ‘개별적 민간급여의 비사회적 급여(2)’는 자식마디에 해당한다. 의사결정나무분석이란 의사결정 규칙(decision rule)을 나무구조로 도표화하여 분류와 예측을 수행하는 분석방법이다. 이 방법은 분류 또는 예측의 과정이 나무구조에 의한 추론규칙(induction rule)에 의해서 표현되기 때문에, 다른 방법들(판별분석, 회귀분석 등)에 비해서 연구자가 그 과정을 쉽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연구자는 이러한 나무구조로부터 어떤 급여가 사회적 급여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어떤 급여가 해당되지 않는지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가. 공공급여

공공급여(public benefits)란 일반정부(사회보험기관 포함)에 의해 재원이 조달(지출 포함)되고 급여(또는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사회적 급여를 말한다. 예로서 일반정부의 사회복지·보건·노동관련 지출과 사회보험의 제 급여를 들 수 있다.

나. 민간급여

민간급여(private social benefits)란 급여와 재원이 민간부문에 의하여 이루어지거나 또는 급여는 민간부문에서 재원은 공공과 민간에 의해 부분적으로 충당되는 형태를 말한다. 이 때 급여는 사회적 보호(social protection)와 재분배적 성격을 가진 사회적 급여로 이 경우 사회적(social)은 순수민간(purely private)에 대비되는 용어이다. 그러나 사회적 목적을 가진 지출이라 할지라도 시장가격으로 급여되는 계약이나 보험은 아니어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비사회적(not social)이라고 보아 본 급여에서 제외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예로 가구간 이전지출을 들 수 있다 (Adema, W., 1999: 9).

순사회복지지출 추계를 위한 재원의 요건을 다시 정리하면, 사회적 목적을 가진 급여이어야 하며 지출주체는 일반정부(사회보험기관 포함), 고용주, NPO, 공제회 등 다양하다. 다만, 사회복지지출은 무상거래(unrequited)의 성격을 갖고 있어 시장가격에 기초한 개별적 계약이나 보험관련 지출은 제외하고 있다.

1) 법정민간급여(Mandatory private social benefits)

법정민간급여는 경제행위자(대체로 고용주)들이 민간보험 등을 통하여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되어있는 급여를 의미한다. 표면상 사회복지 재원 및 운영이 민간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부로부터 세제상의 혜택 또는 재정적 지원을 받으며 정부의 규제를 받는 부문이다. 최근 복지국가의 발전과 함께 재원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혼합된 ‘제3섹터’와 구별이 어려워지고 있다. 정부가 급여수준, 급여대상(coverage), 급여기간 등의 규정에 있어 관여하지만, 규제의 정도는 프로그램에 따라 상이하다.

OECD 회원국의 법정민간급여를 예로 살펴보면 덴마크, 스웨덴, 독일, 영국 등에서는 정부가 고용주에게 일정기간 동안 상병급여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민간보험에 의한 산재급여의 제공도 강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법정퇴직금, 출산휴가 급여, 그리고 상병휴가기간 동안의 유급급여가 있다.

또한 취약계층을 위한 교통·통신요금의 감면(또는 무료)을 들 수 있다. 지금까지 법정민간지출에 포함하지 않았으나 금년 연구부터는 포함하였다. 그 이유는 그 동안 OECD가 사회복지지출의 통계작성 기준에 장애인 등에 대한 교통·통신요금 등의 감면은 포함하지 않고 있었으나 순사회복지지출을 추계하면서 이를 포함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법정민간 부문으로 분류한 이유는 이러한 교통·통신요금감면혜택을 정부가 법률¹¹⁾로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법정민간급여라 보고 있다. 다만, 서비스제공주체와 재원부담주체, 그리고 운영주체가 모두 민간부문인 경우도 있고 일부만 민간부문인 경우도 있다. 요금할인제도를 강제하는 관련 법률을 고려하지 않으면 전자는 자발적민간급여로, 후자는 법정민간급여로 볼 수도 있으나 법적 강제화라는 현실을 볼 때 후자로 볼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이 제도는 사회복지지출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여타 회원국가와 달리 정부가 법률로 강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2) 자발적 민간급여(Voluntary private social benefits)

자발적 민간급여는 공적 전달체계 외부에서 제공되는 민간급여로 법적으로 명문

11) 관련 법률은 노인복지법(제26조)과 장애인복지법(제27조) 등 8개의 법률과 그 외 2개의 규칙들이 있다. 이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제3장 제1절 3)항을 참고하기 바란다.

화되어 있지 않으며 사회복지 재원 및 운영이 정부의 지원 없이 주로 고용주나 NPO에 의해 이루어지는 부문을 의미하고 있다. 이러한 자발적민간급여는 재분배의 성격을 갖고 있어야 하며 시장가격으로 지급되는 계약이나 보험은 제외하고 있으며 비법정 민간사회급여는 대부분 이 범주에 포함된다.

하지만 종종 정부도 조세제도를 통하여 자발적민간급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조세혜택이 민간연금에 주로 적용되지만, 건강보험에도 고려되고 있다. 또한 자선기관에 대한 공공지원은 세금공제나 자선기관의 활동에 대한 직접적 자금지원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유럽에서의 자발적인 고용연계 급여는 대체로 고용주와 노조간의 단체협상에 근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개별기업 단위이거나 또는 산업별, 부문별로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사회급여를 명문화하는 근로계약(labour contracts)은 국가적 차원에서 적용될 수 있다. 나아가 자발적민간급여에는 단체협상의 일부로 마련된 것뿐만 아니라 고용주가 자발적으로 지급하는 급여도 포함하는데, 급여를 지급하는 대상은 모든 피고용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특정한 일부의 피고용인 집단(예를 들어 사무직에게만)에게만 적용될 수도 있다.

OECD 회원국의 자발적민간급여를 예로 보면 벨기에, 덴마크, 아일랜드, 네덜란드, 그리고 영국은 단체협상이나 직역연금과 관련된 고용주 공급의 연금을 들 수 있다. 특히 덴마크의 민간연금급여는 보충적 고용관련 급여이다. 그 외 자발적민간급여의 종류로는 퇴직수당(severance pay), 보충적 실업수당, 상병급여, 그리고 출산급여(maternity pay)와 육아휴직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민간모금(공동모금 등), 기업의 복지재단, 고용주의 자발적급여가 있으며 주지하다시피 개인연금이나 개인생명보험은 제외하고 있다.

다. 조세의 부과와 혜택

정부는 조세제도를 통해 조세를 부과하기도 하고 조세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사회정책적 목표를 실현하기도 한다. 전자는 이전소득자 등이 부담하는 직접세와 간접세이며 후자는 ‘사회적 목적을 위한 세금우대(Tax Breaks for Social Purposes: 이하 TBSPs)’제도이다²⁾.

순사회복지지출 추계에 있어 TBSPs는 대체로 두 가지로 분류된다. 하나는 연금 기여에 따른 감세 또는 환급하는 세금우대(Tax breaks for pension)이며 다른 하나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급여나 개인 혹은 기업이 기부한 것에 대한 세금우대(TBSPs on “current” private social benefits)이다. 정부는 TBSPs를 통하여 사회복지정책을 추구하며 결국 이는 공공예산에 대한 손실(cost)로 간주된다. 이를 정부 입장에서 보면 조세혜택만큼 세수가 줄고, 그만큼 정부지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현금급여와 같은 효과로 보는 것이다.

2. 최근 변경된 작성기준: 법정퇴직금

최근 OECD 사무국에서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법정퇴직금의 성격을 명확히 규명하고 국가간 비교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기존의 OECD 사회복지지출 추계의 작성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법정퇴직금 지출은 실업(SOCX NO.7)에서 노령(NO.1)으로 분류가 변경되었다(Adema & Ladaique, 2009). 법정퇴직금은 이탈리아와 일본, 한국의 3개국에만 남아있는 제도이다.

OECD의 사회복지지출에 대한 정의에 따르면 근로에 대한 보수는 엄격하게 배제되므로 휴일수당, 교통비와 보너스 등은 데이터베이스에 포함하지 않았다. 현재 노동에 대한 보수를 사회복지지출에서 제외한다는 데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과거 근로에 대한 보수나 후불임금”의 성격을 지닌 연금을 사회복지지출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사실상 연금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기여로 재원이 조달되는 후불임금이라는 측면에서 논쟁의 소지가 있었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이유로 연금이 사회복지지출에서 배제된다면 OECD만이 아니라 ILO와 Eurostat에서도 연금은 사회복지지출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연금을 사회복지지출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은 결국 관습적으로 은퇴 연령 이상의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연금은 - 이전에 근무했던 기간 동안 고용주에 의해 재원이 조달될 때 - 사회복지지출에 포함시키기로 국제기구들(OECD, ILO,

12) TBSPs란 “사회급여로 분류되는 이전급여(transfer payments)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민간급여를 촉진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조세혜택을 의미하는 것으로 세금감면(reduction), 면세(exemption), 공제(deduction), 그리고 납기연장(postponements) 등을 들 수 있다”(OECD, 1998).

Eurostat)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최근의 논의는 연금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 다른 지출에 관한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저축은 은퇴를 위한 것이지만 이 저축의 사용처가 어느 범위까지인지 명확하지 않다. 이와 유사하게 생명보험저축은 은퇴 후의 삶을 위해 적립되지만 실제로 은퇴 이후에 저축을 인출하는지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가 유용하지 않다. 이러한 논리로 일반적인 저축과 생명보험저축은 사회복지지출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나 법정 은퇴연령에 접근했을 때 퇴직금이 지급된다면 SOCX의 노령 항목에 포함할 수 있다. 반면에 퇴직금이 은퇴 목적이 아닐 때는 SOCX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퇴직금이 고용주와 피고용인 사이의 고용 관계가 중지될 때 지급되고 고용 관계의 중지는 자발적일 수도 있고 해고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근거에 따라 OECD는 사회복지지출을 추계함에 있어 은퇴시 받는 퇴직금은 연금과 유사한 은퇴수당으로 취급하는 반면에 은퇴 연령 미만의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법정퇴직금은 임금의 분할된 지급으로 고려한다. 다만, “그들 자신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기업의 상황에 의해 경제활동이 중단되거나 해고당한” 근로자들에게 공적재원으로 조달되어 지급되는 “일시해고수당(redundancy compensation)”은 OECD 노동시장정책데이터베이스와 SOCX에 포함한다(Adema and Ladaique, 2009:19). 이에 따라 현재의 “법정퇴직금” 중 소수 그룹만이 실업수당 항목에 포함되게 되었다.

한국의 법정퇴직금은 본래 실업(SOCX NO.7)에 포함되어왔으나 해고수당과는 다르다. 해고수당이 공적 재원으로 조성되는데 반해 퇴직금은 고용주의 기여로 조성된다. 또한 OECD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의 법정퇴직금은 근로 가능한 인구에게 지급되는 빈도가 정년 은퇴시 지급되는 비율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난다. 연령대별로 퇴직급여액 수령비율을 살펴보면 30세 미만(12.7%), 30세 이상(30.5%), 40세 이상(30.9%), 50세 이상(21.9%), 60세 이상(4.0%)로 나타났다(국세청, 2007).

OECD는 이와 관련하여 법정퇴직금이 존재하는 3개국의 법정퇴직금 상세 지출내역을 조사하였다. 이탈리아에서는 GDP 대비 1%가 퇴직금에 지출되는데, 이 중 공사영역 피고용인에게 지불된 금액을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다. 즉 이전 공무원들에게 은퇴시 지급한 퇴직금에 대한 데이터는 유용한 반면에 민간 영역의 피고용인에 대한 퇴직금에서 연령별 통계는 없다. 따라서 유럽통계(Eurostat)는 이탈리아의 퇴직

금 중 “은퇴한 사람들에게 지불되는 급여액의 총합 중 명확한 부분만...” 노령급여(SOCX NO.1)에 포함시켰다. 즉 공무원에게 지급한 법정퇴직금에 관한 데이터만 유용하므로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해서 퇴사한 공무원에게 지급한 퇴직금만 노령연금에 포함시키도록 변경하였다(Adema and Ladaique, 2009:11).

다음으로 일본에서는 자발적인 민간 퇴직금이 GDP 대비 2.2%(2005)로 나타났다. 퇴직금과 은퇴소득에 관한 통계는 일본 국세청에서 발간되는 국세 연보에서 상세한 자료를 얻을 수 있는데, 일본정부는 이들 퇴직금 수급자의 대다수가 근로세대가 아닌 은퇴시에 급여를 받는다는 자료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 역시 국세청에서 발간하는 국세연보에서 법정퇴직금에 대해 살펴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은 노동시장 유연화가 낮은 종신고용제에 가까운 반면 한국은 이미 노동시장이 유연화되어 근로가능세대의 자발적 퇴직이 많을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과 정규직으로 양분된 상태에서 비정규직의 계약만료로 인한 퇴직금 수급 비율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이에 관해서는 Grubb et al., 2007 참조).

이러한 논의에 근거한 OECD의 작성기준 변경에 대해 본 연구진은 국내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고려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논리를 제안하였다.

먼저 한국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조 6항에 따르면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노후소득보장체계는 0층인 기초노령연금, 1층인 국민연금, 2층인 퇴직금과 퇴직연금(DB, DC, IRA)으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즉 한국에서 퇴직연금과 퇴직금은 동일한 법의 적용을 받으며,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으로 동시에 존재한다. 그러나 OECD의 사회복지지출 작성기준에 따라 근로가능한 연령(working age population)의 해고 및 계약만료 등에 지출되는 법정퇴직금을 노령에 포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두 번째로 OECD 사무국에서 지적하듯이 한국에서는 법정퇴직금의 점유율이 퇴직연금의 점유율보다 훨씬 더 높다¹³⁾. 또한 법정퇴직금에서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여부는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기존의 퇴직금 제도에 대한 혜택을 없애고 퇴직금과 퇴직연금 제도의 조건을 유사하게 조정함으로써 자연

13) 한국의 법정퇴직금의 가입사업장 수는 467,714개소(2008)이고 가입자 수는 6,506,470명(2008)인 반면에 퇴직연금의 가입사업장 수는 50,462개소(2008)이고 가입자 수는 1,119,552명(2008)으로 퇴직연금 가입사업장 수는 법정퇴직금 가입장 수의 10%, 가입자 수는 17%에 불과하다(노동부 임금복지과 내부자료).

스럽게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법정퇴직금의 혜택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먼저 기업에 대한 혜택으로는 고용주가 부담하는 법정퇴직금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퇴직금을 기업 운영의 필수비용(고용주 부담으로 재원이 조달되므로 기업의 지출해야 하는 필수항목으로 여김)으로 간주하여 법정퇴직금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과거에는 감면 비율이 40%로 높았으나 2007년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면서 그 혜택은 점차 축소되어 2009년에는 감면 비율이 30%이다.

다음으로 피고용인에 대한 혜택으로는 퇴직금 중간 정산제도가 있다. 일반적으로 3,40대는 가계 소비가 가장 많을 때이나 급여는 고연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이런 상황에서 자녀에 대한 부양과 부모에 대한 부담을 모두 지게 되는 3,40대는 주택, 교육, 병원비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 퇴직금 중간 정산을 이용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를 제한하여 노후소득보장의 퇴직금 본래 기능을 강화하고, 퇴직연금과의 차이를 줄이고자 퇴직급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셋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전부개정법률(안) 제 2조 8항에서는 법정퇴직금의 중간정산을 퇴직급여와 동일한 규정으로 제한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들이 퇴직연금보다 퇴직금을 더 선호하는 중요한 이유이다. 정부는 퇴직연금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자 법정퇴직금의 중간 정산 역시 퇴직연금제도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즉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는 퇴직연금의 중간정산에 대한 규정과 동일하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논의에서 보듯이 정부가 법정퇴직금의 조세감면 혜택을 축소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를 엄격하게 개정하는 이유는 법정퇴직금 제도의 혜택을 없애고, 퇴직연금과 유사하게 설계하여 퇴직금의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함 때문이다. 나아가 법정퇴직금의 노후소득보장 목적을 되살리고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03

K
I
H
A
S
A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자원체계와 추계방법

3장 한국의 사회복지 자원체계와 추계방법

제1 절 한국의 사회복지자원과 공급주체

OECD의 사회복지자원과약을 위한 분석틀과 국내·외 선행연구의 결과가 주는 실천적 함의에 기초하여, 한국적 상황을 중심으로 공급되고 있는 사회복지자원의 유형과 특성을 구분해보면 다음과 같다.

1. 공공부문

공공부문의 사회복지자원은 크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중앙정부에 의해 제공되는 자원의 형태에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조세지출, 공공요금 감면, 예산편성기준 외 사회복지지출이 해당된다. 그리고 그 재원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정부 각 부처에서 관리하는 기금으로 마련된다. 여기서 정부소관기금이란 4대 사회보험기금과 우체국연금기금을 포함하여 보건복지부¹⁴⁾ 소관의 응급의료기금, 노동부 소관의 임금채권보장기금과 장애인고용촉진기금, 여성부 소관의 여성발전기금, 보훈처 소관의 보훈기금과 순국선열 애국지사사업기금, 총리실 소관의 복권기금을 말한다. 이를 세부적인 항목별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표 3-1>과 같다.

14) 본 연구는 2007년도의 통계를 생산하는 만큼 이 당시의 중앙행정부처의 명칭을 사용하고자 한다 (부표 29 참조).

〈표 3-1〉 사회복지자원총량 세부 분석모형: 공공부문

| 영역 | 구분 | 세부항목 |
|----------|-----------------|--|
| 중앙 정부 | 사회보험 | · 공적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 | 공공부조 | · 기초생활보장 · 의료급여 |
| | 사회 복지 서비스 | 아 동 · 아동복지서비스 |
| | | 장애인 · 장애인복지서비스 · 장애인특수학교운영지원 |
| | | 노 인 · 노인복지서비스 · 경로연금 |
| | | 가 족 · 모·부자시설지원 ·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 · 보육사업 |
| | | 여 성 · 여성복지(여성권익증진) · 여성복지단체 지원 등 |
| | | 기 타 ·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
| | 보건의료 | · 정부부문의 보건의료비(시설·장비 포함) |
| | 보 훈 | · 보훈대상자 보상금 및 교육, 단체, 의료지원 |
| |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 · 자활지원 · 일자리창출 지원 정책 · 청년실업 대책 |
| | 조세지출 | · 근로자·농어민 등 중산층 지원관련 · 사회보장관련 |
| | 공공요금감면 | · 취약계층을 위한 교통·통신 요금 감면제도 |
| | 예산편성기준 외 사회복지지출 | · 법률지원 · 인터넷 교육서비스 등 |
| 지방 정부 | 사회복지예산 | · 국고보조금에 대한 부담금 · 자체사업 · 새터민 정착지원금과 교육(2008년부터 지방이양) · (저소득층) 아동, 유아 지원(2008년부터 지방이양) |

사회보험은 2008년도부터 시행예정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제외한 공적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에서 제공되는 각종 연금과 급여, 국가가 지원하는 지원금, 기관 및 인력에 지출되는 관리운영비를 포함한다.

공공부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급여와 서비스, 의료급여, 일시적 구호사업, 자활지원사업,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등을 포함한다.

사회복지서비스는 아동, 보육·여성, 노인, 장애인, 모·부자, 보훈서비스의 수급 대상 영역별로 구분하며,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노인복지서비스는 경로연금, 일자리

지원 및 운영, 고령화대책기구 자원사업 등으로, 아동복지서비스는 보육을 제외한 저소득가정지원, 아동보호사업 등이 해당되며, 모·부자복지서비스는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 모부자시설지원, 건강가정지원센터지원 등의 지출을 포함한다. 장애인복지서비스는 장애수당, 의료비지원, 단체지원, 장애인생활시설지원, 재활보조기구지원 등이며, 취약계층을 위한 노동부 소관 사업은 자활훈련, 여성가장실업자 취업훈련, 장애인 취업훈련 등이 이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 소관 연구용역사업, 사회복지사무소지원, 건강가정육성사업 등은 기타항목으로 포함할 수 있다.

보건의료부문은 공공부조와 건강보험에 의해 제공되는 의료급여와 재정지출은 물론 보건복지부 소관 보건의료사업지출, 내부거래지출, 특별회계재원에 의한 지출을 포함한다. 보건의료사업은 건강증진질병관리, 원폭피해자지원, 정신질환지원, 의료체계구축, 보건산업진흥, 한방정책, 질병관리본부, 기관운영 등으로 구성되며, 보건복지부예산에 의한 내부거래 지출은 크게 기관의 인건비 등의 운영비와 차관상환금으로 구성된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노동부 소관 일자리 창출사업이 해당되며, 크게 청년실업 대책사업, 사회적일자리 지원사업, 고용 인프라구축 및 중소기업유휴일자리 충원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특별회계는 재정융자특별회계, 국유재산특별회계,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국립의료원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에너지 및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의한 재정지출을 포함한다. 조세지출은 두 가지 항목으로 크게 구분되는데, 하나는 근로자·농어민 등 중산층의 저축에 대한 비과세를 통한 조세감면과 소득공제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보장에 대한 조세감면과 사회복지대상자에 대한 소득공제와 간접세 면제가 해당된다.

공공요금감면은 교통요금감면과 통신요금감면의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공급은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통신요금감면은 감면의 주체가 모두 사기업이므로 민간부문으로 처리한다. 교통요금감면의 경우 공기업의 형태를 띠고 있는 철도공사와 도시지하철공사가 운영주체인 KTX, 기차, 지하철은 공공부분에 포함되고, 항공은 민간부분에 포함된다.

예산편성기준 외 사회복지지출은 정부의 사회복지분야 재정으로 지출되었던 사업 이외에 사회복지 목적성을 띤 지출로, 그 내용은 국방부의 새터민 지원사업, 교육인

적자원부의 인터넷 설비지원, 취약계층 유아교육비, 급식지급, 장애인지원사업, 타 부처의 장애인지원사업, 문화관광부의 청소년 실업대책지원사업, 법무부의 법률지원 복지사업 등이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지방정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출되는 사회보장비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예산 중 일반사회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아동복지, 보건관리, 청소년복지, 여성복지 등을 포함한 사회복지예산 혹은 지출로 추계할 수 있다.

2. 민간부문

민간부문 사회복지자원의 체계는 〈표 3-2〉와 같이 유형화할 수 있다. 개인적 차원에서 가입한 보험시장을 통해 제공되는 민간보험은 영리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는 보장성 제도라는 점에서는 사회복지자원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간주하여 사회복지자원에 포함시켰다. 이와 같은 구조는 민간부문의 자원을 기업, 시장, 제3섹터, 공동체로 구분하여 파악한다는 점에서 이전의 연구와는 조금 다르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이 제공하는 사회복지자원은 크게 법정기업복지와 비법정기업복지, 사회공헌활동, 공공요금감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논란의 소지가 될 항목은 법정기업복지인데, OECD의 사회적 지출 개념을 따르고 있는 고경환 외(2003)에서는 이를 공공사회지출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공급주체에 따른 구분에 의해 법정기업복지비를 민간부문의 사회복지자원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법정기업복지는 법적 규정에 따라 고용주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자원으로써 법정퇴직금, 4대 사회보험에 대한 고용주부담금, 출산 전후 휴가급여 중 고용주 지급분(60일 이상 지급분), 질병휴가 기간동안의 별정임금이 포함된다. 다음으로 기업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제공되는 비법정 기업복지는 체력 단련비와 각종 수당 등 사내복지와 가족수당, 학비지원, 주택자금지원과 같은 기업의 고용연계급여가 포함된다. 그리고 최근 한국에서 그 비중이 급격히 증대되고 있는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NGO 등에 대한 사회복지목적성

의 기부금(품)과 직원들의 자원봉사활동, 사회공헌활동에 따른 행정비용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에서 제공되는 공공요금감면은 크게 교통부문과 통신부문으로 구성되는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교통부문은 항공회사의 요금 감면을 의미하며, 통신부문은 KT, 하나로통신, SKT, KTF, LGT, 데이콤 등의 사기업에서 제공하는 시내·시외전화, 이동통신, 인터넷 등에서의 요금감면을 의미한다.

둘째, 시장부문 사회복지자원에는 개별적인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가입한 사보험을 통해 이전된 보험금 총액이 해당된다. 이것은 선행연구에서 사회복지자원으로 간주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불의의 사망·상해와 같은 위험에 대비하고자 하는 사회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Adema, 2001), 위험에 대비한 보장성 보험금 지출과 만기도래에 의한 저축성 보험금 지출의 성격을 분리해 내면 사회복지 자원으로 파악이 가능하다. 한편 김교성·김종건(2006)의 연구는 최근 저소득층의 신용회복과 자산형성 지원 등 사회공헌기금으로 귀속되는 방향으로 그 활용가능성이 모색되고 있는 휴면계좌를 사회복지자원으로 시장부문에 포함시키기도 하였으나, 이는 사용방향이 여전히 정책적으로 불분명함으로 제외하기로 한다.

셋째, 제3섹터는 그 성격상 완전한 자발성에 기초하되 공급주체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사회복지자원의 특성을 가진다. 대표적인 자원제공 주체는 종교단체, 복지시설 및 기관, 시민단체, 그리고 모금기관 등이다. 우선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적 교리에 따라 이루어지는 각종 사회복지관련 현금 및 현물지출과 교인들의 사회복지봉사활동이 포함된다. 복지시설의 경우 생활시설과 이용시설, 미신고시설에서 제공하는 자원의 총량을 의미한다.

먼저 생활시설에는 노인, 아동, 장애인, 청소년, 여성 등 대상별 시설과 부랑인 및 노숙인, 정신요양, 결핵 및 한센 등 특별한 욕구를 가진 대상을 위한 복지시설이 있다. 이용시설로는 종합사회복지관과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노인복지관, 아동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여성복지관 등 대상별 복지관과 함께 청소년, 부랑인 및 노숙인, 외국인 노동자 및 그 가족, 알콜상담센터, 정신보건시설 등 복지시설이 있다.

모금의 경우, 모금기관, 사회복지 관련협의체, 그리고 기타(종교기관, 시민단체 등)에 의해 수행된 모금액이 포함된다. 이러한 제3섹터에 의한 자원은 현금자원 뿐 아니라 각 기관·단체들에 의해 조성·지급된 현물후원 등이 포함되며, 이는 중요한

사회복지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개인이 속해있는 공동체 차원의 사회복지자원은 가족간에 이루어지는 사적 이전과 개인 또는 집단단위의 자원봉사활동, 그리고 상호부조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특정집단의 공제급여가 포함된다. 공제급여에는 군인, 경찰, 교직원, 지방공무원, 건설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공제회가 포함되고, 사적이전은 가족과 친지에 의한 현금이전을 의미하며, 자원봉사는 개인이나 집단의 자발적 봉사활동을 의미한다.

자원봉사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산출량접근법(output-related method)과 투입량접근법(input-related method)이 있다. 전자는 자원봉사노동에 의해 생산된 재화와 용역에 화폐가치를 부과하는 방식인 반면, 후자는 노동시간에 화폐가치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종합적대체법, 전문가대체법, 기회비용법의 세 가지 접근법으로 구분된다. 종합적대체법(global substitution method)은 자원봉사를 하나의 직업으로 간주하여, 그와 같은 직업을 수행할 한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가치평가에 사용하는 방법이며, 전문가대체법(specialized substitution method)은 자원봉사와 같은 직무의 숙련을 가진 전문가의 평균임금을 사용하여 평가하는 방식을 의미하고, 기회비용법(opportunity cost method)은 자원봉사자가 무급노동을 수행함에 따라 상실하게 되는 시장임금을 가치평가에 사용하여 추정하는 방법이다.

〈표 3-2〉 사회복지자원총량 세부 분석모형: 민간부문

| 영역 | 구 분 | | 세부항목 |
|------|----------|------------|--|
| 기업 | 기업 복지 | 법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퇴직금 · 4대보험 고용주부담분 · 산전후 휴가급여(60일, 고용주분) · 질병휴가기간 동안의 별정임금 |
| | | 비법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고용연계급여(가족수당, 학비지원, 주택자금지원 등) · 기업의 사내(후생)복지(체력단련비, 각종 수당 등) |
| | 사회공헌 | | · 사회복지목적성 기부금 |
| | 공공요금감면 | | · 공공요금에 대한 감면(공기업 포함) |
| 시장 | 사보험 보험금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명보험에서 만기환급형을 제외한 보장성(사망, 상해, 질병 등) 보험금 · 손해보험에서 만기환급형을 제외한 보장성(화재, 장기손해, 자동차, 보증, 개인연금 손해 등) 보험금 |
| 제3섹터 | 지출 | 종교 기관 | · 종교기관의 사회복지목적성 지출 |
| | | 복지 시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시설의 총지출 · 이용시설의 총지출 · 미신고시설의 총지출 |
| | | 시민 단체 | · 시민단체의 사회복지목적성 지출 |
| | 모금 | 모금 기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모금기관의 모금 · 민간모금기관의 모금 |
| | | 협회· 협의체 | · 사회복지관련 협회 및 협의체의 자체 모금 |
| | 자원봉사 | | · 자원봉사의 현금가치 |
| 공동체 | 공제급여 | | · 공제회의 공제급여 |
| | 사적이전 | | · 가족, 친척 등에 의한 현금이전 |

주: OECD작성기준에서는 시장의 민간보험의 보험금, 제3섹터 자원봉사의 현금가치, 공동체의 사적 이전은 포함하지 않고 있음.

제2절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추계방법

1. 사회복지지출의 추계방법

OECD의 개념과 작성기준에 따라 국내 사회복지지출의 재원범위는 일반정부(중앙, 지방정부)의 재정, 법률로 설립된 사회보험기관의 급여, 그리고 민간(고용주가 법령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부담하는 재원)의 지출로 설정하였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사회복지지출이란 국가 등이 사회보장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 중 통계작성기준에 따라 산출한 총액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통계작성기준의 의미는 OECD의 사회복지지출 개념과 부록에 수록한 사회복지지출의 구성항목(부표 1 참조)에 따라 산출한 기준을 말한다. 아래에서는 사회복지지출의 급여주체인 정부, 사회보험기관 그리고 기업 순서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 정부지출

1) 공공부조제도와 사회보상제도

공공부조제도는 경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자에게 최저의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소득 및 재산조사를 통하여 보충적인 급여를 조건 없이 제공하는 소득보장제도이다. 사회보상제도는 특정한 집단에 대한 특별보상의 취지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제도를 의미한다. 개인의 경제적·육체적·정신적 피해가 종종 사회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사회의 운영에 대한 최종적 책임자로서 국가는 개인의 피해에 대하여 보상의 의무를 가지게 된다. 일례로 전쟁 중 개인의 희생이나 재산상 손실의 경우 외교적 또는 군사적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므로 국가의 보상책임이 제기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제도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사회보상제도로는 국가보훈제도, 고엽제피해 보상과 위안부보호 등이 있다. 본 추계에는 <표 3-3>의 급여내용이 모두 포함되었다.

〈표 3-3〉 공공부조제도와 사회보상제도의 개관

| | 공공부조제도 | 사회보상제도 |
|------|---|---|
| | 국민기초생활보장 ¹⁾ | 국가보훈 |
| 적용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선정된 자 (부양의무자, 소득인정액) | 애국지사, 순국·애지유족, 군경유족, 무궁수훈자, 4.19 부상자 및 그 유족 등 |
| 급여내용 | -7종(긴급급여 포함 8종) •생계급여 •주거급여(신설) •의료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 보상금지급, 교육보호, 의료급여, 보장구 지급 등 |
| 전달체계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 보훈처 |

주: 1) 재원조달은 생활보호와 같이 국고와 지방비로 구성되어 있지만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재정분담비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음.

2)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는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노령, 장애, 기타 생활상의 곤란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최저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생활보호와는 차별되는 제도이다. 최근 10년간의 사회복지서비스의 확대는 노인복지서비스와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 이유는 노인인구와 장애인구의 증가에 따른 소득보장, 고용기회 확대, 의료문제, 기타 사회활동 참여문제의 확충에 노력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에는 요보호대상자(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 부랑인 등)에게 상담, 재활, 시설입소, 직업보도 등을 행하는 복지서비스뿐만 아니라 노동부의 직업훈련과 고용촉진기능 등을 수행하는 고용서비스 등이 있다.

사회복지서비스는 외형상 해당프로그램은 다양하나, 노인교통수당이나 교통요금할인과 같이 보편성을 가진 서비스가 부족하며, 현행 복지정책은 시설 등 요보호대상자의 구호사업에 치중되어 있는 실정이다(표 3-4 참조). 본 연구에서 공공부조제도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추계자료는 보건복지부와 노동부의 세입세출예산서를 활용하여 추계하였다. 추계의 포괄범위는 중앙정부의 직접지출은 물론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

체에게 지원하는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정에 의한 지방비(자치단체고유사업)를 포함¹⁵⁾하였다.

〈표 3-4〉 사회복지서비스의 제도별 개관

| 제 도 | 소 관 부 처 | 급 여 종 류 |
|------------------------------|------------------------|---|
| 노인과 장애인 | 보건복지부 | - 노인관련 복지서비스 - 장애인관련 복지서비스 |
| | 교육부 | - 장애인에 대한 특수학교 운영지원 |
| 가족복지 | 보건복지부 | - 보육·아동사업 등 - 복지관 운영 등 지원 |
| 보건의료 ¹⁾ | 보건복지부 법무부, 교육부, 국방부 | - 정부부문의 보건의료비 (시설·장비포함) |
|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²⁾ | 노동부 등 | - 실업자·취업자에 대한 훈련 - 공공부문의 고용창출, - 실업자 창업지원 - 장애인 직업재활 등 - 기타 고용서비스와 행정 |

주: 1) 건강보험의 급여 비포함.
2) 고용보험의 급여 비포함.

나. 사회보험

우리의 사회보험은 1960년대 초 연금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을, 1970년대 말에 의료보험을, 그리고 1995년에 이르러 고용보험을 도입함으로써 사회보험 도입 이후 35년만에 4대 사회보험의 틀을 갖추게 되었다. 이와 같이 최근 10년간은 4대 사회보험의 틀이 갖추어졌을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의 적용대상이 급속히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표 3-5 참조).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적용대상은 근로자, 자영자, 그리고 공무원·사립교직원·군인 등 적용대상별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다.

15)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 중 보건과 복지 분야의 자료수집이 어려워 2006년도 실태조사를 통해 2003년도 이후부터 포함하고 있다.

〈표 3-5〉 4대 사회보험의 도입과 확대과정

| 연 대 | 연금보험 ¹⁾ | 건강보험 | 산재보험 | 고용보험 ²⁾ |
|---------------|---|---|--|---|
| 1960~ 1980 | 공무원('60) 군인('60) 사립교직원 (75) | - 500인 이상('77) 300인 이상, 공무원·교원('79) | 500인 이상('64) 200인 이상('65) 150인 이상('66) 100인 이상('67) 30인 이상('72) 16인 이상('73) | - - |
| 1981~ 1990 | 국민연금 10인 이상('88) | 100인 이상('81) 16인 이상('83) 농어촌('88) 도시지역('89) | 10인 이상('82) 5인 이상('88) | - |
| 1991~ 현재 | 5인 이상 사업장('92) 농어촌지역 주민 (95.7) 도시지역 자영업자 (99.4) | 급여수혜기간: 270일('97), 300('98), 330('99), 365(2000), 지역조합과 공무원· 교원공단의 통합 (98.10) 직장조합 포함한 완 전 통합('00) | 노동부에서 근로복지 공 단으로 업무 이관('95.5)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96) 금융·보험업('98.7) 5인 미만 사업장('00.7) | 고용보험제정('93) 30인 이상('95.7) 10인 이상('98.1) 5인 이상('98.3) 1인 이상·시간제 (98.10) |

주: 1) 정보통신부소관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은 생략함.

2) 실업급여의 경우이며,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은 70인 이상('95), 50인 이상('98.1), 5인 이상('98.7), 1인 이상('98.10)임.

1) 공적연금보험

우리의 공적연금보험은 직역별 구분에 따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국민연금, 그리고 별정우체국직원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 연금의 급여종류로는 퇴직연금, 유족연금, 장해연금(별정우체국직원연금은 제외)을 공통으로 지출하고 있으며, 그 외 급여는 연금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⁶⁾.

2) 건강보험

16) 퇴직수당의 경우 각 연금에서 급여(국민연금 제외)를 실시하고 있다.

건강보험의 경우 적용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가 1989년에 달성되었으며, 정부가 건강보험자별 다양하게 운영되던 기존의 의료보험제도를 ‘국민건강보험’으로 관리운 영분야를 통합(2000. 7. 1)하였으며 이어 2003년에 재정분야까지 통합하였다. 이들 건강보험의 급여종류는 현물급여와 현금급여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급여 중 현물급여가 99%를 차지하고 있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고용보험의 가입범위가 최근 1인 사업장에서 임신·일용직, 시 간제근로자¹⁷⁾까지 그 적용대상이 확대되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그리고 장례비로 이루어져 있다. 고용 보험의 급여는 실업급여,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그리고 모성보호사업¹⁷⁾으로 운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4대 사회보험의 지출액 추계는 각 통계연보나 내부 자료를 활용하였다.

다. 법정민간부문

1) 고용주의 법정급여

민간복지 중 법률로 강제된 기업복지에 한하여 살펴보면 법정퇴직금과 산전후휴 가급여, 그리고 상병으로 인한 유급질병휴가급여가 있다. 이들 세 급여는 근로기준 법이 제정(1953)되면서 법률상 뒷받침을 갖게 되었으며, 현재는 5인 이상의 사업체 로 확대되었다. 다만, 상시 4인 이하의 사업장에 대해서도 1999년부터 산전후휴가급여를, 2001년부터 유급질병휴가급여를 의무화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10조 제2항).

법정퇴직금제도(동법 제34조)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이다. 법정퇴직금의 추계는 2005년도 자료까

17) 모성보호사업에는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이 있다. 산전후휴가는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해 산전후 9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근로기준법72조) 휴가기간 중 급여의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이후 30일은 고용보험 에서(남녀고용평등법 18조) 지급한다. 육아휴직은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남녀근로자(근로기준법 19조)가 1년 내의 기간동안 고용보험에서 매월 50만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 퇴직자의 전체 기초자료가 수록된 국세청 전산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나 이 후부터는 국세연보를 이용하고 있다.

OECD가 지난 2년간의 논의를 토대로 작성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함에 따라 법정 퇴직금 지출은 실업(NO.7)에서 노령(NO.1)으로 분류가 변경되었다(Adema & Ladaique, 2009). 즉 정년퇴직자의 퇴직금만 노령급여에 포함하고, 자발적 퇴직자와 해고자의 퇴직금은 제외되었다. 이로써 퇴직금의 약 20%만 포함되게 되었다.

산전후휴가급여(동법 제72조)는 기업주가 임신중의 여성에 대해 유급보호휴가를 실시한 90일¹⁸⁾ 동안의 급여이다. 이들 3개월 중 2개월은 기업이, 나머지 1개월은 고용보험이 부담한다. 먼저 기업부담은 건강보험 급여화일에서 분만급여를 수령한 자와 자격화일에서 보수월액¹⁹⁾을 분석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2(개월)를 곱하여 추계하였다. 다음 고용보험 부담은 고용보험통계연보를 활용하였다. 다만, 추정상 전제는 분만근로자가 산전후휴가기간동안 월평균소득을 수령한다는 가정에 따라 실시하였다.

$$Maternity\ Bene\ Private = \sum W_{ij} \times 2$$

W_{ij} = i 연도 직장여성 중 분만한 j 취업자의 월평균소득

그리고 근로자의 유급질병휴가급여(동법 제82조)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에 있는 경우 사용자가 행하는 근로자의 휴업보상(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이다. 이 급여의 추계는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유병률, 외병일수)와 노동부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취업자 중 상용근로자수, 상용근로자의 평균임금)를 활용하여 추계하였다. 다만, 추정상 전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질병휴가 동안 월평균임금을 지급한다는 가정 하에 실시하였다.

$$Sickness\ Bene = \sum M_{ij} \times B_{ij} \times 26.0714^{상수1)} \times E_{ij} \times W_{ij} \times 0.02^{상수2)}$$

이 때, $Sickness\ Bene$ = 질병휴가기간 동안 법정임금

M_{ij} = i 연도 j 연령층의 유병률(%)

B_{ij} = i 연도 j 연령층의 외병일수

18) 2001년 11월부터 90일로 확대되었다.

19) 건강보험법상 보험료 산출을 위한 분만급여 수령시점의 월보수액을 의미한다.

E_{ij} = i 연도 j 연령층의 취업자수

W_{ij} = i 연도 j 연령층의 월평균임금

상수1) = 표본집단의 14일간 유병률 및 외병일수의 연간화

상수2) = 법정임금(60%)의 일할 환산치임.

2) 취약계층을 위한 교통·통신요금 감면제도 등

우리나라는 1980년대 말부터 취약계층이나 사회보상대상자를 위한 복지정책으로 교통·통신과 관련한 이용요금의 감면혜택을 법률²⁰⁾로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노인이나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등이 전화, 이동통신, 철도, 지하철, 국내선 항공기 등을 이용할 때 요금의 일부를 할인 또는 면제받는 이 제도는 대상자와 서비스업종을 법률로 정하고 있다.

현재 요금감면대상자인 노인인구와 등록 장애인의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이용자의 수 또한 늘고 있다. 이로서 앞으로 서비스요금의 감면규모도 크게 증가할 것이다.

본 추계의 범위로는 법률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시행되는 서비스에 국한하며 개인이나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활동은 제외한다(외국의 자발적 참여 서비스로는 미국의 Senior Card, 뉴질랜드의 Senior Citizen's ID Card를 들 수 있음²¹⁾).

이러한 감면제도의 목표는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취약계층 등의 장소이동과 정보의 불평등을 해소하여 사회생활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간 형

20) 관련 법률은 노인복지법(제26조: 경로우대, 동법시행령 제19조: 경로우대시설의 종류 등), 장애인복지법(제27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동법시행령 제13조: 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6조: 수송시설의 이용보호, 제67조: 고궁 등의 이용보호, 동법시행령 제85조: 수송시설의 이용대상 등, 제86조: 고궁 등의 이용보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2조: 수송시설의 이용보호, 제23조: 고궁 등의 이용보호), 방송법(제64조: 텔레비전 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동법시행령 제44조: 수신료의 면제), 철도법(제7조의2: 운임 및 요금의 감면 등), 유료도로법(제15조: 통행료납부의 대상 등, 동법시행령 제8조: 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전기통신사업법(제3조의2: 보편적 의무, 동법시행령 제2조의2: 보편적 의무의 내용), 국립박물관전시품관람규칙(제5조: 무료관람), 국립현대미술관전시품관람규칙(제5조: 무료관람) 등이다.

21) 미국은 지역시민단체와 자영업주들의 자발적 운동으로 Senior Card를 소지한 노인에게 대해 음식료, 목욕료, 실비용품 등에 대해 일부 할인하고 있다. 또한 뉴질랜드도 한국과 같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대해 경로우대제도가 있다. Senior Citizen's ID Card라 불리는 이 경로우대증은 오클랜드지역에서 버스나 기차, 배 등을 이용할 때 40%의 요금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평성을 제고하여 기본생활을 향상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교통·통신요금 등의 감액범위를 살펴보면, 서비스별 구체적인 감면율과 적용범위가 사업자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교통요금은 무료~10%, 통신요금은 무료~30%, 그리고 관람요금은 무료~50%이다. 이와 같이 교통·통신요금의 경우 일정한 감면한도를 설정하고 그 이상에 대하여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서비스 이용자가 적거나 1회 이용의 단가가 낮을수록 감액범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현행 교통·통신요금 등의 감액기준은 〈부표 4〉를 참고하기 바란다.

추계방법은 보건복지부, 정보통신부, 철도청, 문화재청 등의 협조로 본 제도를 시행하는 각 공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회수된 조사표의 내용을 분석하여 추계하였다. 다만, 기초 자료가 다소 미흡한 문화재청이 관리하는 궁·능 무료금액은 내부자료를 기초로 별도 추정하였다(표 3-6 참조).

〈표 3-6〉 교통·통신요금 감면제도별 조사대상기관과 조사방법

| 제 도 | 서비스대상 | 조사대상기관 | 조사방법 |
|------|--------------|---|---------------------|
| 교 통 | 철 도 | 철도청 | 실태조사 |
| | 지하철 |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부산교통공사, 대구지하철공사,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 실태조사 |
| | 국내선항공료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에어 | 실태조사 |
| | 고속도로통행료 | 한국도로공사 | 실태조사 |
| 통 신 | 시내·외 전화요금 | 한국통신, 하나로, 데이콤, 온세통신 | 실태조사 (방송통신위원회협조) |
| | 이동통신 | SK텔레콤(011·017), KTF(016·018), LG텔레콤(019) | 실태조사 (방송통신위원회협조) |
| | TV수신료 | KBS | 실태조사 |
| 입장관람 | 궁·능 | 문화재청 | 기관의 내부자료로 추정 |

2. 총사회복지지출의 추계방법

사회복지지출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논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총사회복지지출은 사회복지지출에 자발적민간부문의 지출을 추가한 것이다. 사회복지지출 영역은

이미 앞 절에서 살펴보았기 때문에 본 절에서는 자발적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표 3-7>은 총사회복지지출을 구성하는 개념적 구성항목들로 비음영부분은 ‘사회복지지출’ 영역이며 음영부분은 ‘자발적민간부문’ 영역으로 본 절에서는 음영부문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표 3-7> 총사회복지지출의 개념적 구성항목

| 구 분 | | 구 성 항 목 |
|----------|-----------|--|
| 공공부조 | | • 생활보호, 의료급여, 귀순복합동포보호, 국가보훈 급여 등 |
| 사회보험 | | • 연금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
| 사회복지서비스 | | • 노인과 장애인, 가족복지, 보건의료,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등 |
| 민간 부문 | 법정부문 | • 법정퇴직금, 산전후휴가급여, 유급질병휴가급여, 취약계층을 위한 교통·통신요금 감면 |
| | 자발적 부문 | • 민간모금단체·종교단체의 복지사업 관련 지출 |
| | | • 기업·기업재단의 사회복지활동 - 사회복지, 재해복구·예방 등 |
| | | • 기업의 고용연계 급여 - 가족수당, 학비지원, 주택자금지원 등 |
| | | • 특정집단의 공제급여 - 학교안전공제회, 대한의사협회공제회 |
| | | • 민간의료비 - 자동차책임보험의 대인치료비 - 비영리단체의 보건의료서비스에의 지출, 기업의 법정 외 복리비 중 보건의료비 등 |

주: 1) 기업의 기부금이나 사회복지활동은 ‘기업재단’과의 이중계산을 명확히 검토할 수 없어 제외하며 ‘기업의 현물급여’와 ‘기업재단’ 중심으로 살펴봄.
2) 비음영부분은 ‘사회복지지출’ 영역이며 음영부분은 총사회복지지출 추계를 위한 추가 영역임.

오늘날 우리나라도 정부재원으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국가복지뿐만 아니라 민간재원의 복지도 확대되어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자발적민간급여는 그 규모나 내용면에서 정부에 비하여 소규모이며 내용도 한정적이지만 국가의 복지활동을 보충하고 보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발적민간부문의 재원유형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여 볼 수 있다. 첫째, 법적인 근거를 갖고 있거나 또는 민간집단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민간인으로부터 모금활동이 이루어지는 형태이다. 여기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 결핵기금모금, 적십자회비모금, 재해의연금모금, MBC 새생명모금, 그리고 결연후원사업이 여기에 해당된다. 둘째, 시대의 상황과 요구에 따라 사회복지

활동을 전개해 온 종교계를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종교계의 사회복지 참여범위는 크게 두 가지 즉, 종교계 법인, 성직자 또는 신자의 사회복지시설을 통한 참여와 종교기관 내외에서 일어나는 각종의 사회복지프로그램인 사회복지시설 외 참여로 분류할 수 있다. 끝으로, 기업의 고용연계와 관련한 범정의급여와 경제인 단체나 기업체가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의 활동 재원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조직이나 기관에 의하여 공동모금 되고 있는 재원을 중심으로 하며 개인에게 자발적이고 개별적으로 기부한 경우는 공식적이고 조직화된 사회복지활동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표 3-8〉은 지금까지 언급한 자발적민간부문의 개념적 구성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표 3-8〉 자발적민간부문의 개념적 구성항목

| 분 류 | 종 류/사업내용 | 활 용 자 료 |
|-------------------------------|--|------------------------------------|
| 1. 복지사업 민간모금 ¹⁾ | 1) 사회복지공동모금(사회복지사업기금)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 | 2) 재해의연금모금, 재해지원사업 | 전국재해구호협회 |
| | 3) 적십자회비 모금, 구호사업 외 | 대한적십자사 |
| | 4) 결핵협회모금, 결핵예방·연구사업 | 대한결핵협회 |
| | 5) 한국사회복지협의회(MBC 어린이 새생명모금)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 | 6) 아동시설지원·가정결연사업 외 | 사회복지법인월드비전 |
| | 7) 가정위탁 지원사업 외 | 어린이재단 |
| | 8) 심장병 검사지원사업 외 | 한국심장재단 |
| | 9) 아동교육·장학결연사업 외 | 세이브더칠드런 |
| | 10) 국내난치병 어린이 지원사업 외 | UNICEF 한국위원회 |
| | 11) 결연후원사업 | 어린이재단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
| | 12) 교육문화지원·기금프로그램개발사업 외 | 아이들과 미래 |
| | 13) 저소득층 자활지원 외 | 아름다운재단 |
| | 14) 아동학대예방·결식아동지원사업 외 | Good Neighbors |
| | 15) 소외계층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 한국여성재단 |
| | 16) 불우이웃돕기사업 외 | 한국라이온스클럽 |
| 2. 종교단체 복지사업 | 1) 사회복지시설을 통한 참여 2) 사회복지시설 외 참여(미포함)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3. 기업의 사회복지활동 | 고용연계급여 - 보육비·학비·근로자 휴양비 등 지원 기업·기업재단의 사회공헌활동 | 노동부 전국경제인연합회 |
| 4. 특정집단의 공제회 | 1) 의료분쟁 2) 학교생활 중의 사고 | 대한의사협회 각 시·도 교육청 |
| 5. 민간의료비 | 자동차책임보험 대인치료비 ²⁾ | 보험개발원 |

주: 1) 사회복지조직이나 기관에 의한 민간모금임.

2) 자동차종합보험의 대인치료비는 시장가격에 따른 계약임으로 사회적 지출(social expenditure)로 볼 수 없어 제외함.

3. 순사회복지지출의 추계방법

순사회복지지출은 총사회복지지출에서 사회복지와 관련한 조세제도상의 혜택은 더하고 이전소득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는 감하여 추계하고 있다(표 3-9 참조).

이전소득자가 부담하는 조세와 사회보험료는 이전수입을 감소시키게 된다. 반면에 정부는 사회복지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일정한 기관이나 개인에게 조세를 경감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정부지출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순사회복지지출 추계와 관련된 조세부담에는 먼저 이전소득자가 부담하는 직접세와 간접세, 그리고 사회보험료를 들 수 있다. 다음으로 조세혜택에는 사회복지정책을 실현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를 경감하거나 소득세 대상금액을 공제하는 근로소득공제제도가 있다.

세부적으로 먼저 조세부담을 살펴보면, 직접세는 이전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간접세는 이전소득자의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그리고 관세 등이 있다. 이전소득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에는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한 연금수급자의 건강보험료를 들 수 있다. 다음 조세혜택은 크게 공익법인·비영리법인에 대한 조세지원, 사회복지활동을 하는 기업에 대한 국세와 지방세의 감면, 그리고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공제 및 소득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사업소득자²²⁾의 연말정산 등이다.

22)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자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방문판매 후원수당을 받는 자이다 (소득세법 제144의 2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표 3-9〉 순사회복지지출의 개념적 구성항목

| 구 분 | | 구 성 항 목 | |
|---|---------|------------------------------------|---|
| 총 사회 복지 지출 | 공 공 부 조 | • 생활보호, 의료급여, 귀순복합동포보호, 국가보훈 급여 등 | |
| | 사 회 보 험 | • 연금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 |
| | 사회복지서비스 | • 노인·장애인, 가족복지, 보건의료,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등 | |
| | 민간 부문 | 법정부문 | • 법정퇴직금, 산전후휴가급여, 유급질병휴가급여, 취약계층을 위한 교통·통신요금 감면 |
| | | 자발적 부문 | • 민간모금단체·종교단체의 복지사업 관련 지출 |
| | | | • 기업·기업재단의 사회공헌 활동 - 사회복지, 재해복구·예방 |
| • 기업의 고용연계 급여 - 가족수당, 학비지원, 주택자금지원 등 | | | |
| • 특정집단의 공제급여 - 대한의사협회공제회, 학교안전공제회 | | | |
| | | • 민간의료비 - 자동차책임보험의 대인치료비 | |
| 순 사회 복지 지출 | 조세 제도 | 조세부담 (-) | • 대상자가 부담하는 직·간접세 추계 - 법정민간급여에 부과되는 소득세액 - 이전(근로)소득자가 부담하는 간접세액 |
| | | 조세혜택 (+) | • 각종 조세감면금액 추계 -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감면 - 장애인용 자동차 면세금액 - 구입단계(특소세, 교육세) 면세금액 - 등록단계(취득세, 등록세) 면세금액 - 보유단계(자동차세, 면허세) 면세금액 |
| | | | • 근로소득세 공제제도 - 장애인, 경로, 부녀자세대주, 기부금의 소득공제 |
| | | | • 비영리공익법인에 대한 재산세 등 감면(지방세 및 지방조례) |
| | | | • 기업의 사회복지관련 지출에 대한 법인세 감면 |
| | | 사회보험료부담 (-) | • 이전소득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 연금수령자의 지역건강보험료 부담액 • 법정민간급여 수령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 산전후휴가급여, 유급질병휴가급여 |

주: 비음영부분은 '총사회복지지출' 영역이며 음영부분은 순사회복지지출 추계를 위한 추가 영역임.

〈표 3-10〉은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구체화한 개념적 구성항목으로 활용자료 등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에서 조세부담은 직접세와 간접세, 사회보험료로 구성되어 다소 체계화된 반면에 조세혜택은 관세감면, 자동차세 면세, 재산세 등 감면, 근로소득 공제, 법인세 감면 등으로 구성되어 다소 복잡한 체계를 갖고 있다.

〈표 3-10〉 조세와 사회보험료의 개념적 구성항목

| 분 류 | 종 류 | 대 상 | 활 용 자 료 |
|------|-------------|--|------------------|
| 조세부담 | 1. 직접세 | 법정퇴직금 산전후휴가급여(고용보험 ¹⁾ /기업) 질병휴가급여 | 국세청 |
| | 2. 간접세 | 이전소득자의 가계지출 | 도시가계조사 농가경제조사 |
| | 3. 사회보험료 | 연금수령자의 지역건강보험료 법정민간급여에 부과되는 사회보험료 | 국민건강보험 공단 국세청 |
| 조세혜택 | 1. 관세 감면 | 장애인용 의료용구 등의 수입물품 감면 | 관세청 |
| | 2. 자동차세 면세 | 장애인용 자동차 | 국세청 |
| | | · 구입단계 · 등록 및 보유단계 | 행안부 |
| | 3. 재산세 등 감면 | 비영리법인 | 행안부 |
| | 4. 근로소득 공제 | 노인, 장애인, 부녀자세대주, 기부금 등 공제 | 국세청 기획재정부 |
| | 5. 법인세 감면 | 기업 | 국세청 기획재정부 |

주. 1) 2007년도까지는 과세, 2008년부터 비과세

가. 조세부과 제도

조세부담 추계는 세수를 부과 또는 징수한 행정자료를 이용하고자 한다. 아래에서는 직접세와 간접세 및 사회보험료의 추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직접세

OECD 국가의 대부분이 이전소득에 부과된 직접세액 규모에 대한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 차선택으로 이전소득에 대한 직접세액을 추정하기 위해 거시자료를 이용하여 ‘평균항목별세율’(Average Itemised Tax Rates: AITR)을 측정

하고 있다. 평균항목별세율(AITR)은 이전소득의 유형과 조합에 따라 세부담에 차이가 발생하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개념이다. 이는 가구별 이전소득에서 납부한 총세액에 당초 이전소득 총액으로 나눈 것으로 정의된다. 또한 전체 납부세액은 각 이전소득의 금액 비중에 따라 이전소득 유형별 납부세액으로 분배되는 것을 가정(예를 들어, <표 3-11>의 1번 샘플에서 전체 납부세액 7.5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비율에 따라 공적연금에 대한 소득세 5.0, 사적 연금에 대한 소득세 2.5로 분배)하고 있다.

아래 <표 3-11>과 같이 두 가지 이전소득으로 구성된 5개의 가구에 대한 평균항목별세율은 공적연금은 11.1%, 사적연금은 12.5%로 이전소득 유형별로 차이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평균항목별세율(AITR)을 측정하려면 가구별 소득금액과 세액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해야만 한다.

<표 3-11> 두 가지 유형의 이전소득에 대한 평균항목별세율(AITR) 산출

| 가구 샘플번호 | 가구전체의 이전소득 | | | 소득세 세 율 | 납부세액 ¹⁾ | 연금소득 구성부분에 대한 세액 분배 | |
|--|------------|------------|-----|------------|--------------------|------------------------|------------------|
| | 공적 연금 | 사적 연금 | 합계 | | | 공적 연금에 대한 소득세 | 사적 연금에 대한 소득세 |
| 1 | 50 | 25 | 75 | 10% | 7.5 | 5.0 | 2.5 |
| 2 | 75 | 50 | 125 | 15% | 13.8 | 8.3 | 5.5 |
| 3 | 100 | 0 | 100 | 10% | 10.0 | 10.0 | 0.0 |
| 4 | 50 | 100 | 15 | 15% | 17.5 | 5.8 | 11.7 |
| 5 | 50 | 250 | 300 | 15% | 40.0 | 6.7 | 33.3 |
| 합계 | 325 (A) | 425 (B) | 750 | | 88.8 | 35.8 (C) | 53 (D) |
| 공적 연금소득에 대한 평균항목별세율 = $C/A \times 100$ | | | | | | 11.1% | |
| 사적 연금소득에 대한 평균항목별세율 = $D/B \times 100$ | | | | | | | 12.5% |

주: 1) 이전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은 없다고 가정

2) 총소득 100 이하에 대한 표준세율은 10%, 총소득 100을 초과한 경우 표준세율은 15%로 가정

자료: OECD(2007), 앞의 자료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가구별 소득금액과 세액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없어서 평균항목별세율(AITR)을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대신 실효세율(Effective Tax Rate)을 사용하였다. 참고로 ‘실효세율(effective tax rate)²³⁾’은 ‘결정세액’을 공제 전의 ‘근로자의 연간 소득’으로 나눈 것이다.

$$\begin{aligned} \text{이전소득에 대한 직접세액} &= \text{이전소득금액} \times \text{실효세율} \\ * \text{실효세율} &= \frac{\text{결정세액}}{\text{근로자연간소득(공제전)}} \end{aligned}$$

현재 소득세법(제12조)에서 이전소득 중 일부 연금 소득과 실업급여 소득은 비과세하고 있다. 연금소득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과세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급여 중 유족연금, 장애연금은 비과세 연금소득이며, 사망으로 인한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은 비과세 퇴직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반면, 노령연금은 연금 소득, 사망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반환일시금은 퇴직소득으로 과세된다.

75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마.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산전후휴가 급여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및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것에 한한다)·사망일시금
- 4의3. 연금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 가.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유족연금·장애연금
 - 나.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유족연금·장애연금·상이연금
 -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 라.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연금

23) OECD Taxing Wage(2008-2009)에서는 가구유형별로 실효세율을 제시하고 있다. 4가지 가구유형은 미혼가구, 홑벌이-무자녀, 홑벌이-두 자녀, 맞벌이-두 자녀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개별가구형태별 자료가 없어 가구형태를 고려하지 않은 평균실효세율을 이용한다.

〈표 3-12〉 우리나라 연금소득의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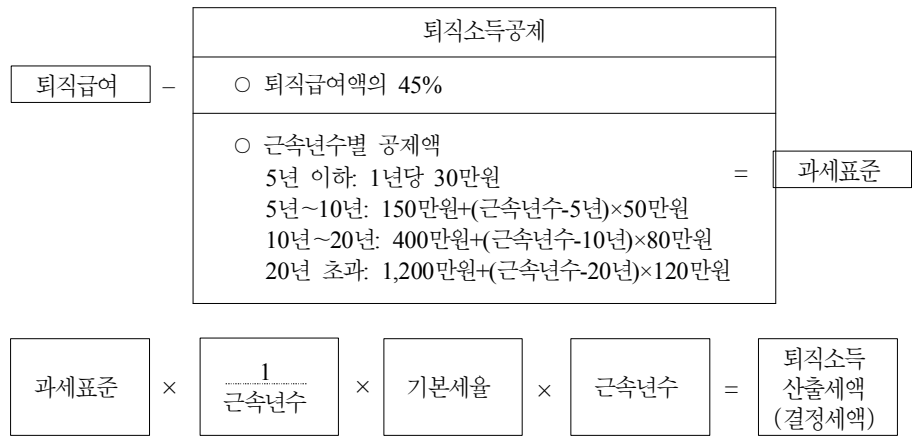
| 구 분 | | 연금소득의 범위 | 적 용 례 |
|----------------|------------|--|---|
| 공적 연금 소득 | 국민 연금 |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연금 | 2002.1.1.이후 불입분을 기초로 지급받는 것부터 연금소득으로 과세 |
| | 공무원 연금등 |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 |
| 사적 연금 소득 | 퇴직 연금 | 퇴직보험의 보험금을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퇴직자가 지급받는 연금 | 2005.1.1.이후 최초로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것부터 연금소득으로 과세 *2004.12.31 이전: 퇴직소득 과세 |
| |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지급받는 연금 | 2006.1.1.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부터 연금소득으로 과세 *2005.12.31 신설 |
| | 개인 연금 |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소득 | 2001.1.1.이후에 최초로 가입하는 저축분부터 연금소득으로 과세 |

자료: 재정경제부, 조세개요 2008

반면 법정퇴직금, 질병휴가기간 동안의 유급급여는 소득세법(제4조)에서 과세하고 있다. 단, 산전후휴가급여는 2007년까지 과세대상이었으나, 2008년부터 비과세대상으로 전환하였다.

- 법정퇴직금 과세: 퇴직소득 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35%(2009년 기준)의 세율을 적용하고 여기에 근속연수로 곱한 세액으로 과세
- 산전후휴가급여 및 질병휴가기간 동안의 유급급여: 근로소득을 구성하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35%(2009년 기준)의 세율 적용

[그림 3-2] 퇴직소득세 계산방식



2) 간접세액(Indirect tax)

① 간접세율의 추계

(1) 미시자료를 활용한 추계

이전소득자에 대한 간접세 부담 분석은 대부분 통계청에서 조사한 도시가계의 소득 및 지출자료를 사용하고 있다. 이 자료는 각 가구의 지출항목이 비교적 자세하게 조사되어 있기 때문에 간접세 부담 분석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도시가계자료는 도시가계만을 조사하였기 때문에 그 연구결과를 우리나라 전체가구로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통계청의 농촌가계자료와 어가경제자료를 동시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물론 이들 가계자료도 도시가계자료와 마찬가지로 농촌과 어가가계에 대한 소득 및 지출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수록하고 있다. 이 세 종류의 가계조사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모집단가구에 대한 대표성을 보다 더 반영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현재 “도시가계조사”에서 이전급여수령자의 사례수가 너무 작아(전체조사가구의 10%, 550가구, 2001) 분석결과를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 향후 이전급여수령자가 더 확대되고 4대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등의 세부 소득원별로 조사가 확충되어야 유용한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2) 거시자료를 활용한 추계

OECD는 간접세율을 보다 쉽게 추계하기 위해 각 회원국별 조세자료²⁴⁾와 국민계정자료가 수록된 Data base를 구축하여 거시적 측면에서 간접세율을 추계하고 있다. 즉 OECD는 간접세율을 계산함에 있어 OECD Revenue Statistics와 National Accounts를 기초로 묵시적 평균 간접세율(average implicit indirect tax rate)을 계산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 방식이 가장 근접하면서도 투명한 방식으로 평가되고 있다²⁵⁾.

간접세율 계산방법으로는 세 가지 방법이 가능하다. 첫째, ‘일반소비세’(5110: General Sales Taxes)와 ‘특정소비세’(5121: Excise Duties)를 더해 간접세수입액을 계산하는 것이다. 둘째, 첫 번째의 조세에 추가적으로 관세(5123: Customs and Import Duties), ‘특정 용역에 대한 조세’(5126: Taxes on Specific Services), 기타 미미한 조세들을 합산한 개념인 ‘생산·판매·이전에 대한 조세’(5100: Taxes on Production, Sale, Transfer, etc.)를 계산하는 것이다. 셋째, 두 번째의 조세에 추가적으로 자동차 면허나 주류 판매와 같은 ‘재화의 사용과 용역 수행에 대한 조세’(5200: Taxes on Use of Goods and Perform Activities)를 합산한 개념인 ‘재화와 용역에 대한 조세’(5000: Taxes on Goods and Services)를 계산한다.

24) OECD는 각국의 국세자료와 지방세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Revenue Statistics를 매년 공표하고 있다.

25) 본 연구에서 간접세율은 국민 모두에 대한 간접세율이 아니라 이전소득자에 대한 간접세율이다. 따라서 미시자료를 활용한 경우는 이전소득자에 대한 간접세율의 추계가 가능하지만 거시자료를 활용하면 국민전체가 부담하는 간접세율이 된다. 결국 총사회복지지출에서 이전소득자 등이 부담하는 직·간접세액을 시자한 후 얻는 순사회복지지출의 추계를 위해 미시자료가 적합하다고 본다. 그러나 OECD는 거시자료를 활용하여 간접세율을 보다 쉽게 추계하여 이용하고 있다. 그 이유는 각 국가별 미시자료의 수집 또는 접근이 어렵거나 이전소득자와 일반소득자간의 소비형태에 큰 차이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표 3-13〉 OECD 지침서에 의한 간접세 개념과 해당 세목

| OECD 기준(OECD Classification) | | | |
|--|--|--|--|
| 5000 재화와 용역에 대한 조세 (Taxes on Goods and Services) | 5100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 판매 · 이전에 대한 조세 (Taxes on Production, Sale, Transfer of Goods and Services) | 5110 일반소비세 (General Sales Taxes) | 5111 부가가치세 (Value-added Taxes) |
| | | | 5112 판매세(Sales Taxes) |
| | | | 5113 기타 일반소비세 (Other General Taxes) |
| | | 5120 특정 재화나 용역에 대한 조세(Taxes on Specific Goods and Services) | 5121 특정소비세 (Excise Duties) |
| | | | 5122 전매수익 (Profits of Fiscal Monopolies) |
| | | | 5123 관세 (Customs and Import Duties) |
| | | | 5124 수출세(On Exports) |
| | | | 5125 투자재화에 대한 조세 (On Investment Goods) |
| | | | 5126 특정용역에 대한 조세 (On Specific Services) |
| | | | 5127 국제거래에 대한 조세 (Other Taxes on International Trade and Transactions) |
| | | | 5128 기타(Other Taxes on Specific Goods and Services) |
| | 5130 5110과 5120에 속하지 않은 것 (Unallocable as between 5110 and 5120) | | |
| | 5200 재화의 사용에 대한 조세 (Taxes on Use of Goods) | 5210 정기적인 조세 (Recurrent Taxes) | 5211 자동차면허세 가계부담 (Motor Vehicle Taxes Households) |
| | | | 5212 자동차면허세 기타부담 (Motor Vehicle Taxes Others) |
| | | | 5213 기타 정기적 조세 (Other Recurrent Taxes) |
| | | 5220 비정기적인 조세 (Non-recurrent Taxes) | |
| | 5300 5100과 5200에 속하지 않은 것 (Unallocable as between 5100 and 5200) | | |

자료: OECD(2004), The OECD Classification of Taxes and Interpretative Guide

평균간접세율 산출에 필요한 간접세 항목 중 OECD 기준에 부합되는 우리나라의 세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소비세’(5110)에는 부가가치세, ‘특정소비세’(5121)에는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담배소비세, 이들에 대한 부가세(교육세, 방위세, 농어촌특별세)가 포함된다. 둘째, ‘특정 용역에 대한 조세’(5126)에는 금융 서비스에 대한 교육세, 레저세, 도축세가 포함된다. 셋째, ‘재화의 사용과 용역 수행

에 대한 세금'(5200)에는 면허세와 자동차세가 포함된다.

이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간접세율을 계산할 수 있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 방법은 가계 부문이 납부하지 않는 세금 항목을 첫 번째 방법에 비해 더 많이 포함하고 있다²⁶⁾. 따라서 첫 번째의 간접세 계산 방법이 급여소득자의 소비에 부과되는 간접세 계산에 그나마 가장 적합한 방식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 번째 방법을 이용하고자 한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간접세율의 추계결과는 간접세율은 Minim 11.43%(’07), Medium 13.43%, 그리고 Maxim 15.25%로 나타났다.

Minim = (일반소비세 + 국내소비세) ÷ (민간소비 + 정부소비 - 공무원 임금)

Medium =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조세 ÷ (민간소비 + 정부소비 - 공무원 임금)

Maxim =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조세 ÷ 민간최종소비지출

② 간접세액의 추계

본 연구에서 추계하고자 하는 간접세액의 세원은 〈표 3-11〉과 같이 크게 다섯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세원은 정부부문(서비스부문 비포함²⁷⁾)의 현금급여, 사회보험 현금급여, 법정민간부문의 현금급여, 자발적민간부문의 현금급여 그리고 조세 감면이다. 이 때 간접세액을 추계함에 있어 현금급여는 포함하고 현물급여는 제외하였다.

26) 첫 번째 방법조차도 가계 부문이 납부하지 않는 세금 항목을 일부 포함하는 한계가 있다.

27) 부가가치세법(제12조)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종교 및 자선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의료보건 용역은 면세하고 있다.

〈표 3-14〉 공공·민간부문별 간접세액 추계범위

| 부 문 | 추 계 범 위 |
|------------------|--|
| 정 부 부 문 | · 공공부조의 현금급여(생계보호, 국가보훈의 보상금 등): 포함 · 공공부조의 현물급여(의료급여, 교육보호): 제외 · 국가공급의 사회복지서비스: 제외 |
| 사 회 보 험 | · 현금급여(공적연금, 실업급여, 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상병보상연금 등): 포함 · 현물급여(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제외 |
| 법정민간부문 | · 현금급여(법정퇴직금, 유급질병휴가급여, 산전후휴가급여 등): 포함 · 취약계층을 위한 교통·통신요금감면액: 제외 |
| 자 발 적 민 간 부 문 | · 현금급여(기업의 고용연계급여 등): 포함 · 현물급여(종교 및 자선단체의 이진지출(현물), 기업재단의 사회공헌 활동 및 기업의 사회복지활동, 학교안전공제회, 대한의사협회공제회, 민간의료비 등): 제외 |
| 조 세 감 면 | · 비영리공익법인에 대한 재산세 등 감면(지방세 및 지방조세),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감면, 장애인용 자동차 면세금액(구입단계), 근로소득공제에 따른 소득세 감면: 포함 |

3) 사회보험료

이전소득에 사회보험료가 부과되는 경우는 연금수령자의 지역건강보험과 근로소득자가 산전산후휴가급여와 질병휴가기간 동안 유급급여에 대해 부담하는 3대 사회보험료가 있다.

① 이전소득자

이전소득자가 그의 소득 중 사회보험료로 지불하는 경우는 연금수령자의 (지역)건강보험료가 유일하다. 즉, 연금수령자가 건강보험의 피보험자일 경우 매월 불입하는 건강보험료가 그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보험료 산정에는 연금소득뿐만 아니라 기타 부과자료인 토지, 건물, 자동차 등의 재산소득 등이 반영되어 있어 자료 활용에 한계가 발생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보험료를 제외하였다. 그 이유는 이를 포함하였을 때 과대추계가 제외하였을 때 과소추계보다 참값으로부터 더 멀어지기 때문이다.

② 근로연계급여

근로소득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는 산전산후휴가급여와 질병휴가기간 동안 유

급급여에 부과되는 사회보험료(근로자 부담)이다. 이의 추계는 근로자부담의 3대 사회보험료(연금보험료율, 건강보험료율(평균), 고용보험료율)의 합을 반영하였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포함하지 않았다(표 3-15 참고).

〈표 3-15〉 우리나라의 4대 사회보험 요율(2007)

| 종 류 | | 근로자 | 사업주 | 합계 |
|----------|-------------------|-------|---|------------|
| 국민연금 | | 4.5% | 4.5% | 9.0% |
| 건강보험 | | 2.39% | 2.39% | 4.77% |
| 고용 보험 | 실업급여 | 0.45% | 0.45% | 0.9% |
| |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 0% | 0.25~0.85% (종업원 규모에 따라 차등적용) | 0.25~0.85% |
| 산재보험 | | - | 평균 1.8% -최고36%(석탄광업) -최저0.7%(전문기술서비스업등) | 0.7~36% |

나. 조세감면제도

정부는 사회적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이나 개인에게 조세감면을 실시하고 있다. 조세감면은 세금감면, 면제, 소득공제, 그리고 세액공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조세감면은 비록 정부가 직접적으로 재정지출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과할 조세를 감면함으로써 정부의 재정수입이 그만큼 줄어들음으로 간접적으로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세혜택(TBSPs)을 구하기 위해 세금감면, 면제, 소득공제, 그리고 세액공제 등 다양한 조세지출(Tax Expenditure) 내역을 파악해야 한다. 조세지출의 방식은 특정 소득이나 특정 납세자에 대한 감세와 사회적 목적을 위한 조세혜택(TBSPs)으로 크게 구분되는데, 순사회복지지출에 계산되는 조세지출은 후자만 포함된다.²⁸⁾²⁹⁾

28) Many governments of OECD countries pursue social policy objectives through the tax system. Broadly speaking there are two groups of such measures. One is reduced taxation on particular sources of income or types of household. The second group of tax measures with social effects concern Tax Breaks for Social Purposes(TBSPs).

첫 번째 유형인 특정소득 또는 납세자에 대해 경감세율을 적용하거나 비과세소득으로 하는 경우는 이미 직접세 계산과정에 포함되기 때문에 조세혜택(TBSPs)으로 보지 않는다. 두 번째 유형은 현금 지급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세액공제 등의 조세혜택(TBSPs)과 민간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비영리단체, 민간건강보험, 사적 연금에 적용되는 조세혜택(TBSPs)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 조세혜택(TBSPs)의 개념에 부합되는 조세지출 항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의 구입·등록·보유단계의 자동차세 감면³⁰⁾이다. 구입단계에서 장애인 차량에 대해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며, 보유단계에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가 면제된다. 둘째, 장애인용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일부 또는 전액 면제³¹⁾이다.

여기에는 시각·청각·언어의 장애인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 또는 제조된 물품과 재활의료를 목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재활병·의원에서 장애인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하여 사용하는 의료용구 등이다. 셋째, 복지사업을 영위하는 주체인 공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재산세 등 감면³²⁾이다. 즉 공익법인 등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이 면제된다. 넷째, 노인, 장애인, 부녀자세대주 등이 있는 가족에 대한 소득공제³³⁾이다. 70세 이상 경로우대자 1인당 연 100만원,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부녀자 1인당 연 50만원, 6세 이하 직계비속 1인당 연 100만원(출생한 당해연도는 200만원) 소득공제되고 있다. 끝으로 기업의 사회복지지출에 대한 법인세 감면³⁴⁾이다. 실제 추계에서 법인세 감면 부분은 자료상 한계로 제외하였다.

이 중 지방세 감면은 지방세법에 의한 감면과 지방조례에 의한 감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지방세법에 의한 감면은 지방세법에 감면대상을 직접 명시한 것으로 감면대상은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단체, 나관리협회, 그리고 영육아보육시설³⁵⁾ 등이

29) OECD, 앞의 자료, p.34

30)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지방세법 제7조

31) 관세법 제91조

32) 지방세법 제288조

33)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1~4호

34)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법인세법 제24조

다. 다음 지방조례에 의한 감면은 지방세법에 감면대상을 직접 명시하지 않고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및 제9조에 따라 지방세법상 감면권한을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위임받아 조례에 의해 감면대상을 정해 과세면제하는 것으로 이 중 사회복지지출과 관련된 감면대상은 다음과 같다.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장애인소유 자동차
- 한센정착농원(음성나환자집단촌)
- 종교단체의 의료업, 노인복지시설, 의료취약지구 의료시설

이 외에도 본 연구에서 추가적으로 살펴 본 조세지출 항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무주택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특별공제이다.

- 연 100만원 이내의 보험료에 대한 근로소득 특별공제(국민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전액 공제)³⁶⁾
- 당해연도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금액(연 500만원 한도)에 대한 근로소득 특별공제³⁷⁾
- 일정 금액을 한도로 교육비 근로소득 특별공제³⁸⁾
-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및 주택마련저축을 기초로 한 전세자금 차입금 상환액의 40%(연 300만원 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연 1,000만원 한도) 전액을 근로소득 특별공제³⁹⁾

둘째, 기부자 또는 복지증진시설투자에 대한 국세 공제이다.

- 개인이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기부금은 전액 공제, 기타 공익성 기부금은 (종합소득금액 - 전액공제기부금)의 10% 특별공제⁴⁰⁾
- 법인이 사회복지·종교·교육·문화 등 관련 법인, 이재민, 국군장병 등에 대한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법정기부금은 75%, 특례기부금은 50%, 지정기부금 5%

35) 지방세법 제272조 제5호

36)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2호의 2

37)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

38)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39)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40)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

손금산입⁴¹⁾

- 무주택종업원용 임대국민주택, 종업원용 기숙사, 직장보육시설 등을 취득한 내국인에 대해 시설취득가액의 7% 세액공제⁴²⁾

셋째, 기타 항목으로는 다음과 같다.

- 개인연금저축에 가입(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에 한정)한 20세 이상 거주자에 대해 불입액의 40% 소득공제⁴³⁾
- 개인연금저축에 가입(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것은 계약 만료시까지 적용)한 20세 이상 거주자에 대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비과세
- 의수족·휠체어, 보청기 등 장애인용 보장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⁴⁴⁾
- 사용자부담 국민건강보험료 부분에 해당하는 근로소득 비과세⁴⁵⁾ 등이다.

이에 대한 추계는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의 통계연보와 내부 자료를 활용하였다.

41)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법인세법 제24조

42)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43)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제1항

44)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4호

45)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하목,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5호

제3절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통계의 생산현황

앞에서 OECD는 사회복지지출의 통계항목을 9가지로 대분류하여 각각의 통계작성 기준을 설정하고 이 기준에 따라 통계를 생산토록 권고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표 3-12〉의 9개 부문의 통계영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8개의 관심영역과 39개의 세부관심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가 작성하여야 할 사회복지지출 통계의 항목 수는 부문에서 관심영역, 그리고 세부관심영역까지 총 66개이다.

본 연구에서 생산한 통계항목은 8개 부문의 47개 항목으로 평균생산율은 71.2%로 나타났다. 미생산된 19개의 통계를 원인별로 보면, 제도 자체가 도입되지 않은 것이 18개 항목(27.3%), 기초자료 부족 등으로 OECD가 요구하는 항목으로 세분화할 수 없는 것이 1개 항목(1.5%)이다. 먼저 제도 자체가 도입되지 않은 급여는 질병급여⁴⁶⁾, 주거급여 등이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는 기업의 경영자체에 의한 실직이든 노동시장의 이유로 인한 실직이든 원인에 관계없이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OECD 작성기준에는 ‘실업’과 ‘노동시장의 이유로 인한 조기퇴직급여’로 각각 분리하여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실업급여수령자의 실업유형을 분류할 기초자료가 없어 이 또한 생산할 수 없다.

통계 생산 현황을 이들 9개 부문별로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표 3-12〉와 같이 기능별로 분류하고 있는 9개 부문의 통계를 살펴보면 요구통계수가 가장 높은 것은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로 11개(16.7%)⁴⁷⁾이며 다음이 ‘노령’, ‘가족’,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으로 8개(12.1%), 반면 ‘보건’과 ‘실업’이 가장 낮은 5개(7.6%)임을 알 수 있다.

46) OECD가 요구하는 질병급여는 아직 미도입 상태이지만, 우리나라 제도 중 각 사업장이 근로자의 질병휴가기간 동안 지급하는 유급휴가급여를 추계하여 포함하고 있다.

47) ‘전체 요구통계수’에 대한 ‘각 부문별 요구통계수’의 백분율이다. 이하 같다.

〈표 3-16〉 사회복지지출 통계의 생산현황: 기능별

(2007년 기준)

| 사 회 복 지 지 출 통 계 의 구 성 | | | | 생 산 현 황 |
|---|------|-------------|------------|------------------------|
| 부 문 | 관심영역 | 세 부 관심영역 | 총요구 갯 수 | 생산수(생산율) ¹⁾ |
| 1. 노령 | 2 | 5 | 8 | 7(87.5) |
| 2. 유족 | 2 | 4 | 7 | 4(57.1) |
| 3.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 (장애, 산업재해 및 직업병, 질병) | 2 | 8 | 11 | 9(81.8) |
| 4. 보건 | 2 | 2 | 5 | 4(80.0) |
| 5. 가족 | 2 | 5 | 8 | 7(87.5) |
| 6.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 2 | 5 | 8 | 7(87.5) |
| 7. 실업 | 2 | 2 | 5 | 3(60.0) |
| 8. 주거 | 2 | 4 | 7 | - |
| 9. 기타 | 2 | 4 | 7 | 6(85.7) |
| 계: 9개 부문 | 18 | 39 | 66 | 47(71.2) |

주: 1) 생산율 = 생산수/요구통계수×100, OECD요구 통계 중 우리나라의 제도와 급여가 없는 경우, 미생산(제출)한 것으로 계산함.

자료: 부문과 영역은 OECD, 2005 Edition of SOCX Database An interpretive guide, 2007의 작성기준을 원칙으로 함.

OECD평균제출율은 78.4%로 나타났으며, 가장 높은 국가는 체코(95.2%), 평균에 가까운 국가는 영국(80.6%), 가장 낮은 국가는 터키(50.0%)로 나타났다.

〈표 3-17〉 사회복지지출 통계의 생산율 국제비교(2005)

| | OECD 평 균 | 한 국 | 체 코 | 핀란드 | 독 일 | 스웨덴 | 일본 | 영 국 | 미 국 | 터 키 |
|--------------------------|-------------|------|------|------|------|------|------|------|------|------|
| 생산율 ^{주)} (%) | 78.4 | 77.4 | 95.2 | 91.9 | 90.3 | 87.1 | 83.9 | 80.6 | 67.7 | 50.0 |

주: 생산율=생산수/요구통계수×100, OECD요구통계를 기준으로 통계가 없는 항목은 미생산한 것으로 계산함.

한국 사회복지지출의 추계결과

4장 한국 사회복지지출의 추계결과

제1절 공공사회복지지출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2007년 약 72조 9,640억원으로 추계되었다. 이는 경상GDP(신계정)⁴⁸⁾ 대비 7.48%로 나타났다. 최근 17년간('90~'07)간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크게 향상되어 왔다. 지출규모로 보면 13.6배가 증가(5조 → 73조)하였으며, GDP 대비로 보면 1.6배 증가(2.91% → 7.48%)하였다. 또한 연평균증가율로 볼 때 동 기간 GDP증가율(10.2%)을 상회한 16.5%로 나타났다.

〈표 4-1〉에서 주요 지출항목의 구성비를 순서대로 살펴보면 ‘보건’(4)이 33조 7,020억원으로 전체의 46.2%로 가장 높다. 다음으로 ‘노령’(1)이 15조 7,070억원으로 2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2개 부문이 우리나라 공공사회복지지출의 대부분(67.7%)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주요 지출부문의 세부구성 백분율을 보면 ‘보건’(4)은 건강보험, 의료급여 및 산재보험의 현물급여가 대부분이며 노령(1)은 특수직역연금이 대부분이다.

이어서 장애, 산업재해 및 직업병, 질병에 대한 급여인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3)가 5조 3,750억원으로 사회복지지출의 구성백분율로 볼 때 7.4%를 차지하고, ‘실업’(7)이 2조 4,340억원으로 3.3% 차지한다. 끝으로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6)이 1조 2,670억원으로 가장 낮음(1.7%)을 알 수 있으며, ‘주거’(8)는 아직 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공란으로 두었다.

48) 국민계정의 신계정은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투자지출처리, SOC 및 군사용 고정자산에 대한 고정자산소모 계상으로 규모가 확대되었다. 신계정은 2005년 3월 기준으로 변경되면서 2000년부터 개정되었는데, 2002년도 기준 신계정에 따른 GDP(72조 5,390억원)는 구계정(684조 2,635억원)에 비해 5.3%나 높다.

〈표 4-1〉 공공사회복지지출의 추이¹⁾: 연도별, 기능별

(단위: 십억원, %)

| | 1990 | 1991 | 1992 | 1993 | 1994 | 1995 |
|------------------------------|-------|-------|-------|-------|--------|--------|
| 1. 노령 ²⁾ | 1,166 | 1,471 | 2,028 | 2,661 | 3,317 | 4,346 |
| · 정년퇴직자의 법정퇴직금 | - | - | - | - | - | - |
| 2. 유족 | 298 | 409 | 452 | 494 | 569 | 637 |
| 3.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 ³⁾ | 563 | 778 | 988 | 977 | 1,275 | 1,491 |
| 4. 보건 ⁴⁾ | 2,964 | 3,263 | 3,835 | 4,300 | 4,873 | 5,928 |
| 5. 가족 | 60 | 89 | 111 | 154 | 185 | 262 |
| 6.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 51 | 44 | 103 | 144 | 114 | 168 |
| 7. 실업 | - | - | - | - | - | - |
| · 실업보상 ⁵⁾ | - | - | - | - | - | - |
| 8. 주거 | - | - | - | - | - | - |
| 9. 기타 ⁶⁾ | 335 | 336 | 328 | 359 | 363 | 451 |
| 계 | 5,437 | 6,389 | 7,845 | 9,088 | 10,695 | 13,282 |
| 경상GDP 대비 % | 2.91 | 2.83 | 3.05 | 3.13 | 3.14 | 3.33 |
| 경상GDP (조 원) | 186.7 | 226.0 | 257.5 | 290.7 | 340.2 | 398.8 |

주: 1) 2004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정(교유사업)에 의한 지방비 포함.

2) 정년퇴직자의 법정퇴직금 금액이 포함됨.

3) 장애, 산업재해 및 직업병, 질병 관련 급여임.

4) 정형선, 국민의료비 추계 및 국민 보건계정 구축, 보건복지가족부·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2009에서 재구성.

5)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임.

6) 공공부조사업 중 대부분 현금급여를 포함.

〈표 4-1〉 계속

(단위: 십억원, %)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
|--------|--------|--------|--------|--------|--------|------------------------------|
| 4,617 | 5,416 | 8,873 | 12,935 | 7,479 | 6,591 | 1. 노령 ²⁾ |
| - | - | - | - | - | - | · 정년퇴직자의 법정퇴직금 |
| 720 | 819 | 874 | 900 | 1,040 | 1,172 | 2. 유족 |
| 1,738 | 2,065 | 2,051 | 1,902 | 2,189 | 2,557 | 3.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 ³⁾ |
| 7,543 | 8,746 | 9,648 | 11,352 | 12,779 | 17,647 | 4. 보건 ⁴⁾ |
| 337 | 429 | 549 | 530 | 665 | 941 | 5. 가족 |
| 184 | 360 | 1,627 | 3,266 | 2,313 | 1,429 | 6.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
| 10 | 79 | 799 | 936 | 471 | 845 | 7. 실업 |
| 10 | 79 | 799 | 936 | 471 | 845 | · 실업보상 ⁵⁾ |
| - | - | - | - | - | - | 8. 주거 |
| 576 | 729 | 871 | 1,452 | 1,640 | 2,581 | 9. 기타 ⁶⁾ |
| 15,725 | 18,641 | 25,292 | 33,273 | 28,575 | 33,764 | 계 |
| 3.51 | 3.80 | 5.22 | 6.28 | 4.74 | 5.18 | 경상GDP 대비 % |
| 448.6 | 491.1 | 484.1 | 529.5 | 603.2 | 651.4 | 경상GDP (조 원) |

〈표 4-1〉 계속

(단위: 십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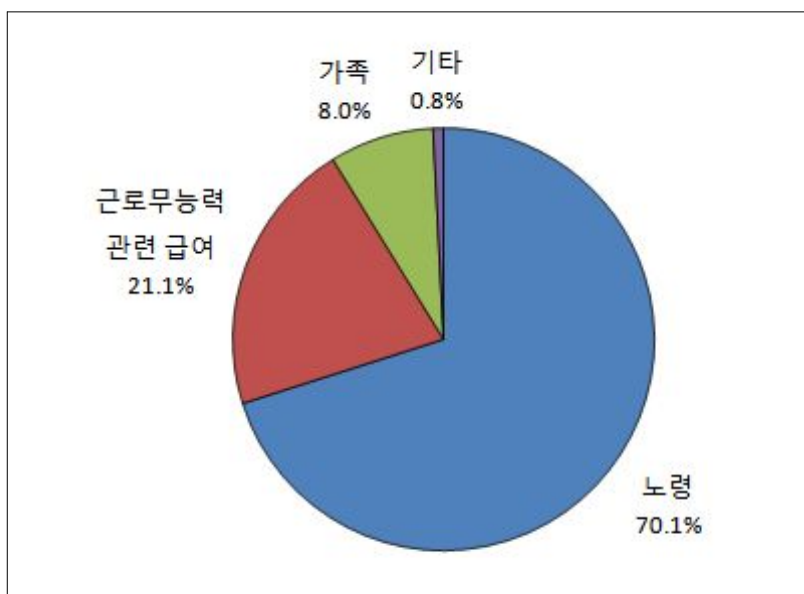
|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
| 1. 노령 ²⁾ | 7,188 | 8,623 | 11,037 | 12,390 | 13,881 | 15,707 |
| · 정년퇴직자의 법정퇴직금 | - | - | - | - | - | - |
| 2. 유족 | 1,364 | 1,597 | 1,825 | 2,013 | 2,235 | 2,471 |
| 3.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 ³⁾ | 3,025 | 3,649 | 4,293 | 4,535 | 5,019 | 5,375 |
| 4. 보건 ⁴⁾ | 18,501 | 20,248 | 22,369 | 25,628 | 29,894 | 33,702 |
| 5. 가족 | 1,018 | 1,268 | 1,969 | 2,211 | 4,644 | 4,461 |
| 6.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 1,342 | 932 | 941 | 1,035 | 1,089 | 1,267 |
| 7. 실업 | 835 | 1,030 | 1,448 | 1,752 | 2,074 | 2,434 |
| · 실업보상 ⁵⁾ | 835 | 1,030 | 1,448 | 1,752 | 2,074 | 2,434 |
| 8. 주거 | - | - | - | - | - | - |
| 9. 기타 ⁶⁾ | 3,029 | 3,256 | 5,488 | 6,018 | 7,488 | 7,547 |
| 계 | 36,303 | 40,602 | 49,370 | 55,581 | 66,325 | 72,964 |
| 경상GDP 대비 % | 5.04 | 5.29 | 5.97 | 6.42 | 7.30 | 7.48 |
| 경상GDP (조 원) | 720.5 | 767.1 | 826.9 | 865.2 | 908.7 | 975.0 |

제2절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우리나라의 법정민간 사회복지지출은 2007년 약 5조 7,320억원으로 추계되었다. 이는 경상GDP 대비 0.59%로 나타났다. 최근 17년간('90~'07)간 우리나라의 법정 민간사회복지지출은 크게 증가하였다. 지출규모로 보면 10.4배가 증가(0.5조 → 5.7조)하였으며, GDP 대비로 보면 1.2배 증가(0.27% → 0.59%)하였다. 또한 연평균 증가율로 볼 때 동 기간 GDP 증가율(10.2%)을 상회한 15.4%로 나타났다.

〈표 4-2〉에서 주요 지출항목의 구성비를 순서대로 살펴보면 ‘노령’(1)이 70.1%(4조 170억원)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령’ 중에 ‘정년퇴직자의 법정퇴직금’이 63.9%(3조 6,630억원)를 차지하고, 이어서 장애, 산업재해 및 직업병, 질병에 대한 급여인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3)가 21.1%(1조 2,110억원)를 차지하며, 다음은 ‘가족’(5)으로 8.0%(4,590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1]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의 구성비율



주: 2004년 자료를 기준으로 한 것임.

〈표 4-2〉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의 추이: 연도별, 기능별

(단위: 십억원, %)

| | 1990 | 1991 | 1992 | 1993 | 1994 | 1995 |
|------------------------------|------|------|------|------|-------|-------|
| 1. 노령 ¹⁾ | 359 | 424 | 521 | 597 | 797 | 1,011 |
| · 정년퇴직자의 법정퇴직금 | 359 | 424 | 521 | 597 | 797 | 984 |
| 2. 유족 | - | - | - | - | - | - |
| 3.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 ²⁾ | 143 | 166 | 190 | 205 | 220 | 253 |
| 4. 보건 ³⁾ | - | - | - | - | - | - |
| 5. 가족 | - | - | - | - | - | 1 |
| 6.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 - | - | - | - | - | - |
| 7. 실업 | - | - | - | - | - | - |
| 8. 주거 | - | - | - | - | - | - |
| 9. 기타 ⁴⁾ | - | - | - | - | - | 9 |
| 계 | 502 | 591 | 711 | 802 | 1,017 | 1,274 |
| 경상GDP 대비 % | 0.27 | 0.26 | 0.28 | 0.28 | 0.30 | 0.32 |

주: 1) 정년퇴직자의 법정퇴직금 금액이 포함됨.

2) 장애, 산업재해 및 직업병, 질병 관련 급여임.

3) 정형선, 국민의료비 추계 및 국민보건계정 구축, 보건복지가족부·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2009에서 재구성.

4) 공공부조사업 중 대부분 현금급여를 포함.

〈표 4-2〉 계속

(단위: 십억원, %)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
|-------|-------|-------|-------|-------|-------|------------------------------|
| 1,124 | 1,915 | 4,286 | 2,679 | 3,570 | 2,726 | 1. 노령 ¹⁾ |
| 1,091 | 1,872 | 4,226 | 2,606 | 3,474 | 2,599 | · 정년퇴직자의 법정퇴직금 |
| - | - | - | - | - | - | 2. 유족 |
| 311 | 379 | 453 | 530 | 662 | 770 | 3.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 ²⁾ |
| - | - | - | - | - | - | 4. 보건 ³⁾ |
| 2 | 86 | 95 | 155 | 214 | 311 | 5. 가족 |
| - | - | - | - | - | - | 6.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
| - | - | - | - | - | - | 7. 실업 |
| - | - | - | - | - | - | 8. 주거 |
| 11 | 16 | 17 | 18 | 19 | 19 | 9. 기타 ⁴⁾ |
| 1,448 | 2,395 | 4,851 | 3,382 | 4,464 | 3,827 | 계 |
| 0.32 | 0.49 | 1.00 | 0.64 | 0.74 | 0.59 | 경상GDP 대비 % |

〈표 4-2〉 계속

(단위: 십억원, %)

|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
| 1. 노령 ¹⁾ | 2,480 | 3,040 | 3,476 | 3,447 | 3,631 | 4,017 |
| · 정년퇴직자의 법정퇴직금 | 2,330 | 2,863 | 3,266 | 3,182 | 3,330 | 3,663 |
| 2. 유족 | - | - | - | - | - | - |
| 3.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 ²⁾ | 937 | 951 | 1,087 | 1,179 | 1,228 | 1,211 |
| 4. 보건 ³⁾ | - | - | - | - | - | - |
| 5. 가족 | 260 | 321 | 362 | 307 | 367 | 459 |
| 6.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 - | - | - | - | - | - |
| 7. 실업 | - | - | - | - | - | - |
| 8. 주거 | - | - | - | - | - | - |
| 9. 기타 ⁴⁾ | 22 | 28 | 21 | 22 | 30 | 44 |
| 계 | 3,700 | 4,341 | 4,946 | 4,954 | 5,256 | 5,732 |
| 경상GDP 대비 % | 0.51 | 0.57 | 0.60 | 0.57 | 0.58 | 0.59 |

제3절 사회복지지출

1. 사회복지지출 추이와 주요 지출항목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은 2007년 약 78조 6,960억원으로 추계되었다. 이는 경상GDP 대비 8.07%로 나타났다. 최근 17년간('90~'07)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은 크게 증가하였다. 지출규모로 보면 12.3배가 증가(5.9조 → 78.7조)하였으며, GDP 대비로 보면 1.5배 증가(3.18% → 8.07%)하였다. 또한 연평균증가율로 볼 때 동 기간 GDP 증가율(10.2%)을 상회한 16.4%로 나타났다.

〈표 4-3〉에서 주요 지출항목의 구성비를 순서대로 살펴보면 '보건'(4)이 33조 7,020억원으로 전체의 42.8%로 가장 높다. 다음으로 '노령'(1)이 19조 7,240억원으로 25.1%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2개 부문이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의 대부분(67.9%)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주요 지출부문의 세부구성 백분율을 보면 '보건'(4)은 건강보험, 의료급여 및 산재보험의 현물급여가 대부분이며 노령(1)은 특수직역연금이 대부분이다.

이어서 장애, 산업재해 및 직업병, 질병에 대한 급여인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3)가 6조 5,870억원으로 사회복지지출의 구성백분율로 볼 때 8.4%를 차지한다. 끝으로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6)이 1조 2,670억원으로 가장 낮음(1.6%)을 알 수 있으며, '주거'(8)는 아직 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공란으로 두었다.

2. 사회복지지출의 부담형태 분석

국민경제의 재화흐름을 생산, 분배, 지출의 각기 다른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는 삼면평가의 원칙을 사회복지지출에 적용하여 기능, 제도, 재원의 삼면에서 부담형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기능측면은 이미 본장 제1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적 위험인 노령, 무능력(장애·산업재해·질병), 실업 등으로 분류된 9개 부문 〈표 4-3〉이며, 제도측면은 지금까지 OECD 추계방법에 따라 기능별로 분류한 내용을 우리나라의 제도별로 재분류한 것이다(표 4-4 참조). 그리고 재원측면은 사회복지지출을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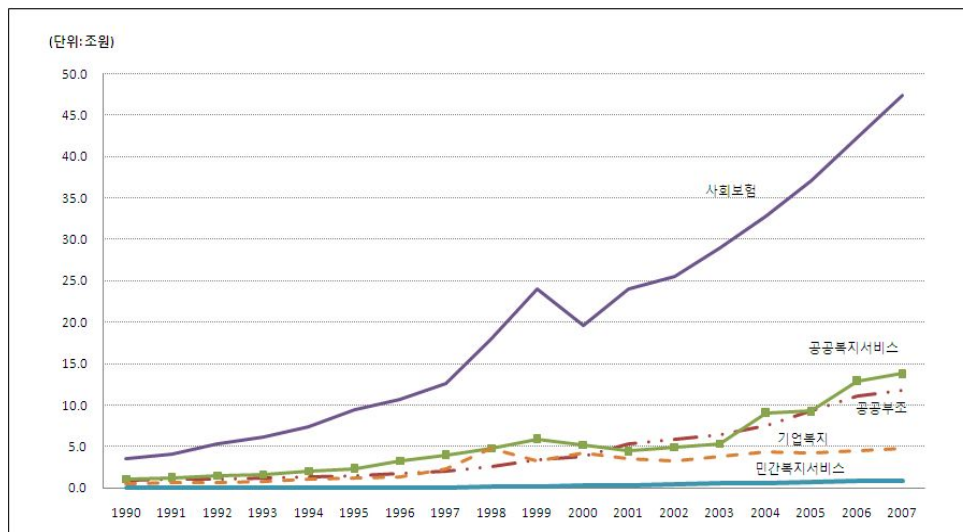
담주체별로 분류하여 작성하였다(표 4-5 참조).

2007년도의 세 가지 측면의 백분율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기능측면은 이미 뒤의 〈표 4-3〉에서 ‘보건’(4), ‘실업’(7), 그리고 ‘노령’(퇴직금 포함, 1)의 3개 부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제도측면을 〈표 4-4〉에서 보면, 사회보험이 60.2%로 가장 높으며, 공공복지서비스 17.5%, 공공부조 15.0%, 기업복지 6.1% 그리고 민간복지서비스 1.2%의 순으로 지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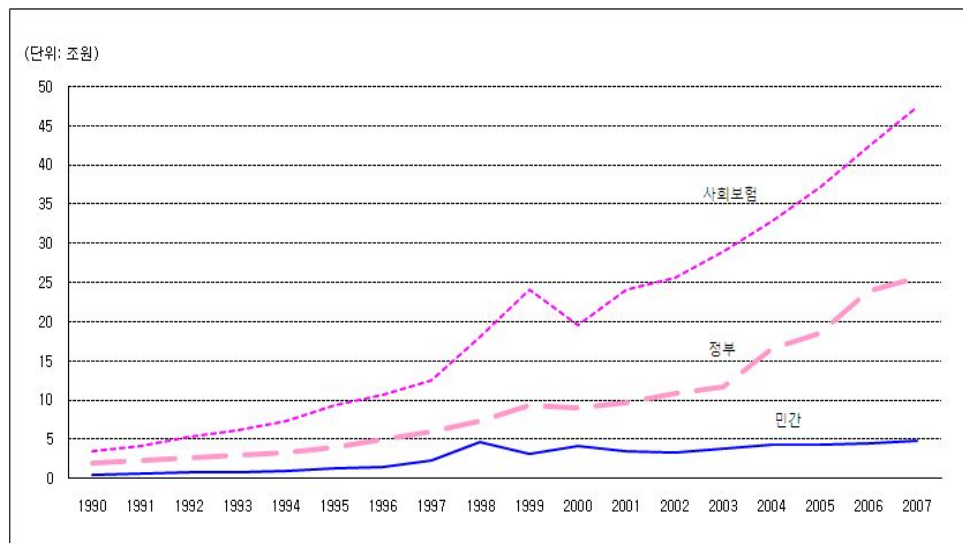
또한 지난 18년간의 지출추이를 [그림 4-2]에서 살펴보면 공공부조와 공공복지서비스는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사회보험, 기업복지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1998년을 기점으로 기업복지가 급격히 증가하여 사회보험을 추월하다 1999년도 다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8년도 IMF 구제금융 하에서 대규모 실직과 퇴직의 발생에 따라 지출된 ‘법정퇴직금’의 일시적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4-2] 사회복지지출의 추이: 제도별(1990~2007)



〈표 4-5〉에서 보는 것처럼 재원별 구성비는 제도측면과 같이 사회보험 60.2%, 일반정부 32.5%, 그리고 민간부문 7.3%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18년간의 지출추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그림 4-3]과 같다. 먼저 1990년부터 가장 큰 재원을 보였던 사회보험은 1999년 IMF 이후 한차례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그 이후에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다. 이는 IMF 이후 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퇴직자들의 반환일시금을 포함한 연금수령의 급증, 국민의 의료이용 증가 등으로 인한 연금보험과 건강보험의 지출증가 영향이 큰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공공부조와 공공복지서비스 등 정부지출은 사회보험에 비해서 다소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고, IMF 이후 한차례 소폭 증가하였으나 이후에는 완만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04년 이후 정부지출 역시 다소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데,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해 최근 기초노령연금의 도입,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 돌봄서비스와 관련된 지출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민간지출은 여전히 가장 낮은 수준의 재원이다. 이 역시 IMF 이후 한 차례 증가했으나 그 이후 변화를 보이지는 않는다.

[그림 4-3] 사회복지지출의 추이: 재원별(1990~2007)



〈표 4-3〉 사회복지지출의 추이¹⁾: 연도별, 기능별

(단위: 십억원, %)

| | 1990 | 1991 | 1992 | 1993 | 1994 | 1995 |
|------------------------------|-------|-------|-------|-------|--------|--------|
| 1. 노령 ²⁾ | 1,525 | 1,895 | 2,549 | 3,258 | 4,114 | 5,357 |
| · 정년퇴직자의 법정퇴직금 | 359 | 424 | 521 | 597 | 797 | 984 |
| 2. 유족 | 298 | 409 | 452 | 494 | 569 | 637 |
| 3.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 ³⁾ | 705 | 944 | 1,178 | 1,182 | 1,495 | 1,744 |
| 4. 보건 ⁴⁾ | 2,964 | 3,263 | 3,835 | 4,300 | 4,873 | 5,928 |
| 5. 가족 | 60 | 89 | 111 | 154 | 185 | 263 |
| 6.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 51 | 44 | 103 | 144 | 114 | 168 |
| 7. 실업 | - | - | - | - | - | - |
| · 실업보상 ⁵⁾ | | - | - | - | - | - |
| 8. 주거 | - | - | - | - | | - |
| 9. 기타 ⁶⁾ | 335 | 336 | 328 | 359 | 363 | 459 |
| 계 | 5,939 | 6,979 | 8,556 | 9,890 | 11,712 | 14,557 |
| 경상GDP 대비 % | 3.18 | 3.09 | 3.32 | 3.40 | 3.44 | 3.65 |

주: 1) 2004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정(고유사업)에 의한 지방비 포함.

2) 정년퇴직자의 법정퇴직금 금액이 포함됨.

3) 장애, 산업재해 및 직업병, 질병 관련 급여임.

4) 정형선, 국민의료비 추계 및 국민보건계정 구축, 보건복지가족부·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009에서 재구성.

5)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임.

6) 공공부조사업 중 대부분 현금급여를 포함.

〈표 4-3〉 계속

(단위: 십억원, %)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
|--------|--------|--------|--------|--------|--------|------------------------------|
| 5,742 | 7,330 | 13,159 | 15,614 | 11,048 | 9,318 | 1. 노령 ²⁾ |
| 1,091 | 1,872 | 4,226 | 2,606 | 3,474 | 2,599 | · 정년퇴직자의 법정퇴직금 |
| 720 | 819 | 874 | 900 | 1,040 | 1,172 | 2. 유족 |
| 2,049 | 2,443 | 2,504 | 2,432 | 2,851 | 3,327 | 3.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 ³⁾ |
| 7,543 | 8,746 | 9,648 | 11,352 | 12,779 | 17,647 | 4. 보건 ⁴⁾ |
| 339 | 515 | 644 | 685 | 879 | 1,252 | 5. 가족 |
| 184 | 360 | 1,627 | 3,266 | 2,313 | 1,429 | 6.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
| 10 | 79 | 799 | 936 | 471 | 845 | 7. 실업 |
| 10 | 79 | 799 | 936 | 471 | 845 | · 실업보상 ⁵⁾ |
| - | - | - | - | - | - | 8. 주거 |
| 586 | 745 | 888 | 1,469 | 1,659 | 2,600 | 9. 기타 ⁶⁾ |
| 17,173 | 21,036 | 30,144 | 36,655 | 33,040 | 37,590 | 계 |
| 3.83 | 4.28 | 6.23 | 6.92 | 5.48 | 5.77 | 경상GDP 대비 % |

〈표 4-3〉 계속

(단위: 십억원, %)

|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
| 1. 노령 ²⁾ | 9,668 | 11,663 | 14,513 | 15,836 | 17,512 | 19,724 |
| · 정년퇴직자의 법정퇴직금 | 2,330 | 2,863 | 3,266 | 3,182 | 3,330 | 3,663 |
| 2. 유족 | 1,364 | 1,597 | 1,825 | 2,013 | 2,235 | 2,471 |
| 3.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 ³⁾ | 3,962 | 4,600 | 5,381 | 5,713 | 6,248 | 6,587 |
| 4. 보건 ⁴⁾ | 18,501 | 20,248 | 22,369 | 25,628 | 29,894 | 33,702 |
| 5. 가족 | 1,278 | 1,589 | 2,330 | 2,518 | 5,010 | 4,920 |
| 6.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 1,342 | 932 | 941 | 1,035 | 1,089 | 1,267 |
| 7. 실업 | 835 | 1,030 | 1,448 | 1,752 | 2,074 | 2,434 |
| · 실업보상 ⁵⁾ | 835 | 1,030 | 1,448 | 1,752 | 2,074 | 2,434 |
| 8. 주거 | - | - | - | - | - | - |
| 9. 기타 ⁶⁾ | 3,052 | 3,284 | 5,509 | 6,040 | 7,519 | 7,591 |
| 계 | 40,002 | 44,943 | 54,316 | 60,535 | 71,581 | 78,696 |
| 경상GDP 대비 % | 5.55 | 5.86 | 6.57 | 7.00 | 7.88 | 8.07 |

〈표 4-4〉 제도별 사회복지지출 현황(1990~2007)

(단위: 십억원)

| 제도 | 세부제도 | 1990 | 1991 | 1992 | 1993 | 1994 | 1995 |
|-----------------------|-------------------------|-------|-------|-------|-------|--------|--------|
| 합 계 | | 5,939 | 6,979 | 8,556 | 9,890 | 11,712 | 14,557 |
| 공공부조 | 소 계 | 861 | 1,035 | 1,127 | 1,258 | 1,324 | 1,524 |
| | 생활보호 ¹⁾ | 821 | 1,014 | 1,126 | 1,246 | 1,320 | 1,490 |
| (사회보상) | 재해구호 ²⁾ | 40 | 21 | 1 | 12 | 4 | 33 |
| | 북한이탈주민지원 | - | - | - | - | - | 1 |
| | 고엽제, 위안부보호 | - | - | - | - | - | - |
| 공공복지 서비스 | 소 계 | 1,041 | 1,240 | 1,460 | 1,633 | 2,037 | 2,366 |
| | 시설보호 ³⁾ | 52 | 64 | 74 | 85 | 123 | 138 |
| | 재가복지 ⁴⁾ | 104 | 128 | 174 | 239 | 297 | 424 |
| | 근로복지 ⁵⁾ | 38 | 30 | 90 | 107 | 237 | 319 |
| | 보건의료 ⁶⁾ | 847 | 1,018 | 1,122 | 1,202 | 1,380 | 1,485 |
| | 주거복지 | - | - | - | - | - | - |
| | 교육복지 | - | - | - | - | - | - |
| 사회보험 | 소 계 | 3,534 | 4,115 | 5,256 | 6,198 | 7,334 | 9,392 |
| | 연금 ⁷⁾ | 1,235 | 1,571 | 2,141 | 2,785 | 3,453 | 4,482 |
| | 의료보장 ⁸⁾ | 1,760 | 1,842 | 2,183 | 2,560 | 2,902 | 3,774 |
| | 산업재해보상보험 | 539 | 702 | 932 | 853 | 979 | 1,134 |
| | 고용보험 | - | - | - | - | - | 2 |
| 민간복지서비스 ⁹⁾ | | - | - | - | - | - | 55 |
| 기업복지 | 소 계 | 502 | 591 | 711 | 802 | 1,017 | 1,220 |
| | 법정퇴직금 | 359 | 424 | 521 | 597 | 797 | 984 |
| | 산전후휴가급여 | - | - | - | - | - | - |
| | 유급질병휴가급여 ¹⁰⁾ | 143 | 166 | 190 | 205 | 220 | 235 |

주: 1) 생계보호, 일시구호, 교육보호, 부랑인시설보호, 저소득층에 대한 직업훈련, 의료급여, 국가보훈.

2) 주택복구비, 이재민구호비.

3) 장애인복지시설보호, 노인시설보호, 아동시설보호, 모자보호 및 선도보호시설 등.

4) 재가장애인보호, 재가노인지원, 아동건강육성, 재가부녀 및 모자가정지원, 사회복지관 운영 등.

5) 장애인특수학교운영비, 고용서비스, 직업훈련기관 지원, 한국산업인력공단·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직업훈련 및 운영비,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비 등.

6) 중앙 및 지방정부의 보건 지출.

7)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직우체국직원연금.

〈표 4-4〉 계속

(단위: 십억원)

| 제도 | 세부제도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
| 합 계 | | 17,173 | 21,036 | 30,144 | 36,655 | 33,040 | 37,590 |
| 공공부조 | 소 계 | 1,781 | 2,077 | 2,512 | 3,352 | 3,810 | 5,265 |
| | 생활보호 ¹⁾ | 1,751 | 2,069 | 2,449 | 3,286 | 3,784 | 5,239 |
| (사회보상) | 재해구호 ²⁾ | 29 | 7 | 62 | 65 | 19 | 10 |
| | 북한이탈주민지원 | 1 | 1 | 1 | 1 | 7 | 16 |
| | 고엽제, 위안부보호 | - | - | - | - | - | - |
| 공공복지 서비스 | 소 계 | 3,259 | 3,973 | 4,768 | 5,921 | 5,186 | 4,463 |
| | 시설보호 ³⁾ | 163 | 216 | 216 | 197 | 258 | 362 |
| | 재가복지 ⁴⁾ | 580 | 797 | 840 | 915 | 1,152 | 1,357 |
| | 근로복지 ⁵⁾ | 355 | 601 | 1,516 | 3,015 | 2,149 | 1,266 |
| | 보건의료 ⁶⁾ | 2,161 | 2,359 | 2,004 | 1,626 | 1,421 | 1,101 |
| | 주거복지 | - | - | - | - | - | - |
| | 교육복지 | - | - | 192 | 168 | 206 | 377 |
| 사회보험 | 소 계 | 10,685 | 12,592 | 18,018 | 23,999 | 19,579 | 24,036 |
| | 연금 ⁷⁾ | 4,728 | 5,511 | 8,945 | 13,052 | 7,656 | 6,712 |
| | 의료보장 ⁸⁾ | 4,578 | 5,407 | 6,512 | 8,235 | 9,545 | 14,218 |
| | 산업재해보상보험 | 1,355 | 1,556 | 1,451 | 1,274 | 1,456 | 1,745 |
| | 고용보험 | 24 | 118 | 1,110 | 1,438 | 922 | 1,361 |
| 민간복지서비스 ⁹⁾ | | 68 | 96 | 134 | 172 | 272 | 348 |
| 기업복지 | 소 계 | 1,380 | 2,299 | 4,717 | 3,210 | 4,193 | 3,479 |
| | 법정퇴직금 | 1,091 | 1,872 | 4,226 | 2,606 | 3,474 | 2,599 |
| | 산전후휴가급여 | - | 85 | 94 | 153 | 212 | 309 |
| | 유급질병휴가급여 ¹⁰⁾ | 289 | 343 | 397 | 451 | 506 | 571 |

8) 직장·지역·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건강보험.

9) 취약계층을 위한 교통·통신요금 등의 감면액임.

10) 근로자의 유급질병휴가에 대한 급여임.

〈표 4-4〉 계속

(단위: 십억원)

| 제도 | 세부제도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
| 합 계 | | 40,002 | 44,943 | 54,316 | 60,535 | 71,581 | 78,696 |
| 공공부조 | 소 계 | 5,850 | 6,370 | 7,545 | 9,246 | 11,044 | 11,805 |
| | 생활보호 ¹⁾ | 5,528 | 6,137 | 7,468 | 9,167 | 10,831 | 11,673 |
| (사회보상) | 재해구호 ²⁾ | 297 | 197 | 35 | 28 | 168 | 79 |
| | 북한이탈주민지원 | 25 | 36 | 42 | 50 | 43 | 52 |
| | 고엽제, 위안부보호 | - | - | - | 1 | 2 | 2 |
| 공공복지서비스 | 소 계 | 4,910 | 5,315 | 9,066 | 9,258 | 12,947 | 13,776 |
| | 시설보호 ³⁾ | 442 | 458 | 752 | 161 | 1,004 | 760 |
| | 재가복지 ⁴⁾ | 2,138 | 2,548 | 2,755 | 3,129 | 4,874 | 5,536 |
| | 근로복지 ⁵⁾ | 860 | 366 | 320 | 269 | 248 | 252 |
| | 보건의료 ⁶⁾ | 1,118 | 1,543 | 1,602 | 2,358 | 2,470 | 3,439 |
| | 주거복지 | - | - | 3,161 | 2,776 | 3,763 | 3,159 |
| | 교육복지 | 352 | 400 | 476 | 565 | 588 | 631 |
| 사회보험 | 소 계 | 25,542 | 28,916 | 32,765 | 37,070 | 42,335 | 47,383 |
| | 연금 ⁷⁾ | 7,330 | 8,912 | 10,294 | 12,095 | 13,332 | 15,100 |
| | 의료보장 ⁸⁾ | 14,849 | 15,881 | 17,479 | 19,357 | 22,798 | 25,398 |
| | 산업재해보상보험 | 2,016 | 2,482 | 2,860 | 3,026 | 3,164 | 3,242 |
| | 고용보험 | 1,347 | 1,641 | 2,132 | 2,592 | 3,041 | 3,642 |
| 민간복지서비스 ⁹⁾ | | 430 | 525 | 617 | 715 | 803 | 915 |
| 기업복지 | 소 계 | 3,269 | 3,816 | 4,329 | 4,240 | 4,453 | 4,817 |
| | 법정퇴직금 | 2,330 | 2,863 | 3,266 | 3,182 | 3,330 | 3,663 |
| | 산전후휴가급여 | 260 | 321 | 362 | 307 | 366 | 459 |
| | 유급질병휴가급여 ¹⁰⁾ | 679 | 633 | 701 | 751 | 757 | 695 |

〈표 4-5〉 재원별 사회복지지출 현황(1990~2007)

(단위: 십억원, %)

| 연 도 | 총 계 | 공 공 부 문 | | |
|------------|---------|---------|-------------------|--------------------|
| | | 계 | 정 부 ¹⁾ | 사회보험 ²⁾ |
| 1990 | 5,939 | 5,437 | 1,902 | 3,534 |
| 1991 | 6,979 | 6,389 | 2,275 | 4,115 |
| 1992 | 8,556 | 7,845 | 2,587 | 5,256 |
| 1993 | 9,890 | 9,088 | 2,891 | 6,198 |
| 1994 | 11,712 | 10,695 | 3,361 | 7,334 |
| 1995 | 14,557 | 13,282 | 3,890 | 9,392 |
| 1996 | 17,173 | 15,725 | 5,040 | 10,685 |
| 1997 | 21,036 | 18,641 | 6,050 | 12,592 |
| 1998 | 30,144 | 25,292 | 7,280 | 18,018 |
| 1999 | 36,655 | 33,273 | 9,273 | 23,999 |
| 2000 | 33,040 | 28,575 | 8,996 | 19,579 |
| 2001 | 37,590 | 33,764 | 9,728 | 24,036 |
| 2002 | 40,002 | 36,303 | 10,760 | 25,542 |
| 2003 | 44,943 | 40,602 | 11,685 | 28,916 |
| 2004 | 54,316 | 49,370 | 16,611 | 32,765 |
| 2005 | 60,535 | 55,581 | 18,504 | 37,070 |
| 2006 | 71,581 | 66,325 | 23,991 | 42,335 |
| 2007 | 78,696 | 72,964 | 25,581 | 47,383 |
| ('07년 백분율) | (100.0) | (92.7) | (32.5) | (60.2) |

주: 1)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출금액이며 2004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 포함.

2) 4대 사회보험의 급여액임.

〈표 4-5〉 계속

(단위: 십억원, %)

| 민 간 부 문 | | | | | 연 도 |
|---------|-------|---------|----------|-----------------------|------------|
| 계 | 법정퇴직금 | 산전후휴가급여 | 유급질병휴가급여 | 민간복지서비스 ³⁾ | |
| 502 | 359 | - | 143 | - | 1990 |
| 591 | 424 | - | 166 | - | 1991 |
| 711 | 521 | - | 190 | - | 1992 |
| 802 | 597 | - | 205 | - | 1993 |
| 1,017 | 797 | - | 220 | - | 1994 |
| 1,274 | 984 | - | 235 | 55 | 1995 |
| 1,448 | 1,091 | - | 289 | 68 | 1996 |
| 2,395 | 1,872 | 85 | 343 | 96 | 1997 |
| 4,851 | 4,226 | 94 | 397 | 134 | 1998 |
| 3,382 | 2,606 | 153 | 451 | 172 | 1999 |
| 4,464 | 3,474 | 212 | 506 | 272 | 2000 |
| 3,827 | 2,599 | 309 | 571 | 348 | 2001 |
| 3,700 | 2,330 | 260 | 679 | 430 | 2002 |
| 4,341 | 2,863 | 321 | 633 | 525 | 2003 |
| 4,946 | 3,266 | 362 | 701 | 617 | 2004 |
| 4,954 | 3,182 | 307 | 751 | 715 | 2005 |
| 5,256 | 3,330 | 366 | 757 | 803 | 2006 |
| 5,732 | 3,663 | 459 | 695 | 915 | 2007 |
| (7.3) | (4.7) | (0.6) | (0.9) | (1.2) | ('07년 백분율) |

3) 취약계층을 위한 교통·통신요금 등의 감면액임.

제4절 총사회복지지출

우리나라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전체 망라한 총사회복지지출은 2007년에 약 98조 6,500억원으로 요소GDP의 11.44%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참고로 총사회복지지출과 순사회복지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추계할 때에는 요소 GDP(GDP at factor costs)를 사용하고 있다(Adema, W., 1999)⁴⁹⁾.

총사회복지지출은 〈표 4-6〉에서 공공부문의 지출(1)과 법정민간부문의 지출(2)의 합인 사회복지지출(1+2)에 자발적민간지출(3)이 추가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자발적민간지출에는 민간모금단체의 복지시설 등에 대한 배분액, 종교단체의 사회복지사업 관련 지출, 그리고 기업의 자발적 급여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수행한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지원금이 추가되었다.

각 부문별 백분율을 살펴보면 2007년도의 총공공지출(1)은 74%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 총법정민간지출(2)이 5.8%를, 마지막으로 총자발적민간지출(3)이 20.2%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OECD 국가의 총사회복지지출 중 공공지출의 비중은 스웨덴, 독일이 90%, 덴마크 71%가 차지하고 있으며 자발적민간지출의 비중이 높은 미국도 61%이다. 이를 볼 때 우리의 총사회복지지출 구성을 보면 공공부문의 지출비중이 낮음을 알 수 있다.

49) 요소GDP란 시장가격에 의한 GDP에 정부부문(간접세, 정부보조)을 제외한 요소비용만을 고려한 GDP를 말한다. 이를 산식으로 나타내면 “GDP at factor cost = GDP at market cost - (간접세 + 정부보조금)”으로 나타낼 수 있다.

정부부문을 제외하는 이유는 정부가 재화와 용역에 간접세를 부과하므로 시장가격은 간접세만큼 높아지는 반면 정부가 기업에 지급한 경상보조금만큼 재화와 용역의 시장가격은 낮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요소 GDP는 실제 생산에 참여한 경제주체들(개인과 기업)의 몫인 요소비용(factor cost)과 일치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총사회복지지출과 순사회복지지출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할 때 분모에 시장가격에 의한 GDP보다 요소가격에 의한 GDP를 사용하고 있다. 참고로 직접세는 국민계정의 본원소득에서 고려하지 않고 제2차 소득분배계정에 포함하고 있다.

〈표 4-6〉 우리나라의 총사회복지지출 규모(2000~2007)

(단위: 십억원, 요소GDP 대비 %)

| 구성항목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
| 총사회복지지출(1+2+3) | 45,134 | 50,481 | 54,369 | 61,554 | 67,619 | 75,513 | 88,981 | 98,650 |
| 요소GDP 대비 % | 8.47 | 8.80 | 8.60 | 9.11 | 9.21 | 9.83 | 11.06 | 11.44 |
| 1. 총공공지출 ¹⁾ | 28,575 | 33,764 | 36,303 | 40,602 | 49,370 | 55,581 | 66,325 | 72,964 |
| 2. 총법정민간지출 ²⁾ | 4,464 | 3,827 | 3,700 | 4,341 | 4,946 | 4,954 | 5,256 | 5,732 |
| 3. 총자발적민간지출 ³⁾ | 12,094 | 12,890 | 14,366 | 16,611 | 13,303 | 14,978 | 17,400 | 19,954 |

주: 1)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보험의 급여

2) 법정퇴직금, 산전후휴가급여, 유급질병휴가급여, 취약계층을 위한 교통·통신요금 등의 감면

3) 민간모금단체, 종교단체, 기업의 법정 외 복리비,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민간의료비 등. 2003년 이후 감소하는 이유는 기업의 법정 외 복리비가 감소하기 때문임. 즉, 1인당 법정 외 복리비가 2002년 19만7천원 에서 2003년 22만7천원을 최고로 2004년부터 16만2천원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상용근로자 수는 일정함.

제5절 순사회복지지출

우리나라의 순사회복지지출은 2007년에 약 101조 1,790억원으로 요소GDP 대비 11.73%로 추계되었다. 금액으로 볼 때 순사회복지지출은 총사회복지지출에 비하여 2조 5,290억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총사회복지지출에서 조세부담이 조세 혜택보다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전소득자가 부담하는 직·간접세가 개인 또는 민간부문의 복지증진과 투자 유인을 위한 조세혜택 보다 낮다는 것이다(표 4-7 참고).

〈표 4-7〉 우리나라의 순사회복지지출 규모(2000~2007)

(단위: 십억원, 요소GDP 대비 %)

| 구성항목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
| 1. 총사회복지지출 | 45,134 | 50,481 | 54,369 | 61,554 | 67,619 | 75,513 | 88,981 | 98,650 |
| 2. 조세부담 ¹⁾ | 2,246 | 2,535 | 2,932 | 3,534 | 3,947 | 4,307 | 4,610 | 4,592 |
| 직접세 및 사회보험료 | 131 | 244 | 239 | 267 | 374 | 392 | 449 | 534 |
| 간접세 | 2,115 | 2,292 | 2,693 | 3,267 | 3,573 | 3,914 | 4,161 | 4,058 |
| 3. 조세혜택 ²⁾ | 1,660 | 2,024 | 3,990 | 4,709 | 4,840 | 5,659 | 6,107 | 7,121 |
| T1 | 1,660 | 2,024 | 3,990 | 4,709 | 4,840 | 5,659 | 6,107 | 7,121 |
| T2 | - | - | - | - | - | - | - | - |
| 순사회복지지출(1-2+3-T2) | 44,547 | 49,970 | 55,427 | 62,729 | 68,512 | 76,865 | 90,478 | 101,179 |
| 요소GDP 대비 % | 8.36 | 8.71 | 8.76 | 9.28 | 9.33 | 10.00 | 11.24 | 11.73 |

주: 1) 직접세는 기업복지의 법정퇴직금, 산전후휴가급여, 유급질병휴가급여에 부과된 소득세입(참고로 사회보험의 각종 급여는 면세입). 간접세 추계는 공공부조 및 사회보험의 현금급여, 기업복지 중 현금급여(법정퇴직금, 산전후휴가급여, 유급질병 휴가급여), TBSPs의 평 균간접세율로 추계함.

2) 근로소득 공제제도에 따른 감세, 장애인용 자동차 면세액,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감면, 그리고 비영리공익법인에 대한 재산세 등의 감면임. 단, 기업의 사회복지관련 지출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자료수집의 한계로 제외함.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의 순사회복지지출은 사회복지지출에 비하여 몇 %포인트나 증가할 것이며, 순사회복지지출이 약 23% 수준에서 수렴하는 복지선진 국가의 몇 % 수준인가를 살펴보자. 우리의 2007년도 사회복지지출은 요소GDP 대비 9.12%, 순사회복지지출은 11.73%로 사회복지지출 보다 순사회복지지출 수준이

약 2.61%포인트가 높았다(표 4-8 참조). 또한 순사회복지지출 수준은 OECD평균 (23.2%기준, 통계제출 26개국)의 50.6%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4-8〉 사회복지지출과 순사회복지지출의 비교

| | 사회복지지출 | | 순사회복지지출 | |
|-------------------|--------|--------|---------|--------|
| | 한국 | OECD평균 | 한국 | OECD평균 |
| 요소GDP 대비 % | 9.12 | 24.1 | 11.73 | 23.2 |
| OECD평균 대비 한국수준(%) | 37.8 | | 50.6 | |

주: OECD평균은 2005년도 자료이며 한국은 2007년 자료임.

05

K
I
H
A
S
A

국제비교

5장 국제비교

제1 절 사회복지지출 수준의 국제비교⁵⁰⁾

1. 사회복지지출 수준의 국제비교

사회복지지출 수준을 OECD 주요 회원국과 비교하면 <표 5-1> 과 같다. 우리나라는 경상GDP 대비 8.07%(2007)로 OECD평균(21.2%)의 38%에 불과하다. 또한 OECD 회원국 중 복지후진국이라 불리는 미국(16.3%), 일본(19.1%)의 약 50%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사회복지지출 수준이 경상GDP 대비 30% 수준인 스웨덴(31.85%), 프랑스(29.08%), 독일(28.40%) 등은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의 3배 이상의 수준이다.

<표 5-1> OECD 주요 회원국의 사회복지지출의 비교(2005)¹⁾

(단위: 경상GDP 대비 %)

| OECD 평균 | 한국 | 스웨덴 | 프랑스 | 독일 | 덴마크 | 영국 | 네덜란드 | 일본 | 미국 |
|------------|----------------|------|------|------|------|------|------|------|------|
| 21.2 | 7.00 (8.07) | 29.8 | 29.5 | 27.9 | 27.3 | 22.1 | 21.6 | 19.1 | 16.3 |

주: ()은 본 연구의 결과인 2007년 자료임.
자료: 외국자료는 Adema and Ladaique, 2009

이러한 단순비교방법은 우리나라의 상대적 위상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현

50) 이에 대한 국가별 상세통계와 OECD 평균은 <부표 23> 에서 <부표 28> 까지 참조할 수 있다.

재 OECD 국가들의 평균적인 국민부담률이나 인구고령화 수준은 한국에 비해 약 1.4~2배 이상 높은 상태이다. 또한 복지국가유형에 따라 재원의 배분구조에 큰 차이가 있다. 다만, 복지국가유형에 대해서는 아직 국내학자들간 어느 유형을 모델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정립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OECD 국가들의 평균치를 우리의 지향점으로 설정하여 비교하기도 한다.

2. 총사회복지지출 및 순사회복지지출⁵¹⁾

주요 OECD 국가의 요소GDP 대비 총사회복지지출을 보면, 우리나라는 11.44%로 미국의 28.0%, 일본의 23.4%에 비해 낮다. 특히 스웨덴, 덴마크, 독일 등은 약 34%를 넘어 우리의 약 3배 이상이 된다⁵²⁾. 다시 말해 우리나라의 총사회복지지출은 OECD 회원국의 약 30~54%에 불과한 수준이다.

요소GDP 대비 순사회복지지출 역시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은 11.73%로 일본(22.8%), 미국(27.2%), 영국(29.5%), 덴마크(25.4%), 그리고 스웨덴(29.2%)에 비해 약 37~55%의 수준이다. 즉, 우리의 순사회복지지출의 격차는 총사회복지지출(30~54%)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한편 <표 5-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요소GDP 대비 총사회복지지출과 순사회복지지출의 차이는 0.2~10% 포인트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스웨덴과 덴마크는 -9%포인트 내외로 나타났으며, 독일과 영국이 -3%포인트 근처, 미국과 캐나다가 -1%포인트 근처, 그리고 일본이 -6%포인트 순이었다. 반면, 한국은 이들 국가와 달리 +0.3%포인트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이 양의 값(+)포인트로 나타난 이유는 사회복지 지출에 부과되는 조세보다 조세혜택의 넓고 다양한제도 때문인 것이다.

51) OECD가 총사회복지지출과 순사회복지지출에 대해 국민계정 구계열로 발표한 2002년도 자료는 있으나 신계열의 본 연구결과와 비교할 수 없다. 따라서 OECD의 신계열 내부자료를 입수(2003년도)하여 활용하는 만큼 추후 일부 숫자의 변화가능성이 있다.

52) 한국의 지출통계는 2007년 기준인 반면, 스웨덴, 덴마크, 독일, 영국, 캐나다, 미국, 일본의 지출통계는 2003년 기준이다.

〈표 5-2〉 OECD 주요 회원국의 총사회복지지출 및 순사회복지지출 비교(2005)¹⁾

(단위: 요소GDP 대비 %)

| | 한국 | 스웨덴 | 덴마크 | 독일 | 영국 | 캐나다 | 미국 | 일본 |
|------------|------------------|------|------|------|------|------|------|------|
| 총사회복지지출(A) | 9.83 (11.44) | 37.9 | 34.8 | 33.3 | 32.4 | 24.8 | 28.0 | 23.4 |
| 순사회복지지출(B) | 10.00 (11.73) | 29.2 | 25.4 | 30.2 | 29.5 | 23.3 | 27.2 | 22.8 |
| 증감(B-A) | 0.29 | -8.7 | -9.4 | -3.1 | -2.9 | -1.5 | -0.8 | -0.6 |

주: 1) ()은 본 연구의 결과인 2007년 자료임.
자료: 외국자료는 Adema and Ladaique, 2009

3. 사회복지지출과 순사회복지지출

주요 OECD 국가의 요소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을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9.12%로 미국의 17.5%, 일본의 20.7%에 비해 낮다. 스웨덴, 덴마크, 독일은 30%를 넘어 우리의 3배 이상이 된다⁵³⁾. 다시 말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은 OECD 주요 회원국의 24~57%에 불과한 수준이다(표 5-3참조).

다음으로 OECD 국가의 요소GDP 대비 사회복지지출과 순사회복지지출의 격차를 살펴보면 복지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덴마크, 스웨덴, 독일은 사회복지지출에 비해 순사회복지지출이 낮은 경향을 보이는 반면에 영국, 미국, 일본과 한국은 사회복지지출에 비해 순사회복지지출이 높으며, 영국과 일본은 순사회복지지출이 사회복지지출보다 10% 이상 크고, 우리나라는 28%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은 순사회복지지출이 사회복지지출보다 50%나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자발적민간급여와 조세제도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덴마크와 스웨덴에서 자발적민간급여는 사회복지지출을 약 3%(요소GDP 대비) 증가시키는데 이러한 수치는 일본 2.7%, 영국 7.2%로 나타난다. 특히 미국에서 자발적 민간급여는 사회복지지출을 10.5%나 증가시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총사회복지지출(표 5-2)에서 사회복지지출(표 5-3)을 차감한 것이다. 조세제도에 의해 감소되는 폭은 〈표 5-2〉의 “증감”을 통해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

53) 한국의 지출통계는 2007년 기준인 반면, 스웨덴, 덴마크, 독일, 영국, 캐나다, 미국, 일본의 지출통계는 2003년 기준이다.

로 미국은 소득 수준에 비하여 사회복지지출 수준은 낮지만 순사회복지지출 수준이 복지선진국가와 비슷하게 나타난다.

〈표 5-3〉 사회복지지출과 순사회복지지출의 국제비교(2005)1)

(단위: 요소GDP 대비 %)

| | 한국 | 덴마크 | 스웨덴 | 독일 | 영국 | 미국 | 일본 |
|-----------------|------------------|---------|---------|--------|--------|--------|--------|
| 사회복지지출(A) | 7.88 (9.12) | 32.0 | 35.1 | 31.2 | 25.2 | 17.5 | 20.7 |
| 순사회복지지출(B) | 10.00 (11.73) | 25.4 | 29.2 | 30.2 | 29.5 | 27.2 | 22.8 |
| 증감(C=B-A) | 2.61 | -6.6 | -5.9 | -1.0 | 4.3 | 9.7 | 2.1 |
| 증감률(%)(C/Ax100) | (28.6) | (-20.6) | (-16.8) | (-3.2) | (17.1) | (55.4) | (10.1) |

주: 1) ()은 본 연구결과로 2007년 자료임.
 자료: 외국자료는 Adema and Ladaique, 2009

제2 절 노령연금지출과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국제비교

1. 문제의 제기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에서 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낮다⁵⁴⁾. 그 이유는 2008년에 이르러서야 완전 연금 수령자가 배출될 정도로 국민연금 도입 기간이 짧기 때문이다⁵⁵⁾. 서구 선진국들이 1950년대 전후로 사회보험 혹은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고 1970년대 전후부터 연금이 사회복지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나날이 증가했던 반면에 한국은 1988년에 이르러 연금제도가 시행되었으므로 그 시간적 격차가 약 40년에 이른다. 따라서 OECD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던 1990년대에 한국 역시 연금개혁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었으나 선진국이 처한 사회경제적 현실과는 거리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노령연금 지출에 대한 국가간 비교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몇 가지 함의를 제공한다. 먼저 공적연금제도가 잘 갖춰진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노인빈곤율이 낮은 경향이 있다(정경희 외, 2005: 159). 이는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45.1%(2009)로 OECD 평균 13.3%보다 3.4배 가량 높은 현실에서 공적연금제도가 적절하게 기능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을 제공한다. 왜냐하면 공적연금제도는 퇴직 이전의 소득수준을 유지하도록 해주는 ‘보험’적인 성격과 최소한의 노후소득을 보장하여 노인빈곤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장지연 외, 2008: 29). 이런 맥락에서 공적연금을 포함한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국가간 비교 분석은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옵션을 보여줄 수 있다.

둘째, 복지국가가 위기에 처하자 일부 학자들은 국가 중심 복지를 비판하고 한 사회의 복지 공급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시장, 개인 등 다양한 부문들이 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Evers, 1993; Pierson, 1994; Esping-Andersen,

54) 완전노령연금수급자가 없는 상태에서 연금과 일시금 형태의 연금 수급자 수는 2007년 2,256,912명이고 지출액은 5,182,610,821천원이다(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2009). 이는 2007년 경상 GDP 대비 0.5% 수준이다. 독일, 스웨덴,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연금 지출은 2005년 기준 명목 GDP 대비 10% 내외이다(OECD SOCX 홈페이지).

55) 2008년 1월 완전노령연금수급자가 처음으로 탄생했는데, 이는 20년 이상 가입하고 60세에 달한 때에 받게 되는 완전한 형태의 국민연금 수급을 뜻한다. 2008년 12,798명(49,586백만원)이고, 2009년 5월말 기준 21,224명(14,787백만원)이 지출되었다(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2009).

1999). 즉 사회복지의 제공은 정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복지국가 팽창 시기조차도 정부만 사회복지의 주체였던 적은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김철주, 2004). 실제로 각국 정부들은 투자위험을 다양화하고, 비용을 절감하며, 서비스 전달체계의 혁신을 유도하고,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설계하고자 사회적 급여를 민간 기관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민간 기관들은 개인의 욕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뿐만 아니라 지역 욕구에 대한 정보도 더 많이 가지고 있어 효율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연금제도에서도 이러한 복지혼합이 적용된다. 선진국들은 공적연금체계로는 복지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우므로 시장 및 개인의 노력을 강화하고자 다층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로 전환해왔다. 한국 역시 사회보험의 역할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점차 심화되는 노인빈곤율을 감소시키고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복지의 주체들이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검토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선진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의 분석은 한국의 법정퇴직금에 대한 성격 규명에도 도움이 된다. 최근 OECD는 한국의 법정퇴직금 제도를 사회복지지출로 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Adema의 편지, 2008; 2009). 그러한 의문은 두 가지 근거에서 논의된다.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수나 연기된 임금(후불임금)이라는 점에서 법정퇴직금은 일반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와는 그 성격이 다르고, 피고용인의 퇴직 사유가 자발적인가 여부에 상관없이 제공한다는 점에서 해고수당과도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근거로 최근 OECD는 후불임금의 성격으로 간주하여 실업 급여(SOCX NO.7)에 포함되어 있던 법정퇴직금 지출을 노령연금 지출로 이동하고, 퇴직금의 20%만 인정하고 있다.

한국에서 법정퇴직금은 사회보험으로서의 기능과 노령연금의 기능, 실업급여로서의 복합적인 기능을 갖고 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법정퇴직금은 노령연금에 포함하고 있으며 실업급여로서의 기능은 부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국내외 기준의 차이로 발생하는 한국 법정퇴직금 지출의 누락은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수준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데이터 이슈에 대한 논쟁도 야기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법정퇴직금과 관련한 논쟁에서 제기되는 노후소득보장체계에 대한 국가간 비교를 시도함으로써 한국의 법정퇴직금의 위치를 밝히고,

지출수준에 대한 국가간 비교와 함께 노령연금지출 항목의 국가간 비교를 시도하여 제도와 지출의 균형적인 안목을 통한 정책적 함의를 제안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논의들

가. 복지혼합모델

유럽의 노후소득보장체제는 대체로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사회보험모형(social insurance model)과 다층보장체계(multi-pillar system)이다. 사회보험모형은 단일 공적연금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의 은퇴 후 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웨덴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다층보장체계에서는 국가가 기본적 소득보장만을 책임지고, 그 밖에는 층보장부문에서 충당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대표적인 국가로는 영국, 덴마크, 네덜란드, 스위스 등이 있다. 사회보험 모형의 연금체계에서는 공적연금이 근로 당시의 소득과 연계되어 있으면서 비교적 관대하였으므로 최근까지도 사회보험모형을 채택하는 국가들에서는 사적연금이 발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없었다. 이와 달리 다층보장체계하에서는 공적연금의 소득보장정도가 낮기 때문에 사적연금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고 자산비중도 사회보험모형에 비해 압도적으로 크다(민세진, 2008).

이원화된 사회보장체제는 적어도 연금에 있어서는 수렴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1990년대 복지지출의 급격한 증가를 야기하는 주요한 원인이 인구고령화와 사회보험의 성숙에 따른 것으로 밝혀지면서(Stanley DeViney, 1983; Pat Thane, 1987; Guber & Wise, 2001) 유럽 각국에서 막대한 역할을 수행하던 공적연금의 개혁이 시급한 과제로 분류되었다. 이에 따라 사회보험체제를 고수하던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와 스웨덴 등의 국가에서 연금개혁을 단행하였다. 예를 들어 1913년 세계 최초로 모든 국민에게 강제 적용되는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한 스웨덴은 1970년대 이후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한 재정 불안정으로 1980년대 중반부터 전면적인 연금개혁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10년간 여야를 초월하고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결과 1990년대 단행된 연금개혁은 세 가지 특징을 갖는다.

먼저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연금체계를 명목확정각출

(Notional Defined Contribution, NDC) 방식으로 개편하였다. NDC 방식이란 개인의 공적연금 기여기록이 퇴직시까지 그 개인의 가상 저축액으로 남는 방식으로서 실질적으로는 부과방식으로 운영되는 공적연금에 확정기여 연금의 요소를 도입한 것이다. 두 번째로 연금 총보험료 16.5% 중 2.5%는 개인계정에 적립되어 각자가 선택하는 연금펀드에 투입되고 그 투자수익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도록 하는 적립식 개인계정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부분민영화(partial privatization)가 이루어졌다. 셋째, 보편적 기초연금은 폐지되고, 대신 빈곤한 연금수급자에게 선별적으로 지급되는 최저보증연금으로 대체되었다(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2009).

다층보장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국가들에서도 사적 부분의 자발적인 참여를 증가시키기 위해 다양한 개혁들이 진행되었다. 영국의 경우 1908년 노령연금제도가 도입될 당시에는 일종의 공공부조제도로써 자산조사에 의한 선별주의의 원리에 따라 시행되었으나 노령수당의 대상이 급증하고 정부의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 재정난에 봉착하게 되자 고용주와 피용자가 같은 비율로 보험료를 내는 사회보험방식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현재 영국의 연금제도는 1층 연금이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되는 소수의 국가(영국과 일본)이며, 2층 연금 중 공공연금의 비중은 매우 낮고 사보험의 가입이 높아 사실상 공공연금이 해체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처 정권에서 영국의 연금개혁은 공적연금의 민영화와 급여수준의 지속적인 삭감을 통한 연금재정의 안전성 확보를 이룬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한 블레어 정부의 연금개혁은 개인계좌를 도입하고, 새로운 크레딧제도를 도입하는 등 향후 40년간 다층적인 소득 보장체계를 견고하게 만들기 위한 선택이다(DWP, 2006).

사회보험유형의 국가나 다층보장체계유형의 국가에서 연금제도에 한해서 수렴현상이 일어난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다층체계에 대한 정의와 범위 때문이다. 먼저 협의의 의미에서 다층체계는 공적연금을 축소하고 사적연금을 강화하는 연금개혁 유형의 하나 혹은 모델로서 논의된다. Holzmann(2000)은 다층체계를 위험의 다기화 및 재정방식을 분류기준으로 한 연금개혁 유형의 하나로 보았다. 세계은행(1994)은 협의의 다층체계란 ‘부과방식의 공적연금이 강제적 연금체계의 한 층(pillar)을 구성하고 다른 층으로서 적립방식의 연금이 존재하는 형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강제적 2층 적립식 연금제도의 확대를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부분 민영화 혹은 완전 민영화를 통한 2층 연금의 도입 또는 공적연금의 민영화를 통해서 이루어져왔다고 설명할 수 있다(김수완 외, 2005). 대부분의 사회보험유형의 국가에서 이러한 방식의 연금개혁을 채택하고 있다.

광의의 의미에서 다층체계는 노후소득재원의 다각화를 통한 위험의 분산을 의미한다(김수완 외, 2005). 실제로 노후소득에 대한 다양한 소득의 원천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면, 공·사연금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기초보장제도, 노인 일자리를 통한 근로소득, 재산, 가족간 사적 이전 등이 있다. 따라서 많은 국가들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다층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가 이미 구축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다층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고수하고 있는 국가들에서 다양한 소득의 원천들을 공식적인 재원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예를 들면 조세혜택과 추가적인 급여의 제공-이 적극적이라는 데 차이가 있다.

이러한 논의의 맥락에서 세계은행(2005)의 노후소득보장체계 분석들은 광의의 개념에 기반함과 동시에 국가별 다양한 형태를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즉 세계은행의 분석들은 5층으로 구성되는데, 노인 빈곤을 경감하기 위한 0층, 공적 부문에서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1층), 직역연금 또는 개인연금제도(2층), 자발적인 직역연금 또는 개인연금제도(3층), 가족을 통한 비공식지원과 기타 자산(4층)이다.

〈표 5-4〉 세계은행의 노후소득보장체계 분석틀

| 층 | 대상 | | | 주요 기준 | | |
|---|-----|-----|----|--|------------|--------------------|
| | 빈곤층 | 비공식 | 공식 | 특징 | 가입 | 재원 |
| 0 | ● | ◎ | ○ | 기초연금 또는 사회수당형연금, 공공부조방식 | 보편적 또는 잔여적 | 예산 또는 일반회계 |
| 1 | | | ● | 공공부문에서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 | 의무 | 보험료, 일부 적립금 (금융자산) |
| 2 | | | ● | 직역연금 또는 개인연금제도(완전적립식) | 의무 | 금융자산 |
| 3 | ○ | ● | ● | 직역 또는 개인연금제도 (부분 또는 완전적립식) | 자발적 | 금융자산 |
| 4 | ● | ● | ◎ | 비공식지원, 기타 공식적인 사회보장제도, 기타 개인의 금융 및 비금융자산(주택) | 자발적 | 금융 및 비금융자산 |

주: ●, ◎, ○는 중요도 순서임.
 자료: The world bank, Old-age Income Support in the 21st Century, 2005.

나. OECD의 노후소득보장체계 분석틀

OECD는 사회복지의 다양한 주체들을 인정함과 동시에 현금급여뿐만 아니라 현금급여에 대한 지출까지 포함하는 사회복지지출데이터베이스(SOCX)를 운영하고 있다. 이 때 사회복지지출은 두 가지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첫째는 ‘사회적 목적’이 있어야 하고, 둘째는 개인간 재분배 혹은 의무적인 참여가 규정되어야 한다(Adema & Ladaique, 2005).

이 두 조건을 만족시킨 사회복지지출은 다시 해당 분야의 재정 흐름을 통제하는 기관(공공기관, 민간주체)에 따라 구분된다. 먼저 공공부문은 사회지출에 대한 재정 흐름이 사회보험과 공공부조급여처럼 일반정부에 의해 통제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회보험 중 의무적으로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기여에 의해 재원 조달되는 상병급여는 공공 부문으로 간주된다. 반면에 정부에 의해 제공되지 않는 모든 사회적 급여는 ‘민간지출’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전직 공무원에게 자발적인 기금을 통해 연금을 지불하는 것은 민간지출 항목으로 간주한다(OECD, 2007).

민간사회급여지출은 다시 두 가지 카테고리를 가진다. 먼저 법정민간사회지출은 법의 의해 규정되지만 사적 영역을 통해 작동되는 사회적 지원들(예, 공적으로 규정된 피고용인 부채에 대한 고용주의 직접적인 상병급여)과 사적 보험기금의 의무기여로 발생하는 급여 등이 있다. 다음으로 자발적민간사회지출은 가족내 자원의 재분배와 관련되거나 NGO에 의해 제공되는 급여를 포함하는 등 사적으로 작용하는 다른 프로그램에 의해 발생하는 급여들과 개인적인 플랜과 단체 지원제도(종종 고용과 관련)의 조세 이익으로부터 발생하는 급여(예를 들면, 연금, 아동보육지원) 등이 있다(OECD, 2007).

아래의 <표 5-5>에서 보듯이 공공부문의 법정지출에는 자산조사에 의한 급여와 사회보장성 급여가 해당되며, 공공부문의 자발적지출은 공공보험 프로그램에서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옵트인 정책이 해당된다. 반면에 민간부문의 법정지출은 고용주가 제공하는 상병급여나 법률로 규정된 기여를 통해 발생하는 급여들이고, 민간부문의 자발적지출은 개인은퇴계좌나 직업 연금, 고용주 제공의 의료플랜 등이 있다.

〈표 5-5〉 OECD 사회복지지출의 부문별 구분기준

| | 공 공 | | 민 간 | |
|--------|-----------------------|---|---|--|
| | 법정지출 | 자발적지출 | 법정지출 | 자발적지출 |
| 재 분 배 | 자산조사에 의한 급여, 사회보험급여 | 공공보험프로그램의 자발적 참여. 자영업자들의 보험 수혜를 획득하기 위한 ‘옵트인’ | 고용주 제공의 상병급여, 법정 기여로 발생하는 급여, 예를 들면 연금이나 장애보험 | 조세이익 급여, 예를 들면 개인은퇴계좌, 직업연금, 고용주 제공 의료플랜 |
| 재분배 없음 | 정부가 관리하는 개인 저축 체계의 급여 | | 실제로 조세 이익이 없는 정액 연금 급여 | 배제되는 민간: 개인의 선호에 따라 시장에서 구입한 보험 플랜에 의해 발생하는 급여 |

주: 음영부분은 사회복지지출에서 배제되는 부분임.
자료: OECD, 2007.

이러한 기준에 따라 구성된 SOCX 데이터베이스에서 노령급여(Old age) 역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구분된다. 먼저 공공부문은 일반적으로 1층 연금제도라고 말하는 공적연금이며, 민간부문은 다시 법정민간부문인 2층 제도와 자발적민간부문인 3층 제도로 구성된다. 이 때 1층 연금체계는 다시 그 형태에 따라 자원조사형(resource-tested)과 기초연금(basic pension), 최소연금(minimum pension)으로 구분된다. 또한 2층 연금체계는 공공연금(public pension)과 민간부문의 확정급여형(private DB)과 확정기여형(private DC)으로 구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3층 연금은 이전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연금과 이전에 민간부문 피고용인에게 제공되는 연금의 자발적 급여이다. 이러한 분류 기준은 〈표 5-6〉과 같다.

〈표 5-6〉 OECD의 노후소득보장체계 분석틀

| 다 층 | 유 형 | | |
|-----------------|--|----------------------------------|------------------|
| 1층(first tier) | 자원조사형(resource-tested) | 기초(basic) | 최소(minimum) |
| 2층(second tier) | 공공(public) | 민간DB(private DB) | 민간DC(private DC) |
| 3층(third tier) | pension to former private sector workers | pension to former civil servants | |

자료: Adema and Ladaique, 2009.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영국에서 1층 연금은 기초국가연금과 연금크레딧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층 연금은 공공연금인 제2국가연금과 민간연금인 개인연금과 직장연금, 이해관계자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3층 연금으로는 자발적인 추가 보험금 납부와 개인계좌를 통해서 운영되고 있다.

영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기여를 통해 조성되는 퇴직연금과 기초국가연금, 제2국가연금을 기초로 하여 이해관계자연금과 직장연금, 개인연금 등의 다양한 재원으로 위험을 분산함으로써 정부의 부담을 줄이고 책임성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에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에게는 고령자연금, 현금보조, 현물보조 등의 비기여성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그림 5-1] 영국의 다층적인 연금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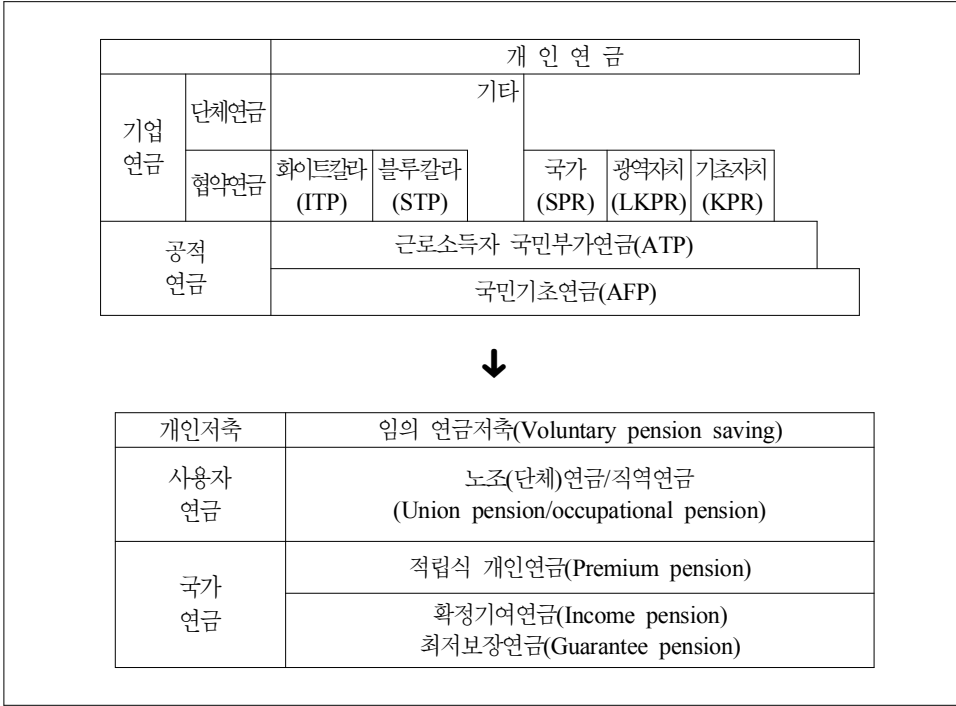
| | 기여 | 퇴직연금 (Retirement Pension) | 기초국가연금 (basic State Pension) |
|-----------------------------|------------------------------|---|----------------------------------|
| | | | 제2국가연금 (State Second Pension) |
| 공적연금 (State Pension) | 비기여 | 고령자연금 (Over 80 pensions) | |
| | | 개호수당(attendance allowance) 등 현금보조 ¹⁾ | |
| | | 가정봉사서비스(home-help services) 등 현물보조 ²⁾ | |
| 사적연금 (Non-State Pension) | 이해관계자연금(Stakeholder Pension) | | |
| | 직장연금(Occupational Pension) | | |
| | 개인연금(Personal Pension) | | |

주: 1) 기타 현금보조에는 총액으로 제공되는 국가보험기금, 연금자 지불금, 비기여 은퇴연금, 자산조사와 비자산조사에 따른 소득보조와 가족급여·사회기금, 연금 수급자에 대한 소득보조 및 개호수당, 국가보험기금 지불금 등의 일시금, 케어수당, 크리스마스 보너스 등이 있음.

2) 기타 현물보조에는 일상생활보조서비스 및 개인 사회서비스와 도시락 및 우유 보조 등이 있음.

스웨덴은 1990년대 연금개혁으로 신제도를 도입했으나 개혁과도기에 사람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고자 점진적이고 자발적인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제도와 신제도가 동시에 운영되는 이중 구조를 이루고 있다. 신제도에서는 최저보장연금과 확정기여연금으로 구성된 1층, 노조(단체)연금과 직역연금으로 구성된 2층, 임의적인 연금저축으로 구성된 3층으로 다층적인 체계를 이루고 있다.

[그림 5-2] 스웨덴의 2중구조 연금체계



지금까지 살펴본 각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국가간 비교를 위해서는 하나의 통일된 작성 원칙이 필요하다. OECD SOCX는 국가간 비교 가능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서로 다른 상이한 체계를 폭넓게 포괄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작성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작성기준이 명확하다고 해도 각 국가별 상황이나 제도가 다르고, 이를 작성하는 각국의 통계연구자⁵⁶⁾ 역시 국제기준과 국내 기준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SOCX 데이터베이스의 포함 내용은 다소 차이가 있다.

다층적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체계를 가진 영국이나 정부 지출이 여전히 강력한 스웨덴이나 그 제도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OECD SOCX에서 제공하는 일관된 작성원칙에 따라 지출항목과 내역을 작성한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의 하위항목들을 살펴보면 제도적 차이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형식적으로는 각국의 연

56) OECD는 각국의 담당자를 “correspondent”라고 칭하고 있다.

금제도가 OECD SOCX에서 제시하는 다층체제로 구분되어 있더라도 이것이 실제로 운영되는 제도인지 국제적인 기준에 따른 것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의 연금 지출의 세부 내역을 살펴볼 수 있다.

〈표 5-7〉 OECD SOCX 중 ‘노령(현금)’세부항목(2005) : 스웨덴·영국

(단위: %)

| 스웨덴 | | | 영국 | | |
|-----------------|--------------------|------------------|-----------------|------------------------------|------------------|
| 부문 | 급여내용 | 지출 ¹⁾ | 부문 | 급여내용 | 지출 ¹⁾ |
| 10 공공 부문 | 합계 | 9.6 | 10 공공 부문 | 합계 | 6.1 |
| | 1. 연금 | 6.9 | | 1. 연금 | 4.2 |
| | 노령기초연금 | a | | 모든 거주자: 정률퇴직연금 | 4.2 |
| | 노령연금(조세재원, 비자산조사) | 0.8 | | 80세이상 노인: 비기여급여 | 0.0 |
| | 노령연금보조 | a | | 자운영기금: 공기업피고용자 | a |
| | 특별노령연금보조 | a | | 노령연금 | a |
| | 노령보충연금(ATP) | a | | 노령연금: 돌봄수당과 개호수당 | 0.0 |
| | 확정기여연금 | 6.1 | | 2, 조기퇴직연금 | a |
| | 적립식개인연금 | 0.0 | | 기타현금급여 | 1.2 |
| | 아동보조 | x | | 총액: 국가보험기금(SSP, SMP) | 0.0 |
| | 어부연금 | 0.0 | | 총액: 연금수급자 지불금 | 0.3 |
| | 노령기초연금(직역체계) | 0.0 | | 총액: 비기여퇴직연금 | a |
| | 2. 조기퇴직연금 | 0.1 | | 총액: 소득보조, 가족크레딧과 사회기금(자산조사) | 0.0 |
| | 부분연금 | a | | 총액: 소득보조, 가족크레딧과 사회기금(비자산조사) | 0.0 |
| | 확정기여연금기금 | 0.1 | | 총액: 돌봄과 개호수당 | 0.0 |
| | 적립식개인연금기금 | 0.0 | | 한정적: 연금수급자 소득보조 | 0.5 |
| | 기타현금급여 | a | | 한정적: 돌봄 및 개호수당 | a |
| | | | | 한정적: 국가보험기금(SSP, SMP) | a |
| | | | | 돌봄수당: 돌봄과 개호수당 | 0.4 |
| | | | | 연금수급자 크리스마스 보너스 | x |
| 20 법정 민간 | 계 | a | 20 법정 민간 | 계 | 0.5 |
| | | | | 1. 연금 | 0.5 |
| | | | | 부과 예외 피고용인 최저연금보장 | 0.5 |
| | | | | 2. 조기퇴직연금 | a |
| | | | | 3. 기타 현금급여 | a |
| 30 자발적 민간 | 계 | 2.0 | 30 자발적 민간 | 계 | 4.2 |
| | 전직 민간부문 근로자에 대한 연금 | 0.8 | | 전직 민간부문 근로자에 대한 연금 | 2.1 |
| | 전직 공공부문 근로자에 대한 연금 | 0.6 | | 전직 공공부문 근로자에 대한 연금 | 2.1 |

주: 1) 지출수준은 GDP 대비 비율로 나타낸 것임.
자료: OECD SOCX 홈페이지, 2009.

스웨덴은 공공부문의 노령연금지출의 비중이 매우 높게(9.6%) 나타나는 반면 법정민간부문의 노령연금지출은 유용하지 않고, 자발적민간지출부문은 상대적으로 낮게(2.0%) 나타난다. 반면에 영국은 공공부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음에도 불구하고(6.1%) 법정민간지출(0.5%)과 자발적민간지출(4.2%)을 합하면 지출 수준은 비슷하다.

스웨덴의 노령연금 지출의 중요한 특징은 일반적으로 사회보험체계 내에서 노후 소득보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부의 지출은 가구의 상황에 따른 추가적인 보조에 머무른다. 이는 사회보험체계 외의 노령연금보조, 특별노령연금보조, 아동보조 등의 항목을 통해 알 수 있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웨덴 연금지출에는 신규 제도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흥미롭다. 구제도를 나타내는 항목들은 노령기 초연금(AFP)과 노령보충연금(ATP) 등이며, 신제도를 나타내는 항목들은 확정기여연금(Income pension)과 적립식개인연금(Premium pension)이다.

영국 노령연금 지출의 중요한 특징은 공공부문과 법정민간부문, 자발적민간부문이 균형적으로 지출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영국이 다층노후소득보장체제를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영국의 노령지출 항목들을 상세히 살펴보면, 사회보험제도에 포함되는 항목은 오히려 적고 정부 지출을 통한 총액 혹은 한정적 기타 현금급여의 종류가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영국의 경우 사회보험체계 내에서 노후소득이 보장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많아 추가적인 현금급여를 통해 이들을 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노인빈곤율(10.3%)은 매우 높게 나타난다.

한국의 노령연금지출의 특징은 스웨덴과 유사하게 사회보험체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그러나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의 도입이 늦고 가입기간이 길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보장체계에서 노후소득이 보장되는가 하는 의문이 남는다. 또한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지출은 거의 없으며, 오히려 현물서비스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도 특징이다.

한국의 노령연금지출에서 특이한 점은 법정퇴직금이 노령연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OECD는 한국의 퇴직금 제도를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수나 연기된 임금(후불임금)’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연금과 동일한 성격이라고 인정했기 때

문이다. 그러나 OECD는 최근 한국의 노동환경의 변화로 법정퇴직금이 노령연금의 성격을 가지는 것은 제한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Adema and Ladaique, 2009). 왜냐하면 20대 청년층에서부터 4,50대 장년층까지 퇴직할 경우 연령과 퇴직사유에 상관없이 회사는 그동안 적립된 퇴직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OECD는 법정퇴직금 중 노령연금의 성격에 대해서만 SOCX에 포함시켰다⁵⁷⁾.

〈표 5-8〉 OECD SOCX 중 ‘노령(현금)’ 세부항목(2007) : 한국

(단위: 경상 GDP 대비 %)

| 부문 | 급여종류 | 급여내용 | 지출 ¹⁾ |
|-----------|------|--------------------|------------------|
| 10(공공) | 현금급여 | 합 계 | 2.4 |
| | | 1. 연금 | 1.2 |
| | | 국민연금 | 0.4 |
| | | 별정우체국연금 | 0.0 |
| | | 공무원연금 | 0.5 |
| |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 0.1 |
| | | 군인연금 | 0.1 |
| | | 2. 조기퇴직연금 | a |
| | | 3. 기타현금급여 | 0.2 |
| | | 공무원연금(총액지불금) | 0.1 |
| | | 사립학교교직원연금(총액지불금) | 0.0 |
| | | 군인연금(총액지불금) | 0.0 |
| | | 별정우체국연금(총액지불금) | 0.0 |
| 20(법정민간) | 현금급여 | 합 계 | 0.5 |
| | | 1. 연금 | a |
| | | 2. 조기퇴직연금 | a |
| | | 3. 기타 현금급여 | 0.4 |
| | | 법정퇴직금 | 0.4 |
| 30(자발적민간) | 현금급여 | 합 계 | m |
| | | 전직 민간부문 근로자에 대한 연금 | m |
| | | 전직 공공부문 근로자에 대한 연금 | m |
| | | | |

주: 2007년 자료임.

1) 지출수준은 GDP 대비 비율로 나타낸 것임.

자료: OECD SOCX 홈페이지, 2009.

3. 실증분석을 통한 국가간 비교

가. 노령연금지출을 이용한 국가간 비교

57) Adema는 한국처럼 퇴직금 제도가 있는 이탈리아와 일본의 케이스 스터디 결과 퇴직금이 반드시 은퇴시기에 지급되며, 이전 직장에서 다른 직장으로 이동하는 근로연령 인구들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고 밝힌다. 따라서 일본과 이탈리아의 경우 법정퇴직금은 그대로 노령항목에 포함되었고, 한국은 장년퇴직자(법정퇴직금의 20% 해당)만을 노령항목에 포함시켰다.

국가간 노후소득보장체계를 비교하기 위한 분석들은 복지혼합 모델의 이론적 토대에 기초한다. 즉 노후소득재원의 다각화를 통한 위험의 분산이라는 목표를 위해 국가와 시장, 개인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고에서는 SOCX 데이터베이스의 노령연금 지출 중 1층(공공부문), 2층(법정 민간부문), 3층(자발적민간부문) 각각에 대한 지출액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지출을 기준으로 클러스터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각 클러스터별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특징들을 살펴본다. 이를 토대로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선택이 가능한 다양한 정책옵션들을 제안할 수 있다.

SOCX 데이터베이스에서 노령연금(SOCX NO.1)의 상세 데이터는 국가별로 1층·2층·3층 지출이 각각 제시되고 연금편람(Adema and Ladaique, 2009)에서는 공공지출과 민간지출의 통계가 각각 제공된다⁵⁸⁾. 이를 토대로 OECD 회원인 30개국의 데이터를 살펴본 결과 9개국은 데이터의 한계로 분석에 포함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클러스터 분석에 포함된 국가는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공화국,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아일랜드,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 영국, 미국의 21개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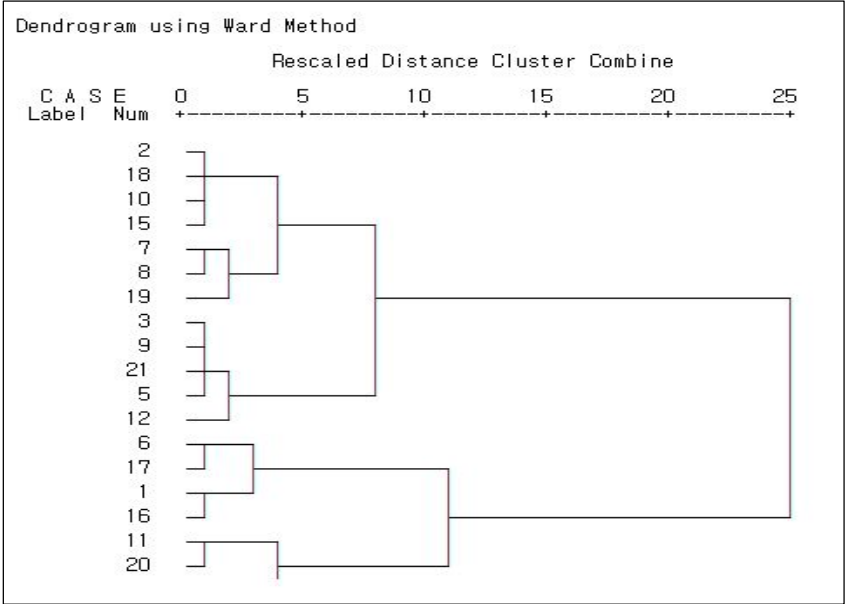
이들 국가의 노후소득보장체계 유형을 분석하기 위해서 SPSS 12.0을 이용하여 위계적 클러스터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5개의 클러스터로 국가들을 유형화할 수 있다. 오스트리아·스페인·그리스·룩셈부르크가 첫 번째 클러스터를 형성했고, 핀란드·프랑스·스웨덴이 두 번째 클러스터, 벨기에·독일·미국·체코공화국·이탈리아가 세 번째 클러스터, 덴마크·네덜란드·호주·멕시코가 네 번째 클러스터, 아일랜드·일본·한국·영국·캐나다가 마지막 클러스터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에스핑 안텔센(1990;1999)이 지적한 세 가지 복지국가 유형과 다소 상이한 결과를 보여준다. 즉 북유럽 국가들(핀란드, 스웨덴)이 하나의 클러스터를 형성하기는 하였으나 덴마크는 다른 클러스터로 나타났고, 유럽대륙 국가들(독일, 벨기에, 체코)이 하나의 클러스터를 형성하기는 했으나 프랑스는 다른 클러스터에 포함되었다. 또한 영미권 국가들인 영국과 미국은 각각 다른 유형으로 나타났다.

58) 이러한 지출 구분은 World Bank(2005)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분석들보다는 덜 세분화되었지만, 기존의 OECD 지출 항목보다는 다소 세분화된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는데, 미국이 독일·이탈리아와 동일한 클러스터를 형성한 반면 영국이 일본·한국과 동일한 클러스터를 형성한 것은 흥미로운 결과이다.

[그림 5-3] 클러스터 분석 결과



나.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국가간 비교

앞서 살펴본 클러스터별 분포는 선행연구의 유형화보다 세분화된 것이다. 즉 민세진(2008)이 사회보험모형이라고 지정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웨덴에 대해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독일과 이탈리아(클러스터3), 프랑스와 스웨덴(클러스터2)이 각각의 유형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일한 연구에서 다층보장체계를 구성한 것으로 지정한 영국, 덴마크, 네덜란드, 스위스에 대해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영국(클러스터5)과 덴마크·네덜란드(클러스터4)가 각각의 유형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의한 국가 분류는 선행연구의 국가분류와 일치하며 다만, 각각의 유형에서 세부적인 유형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유형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클러스터별 제도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먼저 클러스터1과 클러스터2, 클러스터3은 공통적으로 노후소득보장체계에 있어 공공부문의

비중이 높다. 반면에 클러스터 4와 클러스터5는 다층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표 5-9〉 클러스터별 소득보장체계와 재원별 특징

| | | 클러스터1 (정부지출의존형) | 클러스터2 (사회보험의존형) | 클러스터3 (약한 사회보험형) | 클러스터4 (자발적 부문이 강조된 다층구조형) | 클러스터5 (형식적인 다층구조형) |
|----|----------|----------------------------------|----------------------------------|----------------------------|---------------------------------|--------------------------------------|
| 국가 | | 오스트리아, 스페인, 그리스, 룩셈부르크 | 핀란드, 프랑스, 스웨덴 | 벨기에, 독일, 미국, 체코, 이탈리아 | 덴마크, 네덜란드, 호주, 멕시코 | 영국, 일본, 한국, 캐나다, 아일랜드 |
| 특징 | 소득 보장 체계 | 사회보장, 자발적민간플랜 | 사회보장, 직업법정의무플랜, 자발적민간플랜 | 사회보장, 자발적민간플랜 | 사회보장, 자발적민간플랜 | 사회보장, 사회보장, 직업법정 혹은 개인법정 플랜, 자발적민간플랜 |
| | 공공 vs 민간 | 공공부문의 지출 수준이 높음. 특히 정부지출의 비중이 높음 | 공공부문의 지출 수준이 높음. 특히 사회보험의 역할이 큼. | 사회보험의 비중이 높으나 소득대체율은 낮은 편임 | 상대적으로 민간부문(특히 자발적민간지출)의 비중이 높음. | 상대적으로 민간부문(특히 법정민간지출)의 비중이 높음. |

자료: 소득보장체계는 OECD, Private Pensions(2005); 지출내역은 OECD, SOCX 홈페이지.

이러한 클러스터별 특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OECD Pension at a glance(2009)에 나타난 변수들을 살펴보았다. 먼저 공공부문의 비중이 높은 클러스터1과 클러스터2, 클러스터3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들의 특징은 공공연금급여의 수준이 높아 정부지출이 높게 나타나며, 노인빈곤율은 다른 클러스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연금의존율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 정부 지출의 비중이 높은 클러스터1의 소득 대체율이 중위소득 대비 95%로 가장 높은 반면, 사회보험이 강조되는 클러스터 2와 클러스터3은 소득대체율이 각각 64%와 61%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라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재원이 정부의 일반회계에서 조달되는지, 사회보험에서 조달되는지에 따라 제도적인 차이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대조적인 클러스터4와 클러스터5는 다층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가지므로 공공연금급여와 정부지출, 연금의존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노인빈곤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공통점을 가진다. 특히 연금의존율이 낮은 이유는 연금 외의 다양한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수단들을 장려하고 있기 때문이며, 노인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다양한 정책적 수단이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많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클러스터4에 비해서 클러스터5는 상대적으로 공공연금급여와 정부지출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사각지대가 해소되지 않은 다층구조를 가지거나(영국, 아일랜드, 한국), 다층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로 전환하고 있어(일본, 한국) 아직 다층구조에 의한 노후소득보장이 체계적이지 않음을 보여준다.

〈표 5-10〉 클러스터별 노후소득보장과 관련된 요인들

| | 정부지출 | | 노인빈곤율 | 연금의존율 | 소득대체율 |
|------------------|------|--------|-------|-------|-------|
| | | 공공연금급여 | | | |
| 클러스터1(정부지출의존형) | 22.5 | 9.9 | 9.8 | 0.275 | 95.6 |
| 클러스터2(사회보험의존형) | 17.9 | 9.5 | 8.5 | 0.283 | 64.0 |
| 클러스터3(약한 사회보험형) | 20.6 | 9.5 | 12.3 | 0.274 | 61.7 |
| 클러스터4(다층구조형-자발적) | 8.0 | 3.8 | 16.7 | 0.203 | 71.4 |
| 클러스터5(다층구조형-형식적) | 12.3 | 4.7 | 22.5 | 0.233 | 44.8 |

주: 2009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진이 분석한 것임.
자료: Adema and Ladaigue, 2009b.

이러한 클러스터별 비교는 클러스터별 차이를 살펴보기에는 적당하나 클러스터내의 차이점은 간과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각 클러스터의 속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국가들⁵⁹⁾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클러스터별 특징에 살펴본 바와 같이 공공연금급여 비중과 정부의 지출을 통한 공공부문의 지출 수준은 오스트리아와 독일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반면 자발적민간부문의 지출은 영국과 네덜란드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이와 대조적으로 법정민간부문은 사회보험이 발달한 국가들에서는 유용하지 않고 오히려 다층소득보장체계가 갖추어진 영국에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59) 각 클러스터의 대표국가는 다음과 같다. 클러스터1은 오스트리아, 클러스터2는 스웨덴, 클러스터3은 독일, 클러스터4는 네덜란드, 클러스터5는 영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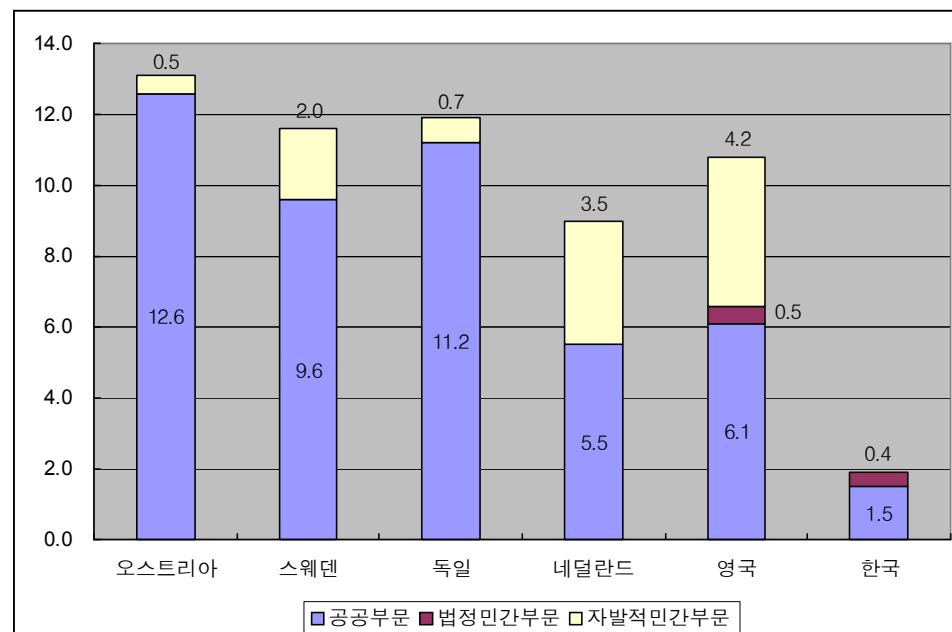
〈표 5-11〉 클러스터별 대표국가의 항목별 지출 비교

| | 오스트리아 | 스웨덴 | 독일 | 네덜란드 | 영국 |
|---------|-------------|-------------|-------------|------------|-------------|
| 계 | 13.1(100.0) | 11.6(100.0) | 11.9(100.0) | 9.0(100.0) | 10.8(100.0) |
| 공공부문 | 12.6(96.2) | 9.6(82.8) | 11.2(94.1) | 5.5(61.1) | 6.1(56.5) |
| 법정민간부문 | a | a | a | 0.004(0.0) | 0.5(4.6) |
| 자발적민간부문 | 0.5(3.8) | 2.0(17.2) | 0.7(5.9) | 3.5(38.9) | 4.2(38.9) |

주: 2005년도 지출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임.
자료: OECD SOCX 상세통계.

[그림 5-4] 역시 각국의 재원별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오스트리아와 독일에 비해 영국이 다층적임을 알 수 있다.

[그림 5-4] 클러스터별 대표국가의 재원별 지출 비율(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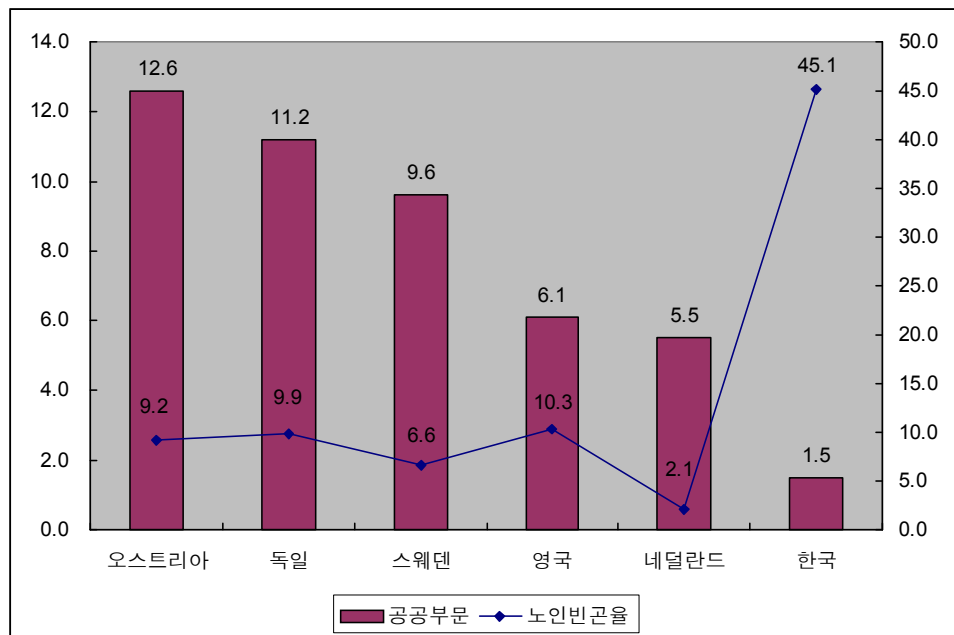


자료: OECD SOCX 상세통계.

이들 국가의 지출과 노인빈곤율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오스트리아는 노령연금에 대한 높은 지출율과 가장 큰 폭의 공공부문 지출에도 불구하고 노인빈곤율이 9.2로 매우 높다. 이러한 경향은 독일과도 유사한데 독일의 노인빈곤율은 9.9로 오스트리아보다도 높다. 반면에 스웨덴과 네덜란드는 상대적으로 낮은 공공부문 지출과 자발

적민간부문의 상대적으로 높은 기여에도 불구하고 노인빈곤율은 매우 낮게 나타난다. 스웨덴에서 노인빈곤율은 6.6인 반면, 네덜란드의 노인빈곤율은 2.1이다. 마지막으로 영국은 모든 국가 중에서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아(10.3) 다층소득보장체계에도 불구하고 배제되는 노인들이 있거나 충분한 급여가 제공되지 못함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림 5-5] 클러스터별 대표국가의 공공부문 '노령'지출과 노인빈곤율



주: 오스트리아의 노인빈곤율은 1996년 자료이며, 다른 국가들은 모두 2009년 자료임.
 자료: UN, 1996.; Adema and Ladaique, 2009b.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 클러스터들은 유사한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각국의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한 정책 수단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결과 역시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보험이 발달한 국가들에서는 사회보장체계에서 배제되는 노인들에 대한 지출과 자발적민간부문의 지출 수준에 따라 몇 개의 클러스터로 다시 세분되었다.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한 국가들 역시 사회보장체계에서 배제되는 노인들에 대한 지출과 민간부문 지출의 강조(법정의무지출, 자발적지출)에 따라 상이한 클러스터를 나타냈다.

한국은 노령연금지출의 국가간 비교에서는 사회보험유형의 국가들처럼 1층 체계

이외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지출이 거의 없는 것⁶⁰⁾으로 나타났으나, 노후소득보장 체계에 대한 제도적 비교에서는 다층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가지지만 제도가 체계적으로 운영되기보다는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유형(클러스터 5)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중적인 위치가 현재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가 가진 한계라 할 수 있다.

4.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현재와 미래

노후소득보장체계에 대한 클러스터 분석 결과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공공부문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낮고 다양한 재원을 통해 노후소득이 보장되는 다층적인 체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이들 국가에서 공공연금급여의 비중과 정부지출은 낮은 편이며, 연금의 소득대체율도 매우 낮아 노후에 연금만으로 생활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이유로 연금의존율도 낮고 다양한 소득원을 가지지 못한 노인들의 빈곤율은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

한국은 분석에 포함된 21개국 중에서 공공연금급여(1.6)와 정부지출(5.4), 연금의존율(0.152)이 가장 낮았고, 소득대체율은 상대적으로 높지만(46.6),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빈곤율은 회원국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45.1). 즉 절반에 가까운 노인가구가 절대빈곤에 처해있음을 알 수 있다(Adema and Ladaique, 2009b).

오늘날 한국의 노인들이 빈곤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3가지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 공적연금체계의 미비로 사회보험체계 내에서 노후소득이 보장되지 못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국민연금의 늦은 도입으로 인하여 완전 노령연금이 2008년에 처음으로 지급되었고 그 이전까지는 주로 유족 및 장애연금과 감액 연금, 조기 연금이 집행되어 노후의 기초적인 소득보장 기능이 미약했다. 완전노령연금 수급자의 연금 수급액은 2인 가구 최저생계비 대비 90.3% 수준이고, 국민연금 수급자 대비 60세 이상 완전노령연금 수급자의 비율은 1.0%에 불과하다(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따라서 한국에서 공적연금체계는 의무가입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체계 내에서 노후소득보장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60) 엄격히 말하면 법정퇴직금(퇴직연금 포함)이 유일하다.

한국과 동일한 클러스터에 속한 영국 역시 공적연금체계가 미흡하여 사회보험체계 내에서 노후소득이 보장되지 않는다. 다만 영국은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을 위해 잔여적인 성격의 공공연금급여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출도 한국보다는 높은 편이다.

둘째, 한국에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다양한 복지 주체의 노력들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국에서 노후소득보장은 주로 국민연금을 비롯한 특수직역연금의 공공부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만약 사회보험체계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노후소득은 주로 현물급여를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의 빈곤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은 형식적으로는 다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2007년 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기존의 법정퇴직금을 퇴직연금과 동일한 목적을 가지는 제도로 간주하여 ‘퇴직급여제도’의 일부분으로 규정하기 있다⁶¹⁾.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르면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2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1층 체계(공공부문)인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이 있고, 2층 체계(법정민간부문)인 기업연금은 법정퇴직금과 퇴직연금이 포함되는 것이다⁶²⁾. 그러나 자발적민간부문의 지출(3층)은 유의한 자료가 생산되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 OECD와 한국 정부의 법정퇴직금의 논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OECD 작성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함에 따라 법정퇴직금의 일부가 노령연금지출에 포함됨으로써 향후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법정퇴직금은 노후소득보장의 측면과 실업부조적 측면을 동시에 갖는 고용주가 재원을 부담하는 법정민간지출이다. 그러나 최근 노동시장의 이원화로 비정규직이 증가하면서 법정퇴직금은 노후소득보장의 측면보다는 실업부조적 성격이 더 강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OECD는 2005년 이전까지 실업항목(SOCX NO.7)

61) 그동안 근로자에 대한 노후보장이나 급여, 그리고 퇴직 이후의 생계를 위한 자금 등 다양한 요소로 이해되어 온 퇴직금제도의 형태를 유지하되, 실질적으로 퇴직금의 역할과 기능이 축소 혹은 변화됨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퇴직연금제도로 이행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법률상에는 두 제도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노동부, 2008).

62) 노동부는 법정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유도하고 있어 점차적으로는 법정퇴직금의 비율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에 포함된 법정퇴직금 중 정년퇴직자의 금액만을 노령급여에 포함시키도록 작성분류를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의 법정퇴직금은 해고수당이 아니다. 해고수당이란 노동시장 환경으로 인한 비자발적 해고시 지급하는 반면에 법정퇴직금은 자발적이거나 비자발적인 퇴직 모두에 지급 된다⁶³⁾. 그러나 법정퇴직금을 노령연금지출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처럼 반드시 법정은퇴 이후의 소득자에게 연금 혹은 일시금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에서 노후소득보장체계는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와 함께 다양한 복지주체의 역할 미비, 법정퇴직금의 제한적인 역할 등의 문제를 중복적으로 갖고 있다. 따라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노인빈곤율을 감소시키기 위해 혹은 향후 지금의 근로세대가 빈곤에 처하지 않기 위해 노후소득보장체계를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이데올로기의 문제부터 조세부담과 재원조달의 문제, 기존 제도들과의 상충 같은 복합적인 문제들이 선결되어야 한다. 또한 클러스터 분석상에 나타난 것처럼 다층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의 사각지대에 대한 정부 지출이 증가해야 한다.

사실상 출산율 저조로 인해 근로가능세대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 단기적이고 일시적으로 노인빈곤율을 낮출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한국의 현재 노후소득보장체계를 중심으로 사각지대를 규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두 가지 서로 다른 체계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향후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가 사회보험유형이 될 것인지 혹은 다층적인 보장체계 유형이 될 것인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정책대안이 다르다.

먼저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제도를 사회보험적 성격이 강한 현 체제대로 유지할 경우 가장 시급한 문제는 사각지대이다. 현재 노후소득이 보장되지 않아 빈곤에 처한 노인들은 대부분 기초노령연금과 공공부조의 수혜 대상이 된다. 그런데 현행 체제를 유지하면서 노인빈곤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사각지대의 증가만큼 공공부조대상자를 확대하고 이는 정부의 지출을 통해서 가능하다.

63) 한국의 법정퇴직금에 대한 의견은 국제기구에서도 일치하지 않는다. World Bank(2008)는 한국의 법정퇴직금을 ‘해고수당(severance pay for redundancy dismissal)’에 포함시킨 반면에 OECD(2004)는 해고수당(severance pay)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보고 있다.

또 다른 방법은 영국의 경우에서처럼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으며 빈곤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기타현금급여를 확대하는 방안이 있다. 사실상 영국 역시 기여방식에 의한 연금제도에 기초하므로 사각지대가 상당히 존재한다. 그러나 영국 정부의 정책 옵션은 한국과 매우 다르다. 공공부문에서는 모든 거주자에게 정률퇴직연금과 80세 이상 노인에게 비기여급여를 주는가 하면, 자산조사에 기초하여 소득보조, 가족크레딧과 사회기금을 제공하고 노인들이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돌봄과 개호수당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법정민간지출로 부과 예외 피고용인에게는 최저연금을 보장하며, 자발적민간지출로 전직 민간부문 근로자와 공공부문 근로자에게 지급하며 비자발적 부문의 지출을 촉구하고 있다. 이 두 가지 방안은 정부의 지출이 수반된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제도분석의 클러스터에서 나타난 것처럼 한국이 다층적인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지향한다고 볼 때 몇 가지 정책대안들을 제안할 수 있다. 우선 공공부문에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의 가입과 수급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영국에서는 일정소득 미만인 저소득 근로자와 장애인, 혹은 장기질병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2국가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사보험에 가입하여 노후소득을 보장하지만, 그만한 여력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하는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에서는 전문직 프리랜서, 임시직 등이 국민연금에서 누락되고 있다. 이들은 노동시장 환경의 변화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존재하고 있으므로 개인적인 연금 플랜이 갖춰지지 않는 한 향후 빈곤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의 법정민간지출은 현재 법정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OECD도 지적하듯이 법정퇴직금은 퇴직연금에 비해 노후소득보장의 기능이 약하다. 이는 주로 중간정산제도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법정퇴직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법정퇴직금을 퇴직연금과 동등한 형태를 유지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즉 법정퇴직금을 정년퇴직연령 이후에만 수급할 수 있고, 중간정산이 퇴직연금처럼 어렵다면, 노후소득보장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법정퇴직금 제도의 개정을 위한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08년 11월 28일 발의)이다.

2층 법정민간지출은 일반적으로 기업연금을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는 법정퇴직금과 퇴직연금이 있지만, 기업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개인들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 영국에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이 의무가입해야 하는 직장연금 외에도 개인연금과 이해관계자연금(stakeholder pension)⁶⁴⁾을 함께 두어 민간부문의 선택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5인 이상 사업장에 속해있지 않은 개인이나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기업연금 대신에 개인적인 저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루어져 사실상 노후소득보장체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64) 영국의 stakeholder pension을 번역함에 있어 학자들간에 합의된 용어는 아직 없으며, ‘이해관계자연금’, ‘이익집단연금’, ‘투자자연금’, ‘스테이크홀더 연금’ 등으로 불리어 진다.

결론 및 연구의 한계

6장 결론 및 연구의 한계

1. 결론 및 정책 제언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은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공공부문의 사회복지지출은 1990년 경상GDP 대비 2.91%에서 2007년 7.48%로 증가하면서 연평균 17% 내외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법정민간부문의 사회지출은 경상GDP 대비 0.27%(1990년)에서 0.59%(2007년)로 매우 낮은 증가세를 보여준다. 한국 사회복지지출의 증가가 공공부문의 지출 증가에 따른 것이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정부 지출은 미약하나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의 지출은 거의 변화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는 법정민간부문의 제도 성숙이 느리거나 뿌리 내리지 못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사회복지지출에 자발적 민간부문을 포함시킨 총사회복지지출의 추계 결과 역시 이를 지지한다. 즉 한국의 총사회복지지출 역시 요소GDP 대비 3.70%(1990년)에서 11.44%(2007년)로 급격한 증가를 보여주며, 2007년의 총사회복지지출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총공공지출(74.0%)이 가장 높고, 총자발적민간지출(20.2%)이 그 다음, 총법정지출(5.8%)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구성비는 국제비교를 통해 그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총사회복지지출에 대한 국가간 비교에서 공공부문의 지출이 가장 높은 국가는 스웨덴, 독일, 덴마크로 나타났으며 이들 국가에서 총공공지출이 총사회복지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9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총법정지출의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한국으로 나타났고, 자발적 민간지출의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미국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법정민간지출의 수준이 높은 이유는 법정퇴직금, 출산휴가급여, 유급질병휴가

급여 등의 기업복지가 발달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들이 선진국에서 출산휴가급여 등이 공공부문에서 제도화된 데 비해 한국에서는 기업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총사회복지지출에서 조세부담과 조세혜택을 고려한 순사회복지지출을 살펴보면, 한국은 여전히 OECD 주요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은 지출 수준을 나타내지만 그 격차는 상당히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통계의 생산은 OECD 회원국으로서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의무이기 때문에 수행되기도 하지만, 정부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하는 노력을 측정하는 성과지표로서 이용되기도 하고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수준을 가늠하는 잣대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한국의 2007년도 사회복지지출의 추계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가간 비교를 통해 한국의 수준을 가늠하고 향후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옵션들을 살펴보았다.

전년도 과제에서는 가족급여에 대한 국가간 비교연구를 통해 가족정책의 유형화를 시도하고 그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았으며, 올해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한국의 법정퇴직금제도를 포함하는 노령급여에 대한 국가간 비교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노령급여에 대한 관심은 최근 발표된 OECD의 Pensions at a glance(2009)에서 밝혀진 것처럼 한국의 높은 노인빈곤율을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를 제공한다는 측면과도 연관이 있다.

연금은 중요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수단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가적으로 연금제도를 활성화하여 기초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추구하고 있지만 공공연금만으로 노후소득이 충분하지 않거나 공공연금 가입률이 낮아 막상 노후가 되면 빈곤층으로 전락하기도 한다. 한국은 노령급여지출의 하위항목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사회보험체제로만 구성되어 있어 사각지대에 대한 정부 지출은 거의 전무하다. 특히 한국의 국민연금 가입 역사가 짧고 가입률이 저조한 현 상태를 고려할 때 현재의 노인빈곤율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지속적인 노인 빈곤국가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한국은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다층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특히 2007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제정으로 법정퇴직금(구제도)과 퇴직연금(신제도)의 이원화된 구조를 갖고 있기는 하나 퇴직연금(DB형, DC형, IRA형)은 다층

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한 국가들의 그것과 유사하게 설계되었다. 그러나 최근 OECD가 한국의 법정퇴직금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제시한 바와 같이 한국의 법정퇴직금은 선진국의 퇴직연금과 다른 독특한 성격을 갖고 있다. 신규제도의 이원화된 퇴직연금 제도가 지속된다면, OECD의 작성기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현재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에 대한 검토와 국가간 비교 연구를 통해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 정책대안들을 제안할 수 있다. 먼저 현행 사회보험체제내에서 노후소득이 보장되지 않는 빈곤층은 공공부조의 대상자가 되는데, 노인가구의 경우 그 기준을 완화하여 빈곤을 경감할 수 있다.

둘째, 사회보험체제내에서 노후소득이 보장되지 않는 빈곤노인층에게 다양한 현금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현재 한국에서는 자산조사에 기초하여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외국의 경우 돌봄수당과 개호수당, 연금보조, 가구 상황에 따른 현금보조 등 다양한 현금급여를 통해 노인빈곤율을 경감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방안 모두 지나치게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어 정부의 재정부담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셋째, 국민연금 가입률과 수급율이 저조한 상태에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정소득미만인 저소득근로자와 장애인, 그리고 개인자영자 등 소득이 일정하지 않거나 일정 소득미만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문의 보험이 필요하다. 이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반면 그만한 여력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다.

넷째, 현재 한국의 법정민간부문 지출은 법정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이원화된 체계인데,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법정퇴직금은 점차 노후소득보장의 기능이 약해지고 근로가능연령의 실업 완충적 성격이 강해지고 있다. 따라서 비정규직 등 노동시장의 환경에 민감한 대상들이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노력이 저해되면서 향후 빈곤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정퇴직금의 노후소득보장적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중간정산의 규제, 회사 이직 시 개인적인 선택에 의해 법정퇴직금이 연계되거나 퇴직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개인적인 선택에 의해 법정퇴직금과 퇴직연금 등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이 바로 다섯 번째 정책옵션이다.

2.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매년 OECD의 작성기준에 따라 추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구의 한계가 존재한다. 먼저 매년 사회복지 공급주체간 지원금의 이중계산 부분이 존재한다. 즉 기업재단의 지출금액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지원받은 일부 금액이 포함되는데, 이러한 이중계산은 제외되어야 하지만 각 기업재단에 배분된 금액을 세부적으로 알 수 없어 이 부분만큼 과다계상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공동모금액의 배분처와 배분액 또는 각 기업재단의 수입 자료를 세부적으로 파악하는 심층연구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간접세율은 국민 모두에 대한 간접세율이 아니라 이전소득자에 대한 간접세율이다. 따라서 미시자료를 활용한 경우는 이전소득자에 대한 간접세율의 추계가 가능하지만 기초자료의 활용상 한계가 있다. 현재 “도시가계조사”를 이용하여 이전급여수령자가 부담하는 직·간접세액을 분석한 결과 사례수가 너무 적어(전체조사가구의 10%, 550가구, 2005) 세부적인 분석이 불가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OECD의 지침에 따라 거시자료를 활용하여 간접세율을 추계하고 있다. 다만, 가계 부문이 납부하지 않는 세금 항목을 일부 포함하는 한계점이 있다.

셋째, 2007년도 이전까지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 추계에는 어려움이 있다. 다만, 2008년 이후부터 사업별 예산제도로 변경되면서 지방정부가 공표하기 시작했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상당부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자료공개의 비협조로 의료분쟁에 대한 대한의사협회공제회의 보상액을 포함할 수 없었다.

이러한 연구의 한계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으며 매년 연구가 지속되는 동안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향후 신뢰할 수 있는 통계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통계연보. 각 연도.
- 건설교통부(2004). 비영리단체에 의한 공공주택 공급 사업 참여 활성화 방안.
- 고경환·장영식·이내연(2004).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추계: 1990~2001. 서울: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_____(2005a).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교통요금감면제도의 경제적 귀착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제21권 제1호(통권 제32집), 서울: 한국사회보장학회.
- _____.장영식·이정우(2005b) 한국의 순사회복지지출 추계(2002)와 독일의 사회복지계정 고찰. 서울: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_____.장영식·이태진·박신영(2006).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추계(1990~2003)와 공공임대주택의 현물급여 추계방안. 서울: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통계. 각 연도.
- 관세청. 내부자료. 각 연도.
- 광주도시철도공사. 내부자료. 각 연도.
- 교육과학기술부. 내부자료. 각 연도.
- 국가보훈처. 보훈통계연감. 각 연도.
- _____. 내부자료. 각 연도.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각 연도.
- _____. 의료급여통계연보. 각 연도.
- _____. 내부자료. 각 연도.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각 연도.

국민은행.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각 연도

국방부. 군인연금통계연보. 각 연도

_____. 보험급여과. 내부자료. 각 연도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_____. 지방세정연감. 각 연도

_____. 법인과. 내부자료. 각 연도

굿네이버스. 내부자료. 각 연도

기획재정부. 조세개요. 각 연도

_____. 조세지출보고서. 각 연도

_____. 예산개요. 각 연도

김교성·김종건(2006). 사회복지자원총량조사연구.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유찬(1998). 조세정책에 대한 OECD의 논의와 대응방향. 서울: 한국조세연구원.

김수완·김순옥·안상훈(2005).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연구. 서울: 국민연금연구원.

김 진(2004). 농가경제조사에 대한 대체법 비교 통계연구. 대전: 통계청.

김진욱(2005). 한국 복지혼합의 구조: 2000년도 지출구조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의 좌표, 2005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서울: 한국사회복지학회.

나성린·현진권(1993). 조세 및 사회복지정책의 효과분석-Tax-benefit 모형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조세연구원.

노동부. 고용보험통계연보. 각 연도

_____. 기업체노동비용조사보고서. 각 연도

_____. 노동통계연감. 각 연도

_____. 산재보험사업연보. 각 연도

_____.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각 연도

_____. 고용정책과. 내부자료. 각 연도

농림수산부. 농가경제통계. 각 연도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1994). 교회사회봉사총람.

대구광역시지하철공사. 내부자료. 각 연도

대한결핵협회. 내부자료. 각 연도
 대한적십자사. 내부자료. 각 연도
 대한주택공사. 임대주택 공급 및 운영현황. 각 연도
 _____. 내부자료. 각 연도
 대한항공. 내부자료. 각 연도
 문화관광부(2000). 한국의 종교현황.
 문화재청. 내부자료. 각 연도
 민세진(2008). 개인연금제도의 국가별 비교를 통한 개선방향, 문형표(편),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에 관한 종합연구(Ⅱ),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방송통신위원. 내부자료. 각 연도
 별정우체국연합회. 별정우체국연금통계연보. 각 연도
 _____. 내부자료. 각 연도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통계. 각 연도
 _____. 의료보호통계. 각 연도
 보건복지가족부(1999). 보건복지백서.
 _____. (2008). 보건복지재정 투자방향 및 투자전략.
 _____. 보건복지통계연보. 각 연도
 _____. 사회복지사업기금결산. 각 연도
 _____. 세입세출예산. 각 연도
 _____. 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예산. 각 연도
 _____. 복지지원과. 내부자료. 각 연도
 _____. 장애인제도과. 내부자료. 각 연도
 _____. 질병관리과. 내부자료. 각 연도
 보험개발원. 내부자료. 각 연도
 부산교통공사. 내부자료. 각 연도
 서울메트로. 내부자료. 각 연도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내부자료. 각 연도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통계연보. 각 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2005). 배분사업을 위한 욕구조사.

_____. 사랑의 열매. 각 연도

_____. 내부자료. 각 연도

소방방재청. 재해연보. 각 연도

신동면(2001). 한국의 복지혼합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 45권. 서울: 한국사회복지학회.

아름다운재단. 내부자료. 각 연도

아시아나항공. 내부자료. 각 연도

아이들과 미래. 내부자료. 각 연도

어린이재단. 연보. 각 연도

_____. 내부자료. 각 연도

여성가족부. 권익증진사업예산. 각 연도

_____. 여성정책연차보고서. 각 연도

월드비전. 내부자료. 각 연도

오정수(1998). 우리나라 민간복지 부문의 기능과 구조 개선방안. 사회복지. 봄호. pp. 40~52.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내부자료. 각 연도

이계식·배준호(1986). 우리나라의 간접세 부담분포 분석, 곽태원·이계식(편). 조세정책과 조세발전.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이근희(1996). 한국의 기업복지 실태 및 정립방안. 서울: 한국생산성본부.

이필우(1995). 조세론. 서울: 법문사.

인경석·이상석(1991). 사회복지분야의 민간재원조달 및 활용방안연구-공동모금제도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 내부자료. 각 연도

장영식·계훈방·고경환(2002). OECD 요구 보건통계 생산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지연·부가청·이혜정·신현구·이철희·장숙량·조성일·Lisa F. Berman(2008). 중고령자 노동시장 국제비교연구.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전국경제인연합회(2000). 1999 기업·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
 _____(2002). 2001 기업·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
 전국재해대책협의회(1999). 1999년 모금과 구호.
 전국재해구호협회. 내부자료. 각 연도.
 전상경(2005). 한국 기업의 기부금 규모분석·상장법인과 외감법인의 10년간 자료를
 이용하여, 제5회 국제기부문화심포지엄-기빙코리아 2005. 서울: 아름다운재
 단 기부문화연구소.
 정경배(1998). IMF 시대의 정부와 민간의 사회복지 역할 분담. 한국사회복지. 겨울
 호. pp. 7~25. 서울: 한국사회복지학회.
 정경희·오영희·석재은·도세록·김찬우·이윤경·김희경(2005). 2004년도 전국 노
 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서울: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기원 외(2000). 민간복지자원 총량파악체계 구축방안. 서울: 보건복지부·한국사
 회복지협의회.
 정기원(1996). 민간복지투자 활성화 방안.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선욱(2002). 사회복지자원의 총량 추계에 관한 연구.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정형선(2007). 국민의료비 추계 및 국민보건계정구축. 서울: 보건복지부·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제주에어. 내부자료. 각 연도.
 지방재정세제국.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 각 연도.
 직장의료보험조합(145개). 내부자료. 각 연도.
 철도청 영업본부 영업계획과. 내부자료. 각 연도.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기초자료. 각 연도.
 _____. 농가경제조사 지침서. 각 연도.
 _____. 한국의 사회지표. 각 연도.
 _____. 한국통계연감. 각 연도.
 _____. 사회조사(보건·가족부문) 결과. 각 연도.
 통일부. 내부자료. 각 연도.
 한국경영자총협회(1997). 기업복지의 현황과 과제.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연보. 각 연도
-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내부자료. 각 연도
- 한국도로공사. 내부자료. 각 연도
- 한국라이온스. 내부자료. 각 연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5). 적십자회비 모금제도 개선방안.
- 한국방송공사. 자원관리국. 내부자료. 각 연도
-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내부자료. 각 연도
- 한국사회복지협의회(1993). 사회복지사전.
_____. 총무부. 내부자료. 각 연도
- 한국심장재단. 총무과. 내부자료. 각 연도
- 한국어린이보호재단. 총무과. 내부자료. 각 연도
- 한국여성재단. 내부자료. 각 연도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내부자료. 각 연도
-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연도
- 한국철도공사. 철도통계연보. 각 연도
_____. 내부자료. 각 연도
- 한동우(2005).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실태조사 발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실태조사
발표 및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경쟁력. 서울: 아름
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 행정안전자치부. 중앙재해대책본부. 재해연보. 각 연도
- 행정안전자치부.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 각 연도
_____. 지방세정연감. 각 연도
- 홍석표(1998). 국제기준에 의한 한국의 사회보장비 수준.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Adema, W.(1999). Net Social Expenditure. *Labour Market and Social Policy Occasional Papers NO. 39*. Paris: OECD.
- _____(2001). Net Social Expenditure 2nd edition. *Labour Market and Social Policy Occasional Papers NO. 52*. Paris: OECD.

- _____ (2002). *2003 Edition of SOCX Database - A New Structure*. Paris: OECD.
- _____ & Ladaique, M.(2005). Net Social Expenditure: More Comprehensive Measures of Social Support.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Paris: OECD.
- David Grubb, Jae-Kap Lee and Peter Tergeist.(2007). Addressing Labour Market Duality in Korea.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61*. OECD.
- DWP(2006). *Security in retirement: towards a new pensions system*. UK.
- Esping-Andersen, G.(1990).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Princeton University Press.
- _____ (1999). *Social Foundations of Postindustrial Economic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Gilbert, N., & Terrell, P.(2004)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 6th ed.. : Pearson Education.
- _____, Specht, H., & Terrell, P.(1998).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 3rd ed..
- Guber & Wise(2001).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on Policies for an Ageing Society,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Working Paper 8103*. NBER.
- ILO(2000). *World Labour Report 2000: Income Security and Social Protection in a Changing World*.
-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2000). *Korean Taxation*.
- OECD(1996a). *Net Public Social Expenditure*. Paris.
- _____ (1996b). *Social Expenditure Statistics of OECD Member Countries*. Provisional Version. Paris.
- _____ (1998). *The Growing Role of Private Social Benefits*. Paris.
- _____ (1999a). *Revenue Statistics 1965/1998*. Paris.

- _____(1999b). *Social Expenditure Database 1980~1996*. Paris.
- _____(2000a). *A System of Health Accounts. Version 10*. Paris.
- _____(2000b). *Revenue Statistics 1965/1999*. Paris.
- _____(2001a). *Net Social Expenditure*, 2nd ed. Paris.
- _____(2001b). *Society at a Glance - OECD Social Indicators*. Paris.
- _____(2001c). *Social Expenditure Database 1980~1998*, 3rd ed. Paris.
- _____(2001d). *Taxing Wages 1999-2000*. Paris.
- _____(2002a). *2003 Edition of SOCX Database - A New Structure*. Paris.
- _____(2002b). *Revenue Statistics 1965/2001*. Paris.
- _____(2002c). *Taxing Wages 2000-2001*. Paris.
- _____(2003). *Taxing Wages 2001-2002*. Paris.
- _____(2004). *Social Expenditure Database(SOCX) 1980-2001*. Paris.
- _____(2005a). *Society at a Glance*. Paris.
- _____(2005b). *Private pensions: OECD classification and glossary*.
- _____(2005c). *Net social expenditure, 2005 Edition-more comprehensive measures of social support*. Paris.
- _____(2006). *Social Expenditure Database*. Paris.
- _____(2007a). *The Social Expenditure Database: An Interpretive Guide SOCX 1980-2003*. Paris.
- _____(2007b). *2005 Edition of SOCX Database An interpretive guide*. Paris.
- _____(2009). *Pensions at a glance*. Paris.
- Pat Thane(1987). The Growing Burden of an Ageing Population?, *Journal of Public Policy* 7(4), 373-387.
- Robert Holzmann(2000). The World Bank Approach to Pensions Reform.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Review*, 53(1): 11-34
- _____ & Richard Hints(2005). *Old-age income support in the 21st century: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on pension systems and reform*. The World Bank, Washington, D.C..

Stanley DeViney(1983). Characteristics of the State and the Expansion of Public Social Expenditures, *Comparative Social Research* 6, 151-173.

The world bank(2005). *Old-age Income Support in the 21st Century*.

UN(1993). *System of National Accounts*.

Willem Adema & Maxime Ladaïque(2005). Net social employment, 2005 edition,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29*. OECD.

(2009). How expensive is the welfare state? Gross and net indicators in the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SOCX),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92*, OECD.

삼성그룹(<http://www.samsung.co.kr>)에서 기업의 사회적 공헌에 관한 지출 자료를 검색함(2009년 5월 17일).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http://www.nps.or.kr>)에서 국민연금통계 및 외국의 연금제도 자료를 검색함(2009년 9월 2일).

부 록



〈부표 1〉 OECD 사회복지지출 항목의 분류

| 부 문 | 관 심 영 역 | 세 부 관 심 영 역 |
|----------------------------------|------------------------|---|
| 1. 노 령 | 1.1. 현금급여 1.2. 현물급여 | 1.1.1. 연금 1.1.2. 조기퇴직연금 1.1.3. 기타 현금급여 1.2.1. 돌봄서비스/가사보조서비스 1.2.2. 기타 현물급여 |
| 2. 유 족 | 2.1. 현금급여 2.2. 현물급여 | 2.1.1. 연금 2.1.2. 기타 현금급여 2.2.1. 장례비 2.2.2. 기타 현물급여 |
| 3.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 (장애, 산업재해, 질병) | 3.1. 현금급여 3.2. 현물급여 | 3.1.1. 장애연금 3.1.2. 연금(산업재해) 3.1.3. 유급질병휴가(산업재해) 3.1.4. 유급질병휴가(기타 질병수당) 3.1.5. 기타 현금급여 3.2.1. 돌봄서비스/가사보조서비스 3.2.2. 재활서비스 3.2.3. 기타 현물급여 |

〈부표 1〉 계 속

| 부 문 | 관 심 영 역 | 세 부 관 심 영 역 |
|------------------|----------------------|--|
| 4. 보건 | 4.2 현물급여 | |
| 5. 가족 | 5.1 현금급여 5.2 현물급여 | 5.1.1 가족수당 5.1.2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5.1.3 기타 현금급여 5.2.1 아동주간보호/가사서비스 5.2.2 기타 현물급여 |
| 6.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 | 6.1.1 고용서비스와 행정 6.1.2 노동시장훈련 6.1.3 청소년 지원 6.1.4 고용보조프로그램 6.1.5 장애인고용 지원 |
| 7. 실업 | 7.1 현금급여 7.2 현물급여 | 7.1.1 실업보상/해고수당 7.1.2 노동시장의 환경으로 인한 조기퇴직 |
| 8. 주거 | 8.2 현물급여 | 8.2.1 주거보조 8.2.2 기타 현물급여 |
| 9. 기타 사회정책 영역 | 9.1 현금급여 9.2 현물급여 | 9.1.1 소득지원 9.1.2 기타 현금급여 9.2.1 사회부조 9.2.2 기타 현물급여 |

자료: OECD, The Social Expenditure Database: An Interpretive Guide, 2007, p. 12.

〈부표 2〉 한국의 공공부문 기능별 분류와 관련부처, 프로그램 예시(2007)

(단위: 십억원)

| 기능 | 관련부처 | 프로그램 예시 | 지출 |
|------------|---------------------------------|--|--------|
| 노령 | 보건복지가족부 | - 노령연금, 교통수당, 독거노인도우미파견, 노인그룹홈신축, 재가지원센터지원, 대한노인회취업지원센터, 한국노인인력개발원지원, 한인국민임대주택입주비, 공공임대주택건설비 | 15,707 |
| |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노동부 | - 공무원연금(퇴직연금 등), 사학연금(퇴직연금 등), 군인연금(퇴역연금 등), 별정우체국직원연금(퇴직연금 등) | |
| 유족 | 보건복지가족부 | - 국민연금(유족연금), 건강보험(장제비) | 2,471 |
| | 국가보훈처 | - 보훈연금(군경유족 등)과 기타수당(625전몰군경자녀수당, 고엽제후유증 등), 수시보상금(사망일시금, 군인사망보상금, 상상급여금 등) | |
| |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 국방부 | - 공무원연금(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등), 사학연금(유족연금, 유족연금 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등), 군인연금(사망조위금, 유족연금 등), 별정우체국직원연금(유족연금 등) | |
| 근로능력 관련 급여 | 보건복지가족부 | - 국민연금(장애연금 등), 장애수당, 장애인 자녀학비지원,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급, 장애인의료재활, 직업재활지원, 장애인주민자치센터도우미지원,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장애인단체지원, 공공임대주택건설비 | 5,375 |
| |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 국방부, 국가보훈처 | - 공무원연금(장애보상금, 장해연금, 공무상요양비 등), 사학연금(장해연금), 병원학교운영지원, 장애아무상교육비,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 산재보험(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장해급여 등), 군인연금(상이연금), 보훈보상금(상이군경) | |
| 보건 | 보건복지가족부 | - 의료급여, 건강보험(본인부담액보상금) | 33,702 |
| |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 국방부, 법무부 | - 집단보건의료(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법무부), 사학연금(직무상요양비 등), 산재보험(요양급여) | |
| 가족 | 보건복지가족부 | - 학대실종아동보호지원기관, 성폭력전담센터, 입양아동양육수당지원, 장애아동입양양육보조금, 지역아동센터운영, 저소득층학생 능공부방운영, 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 저소득층보육료지원, 만5세아무상보육, 장애아보육료지원, 두자녀이상보육료지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인건비, 불임부부지원 | 4,461 |
| | 교육과학기술부, 국가보훈처 | - 유아교육비 지원, 방과후학교운영, 급식비지원, 농산어촌교육여건개선, 다문화가정지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 학자금지급(국가보훈처) | |
| | 노동부 | - 고용보험(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 |
| | 여성부 | -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 상담소 운영, 성매매방지및피해여성보호 등 | |
| ALMP | 노동부 | - 고용보험(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 1,267 |
| 실업 | 노동부 | - 고용보험(구직급여, 상병급여, 조기재취업, 기타) | 2,434 |
| 주거 | - | - | - |
| 기타 | 보건복지가족부 |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자활소득공제, 자활공동체창업자금지원, 저소득층 생업자금융자, 부령인정의사상자 지원, 공공임대주택건설비 | 7,547 |
| | 교육과학기술부, 행안부, 국방부 | - 사학연금(재해부조금), 공무원연금(재해부조금), 군인연금(재해부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재해부조금) | |
| | 교육과학기술부, 통일부 | - 새터민 정착금, 교육훈련, 북한이탈청소년지원 | |
| | 소방방재청 | - 이재민구호, 주택피해복구비 등 | |

주: ALMP는 적극적노동시장프로그램을 뜻함.

165

부
록

〈부표 3〉 한국의 법정민간부문 기능별 분류와 관련부처, 프로그램 예시(2007)

(단위: 십억원)

| 기능 | 관련부처 | 프로그램 예시 | 지출 |
|-------|---------|---|-------|
| 노령 | 노동부 | - 법정퇴직금 | 4,017 |
| | 보건복지가족부 | - 교통비 감면(철도, 전철, 지하철, 대한항공, 아시아나 등) - 문화체험우대(고궁·능) | |
| 유족 | - | - | - |
| 근로무능력 | 보건복지가족부 | - 장애인 교통 및 통신비 감면(일반철도, 지하철,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에어, 고속도로통행료, TV 수신료, 휴대폰 이용요금) | 1,211 |
| | 노동부 | - 질병휴가급여 | |
| 보건 | - | - | - |
| 가족 | 노동부 | - 출산휴가급여 | 459 |
| | 보건복지가족부 | - 아동복지시설 복지통신 요금 | |
| ALMP | - | - | - |
| 실업 | - | - | - |
| 주거 | - | - | - |
| 기타 | 국방부 | - 군인교통비 감면(일반철도) | 44 |
| | 보건복지가족부 | - 저소득층 TV 시청료 및 복지통신요금 | |

주: ALMP는 적극적노동시장프로그램을 뜻함.

〈부표 4〉 교통·통신요금의 감면대상자와 감면기준

| 제 도 | | 노 인 | 장 애 인 | 보 훈 대 상 자 |
|------------------|----------------------|--|---|--|
| 통 신 요 금 | 시내·외 전화요금 | - | -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 시내통화료(50%) · 시외통화료(월 3만원 사용한도 에서 50%) · 114안내요금(100%) · 전화회선으로 PC통신 이용시 동일 할인을 적용 | · 시내·외 통화료 50% |
| | 이동통신 요금 | - | -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 이동전화(신규가입비면제, 기본요금 및 사용요금 30% 및 전파사용료 면제) · 무선호출기(기본요금의 20%) | · 이동전화(기본요금의 30%) |
| | TV 수신료 | - | 면 제 | 면 제 |
| 교 통 요 금 | 철도요금 | · 무궁화호(30%) · 통일호(50%), · 전철(무료) | · 무궁화호, 통일호, 비둘기호 (50%) · 전철(무료) | 1년 6매 무료제공 (무궁화호 이하 이용) |
| | 도시철도 (지하철· 전철) | 무 료 | 무 료 | 무 료 |
| | 국내선 항공료 | 10% | - 등록 장애인, 동행보호자 1인 50%(1~3급) | 일반유공자 30% 상이군경, 동행보호자 1인 50%(1~4급) |
| | 고속도로 통행료 | - | 50% | 1~5급: 면제, 6급: 50% 승합, 화물차: 50% |
| 공 공 시 설 | 국·공립 박물관, 공원 | 무 료 (단, 국·공립국악 원은 50% 이상) | 무 료 (단, 국·공립 공연장 및 공공 체육시설은 50%) | 무 료(공원) |
| | 고 궁 | 무 료 | 무 료 | 무 료 |

주: ‘-’표는 제도 없음

〈부표 5〉 사회복지지출

(단위: 십억원)

| 구 분 | 총사회복지지출(C+D) | | | | | GDP (조원) | 연평균 증가율 (공공부문,A) |
|------|---------------|-----------|--------|----------------|--------|-------------|------------------------|
| | 사회복지지출(C=A+B) | | | 자발적 민간부문(D) | | | |
| | 공공부문(A) | 법정민간부문(B) | | | | | |
| 1990 | 6,141 | 5,939 | 5,437 | 502 | 202 | 186.7 | 16.50 |
| 1991 | 7,210 | 6,979 | 6,389 | 591 | 231 | 226.0 | |
| 1992 | 8,815 | 8,556 | 7,845 | 711 | 259 | 257.5 | |
| 1993 | 10,221 | 9,890 | 9,088 | 802 | 331 | 290.7 | |
| 1994 | 12,132 | 11,712 | 10,695 | 1,017 | 420 | 340.2 | |
| 1995 | 22,524 | 14,557 | 13,282 | 1,274 | 7,967 | 398.8 | |
| 1996 | 26,464 | 17,173 | 15,725 | 1,448 | 9,292 | 448.6 | |
| 1997 | 31,259 | 21,036 | 18,641 | 2,395 | 10,223 | 491.1 | |
| 1998 | 38,966 | 30,144 | 25,292 | 4,851 | 8,823 | 484.1 | |
| 1999 | 48,038 | 36,655 | 33,273 | 3,382 | 11,383 | 529.5 | |
| 2000 | 45,134 | 33,040 | 28,575 | 4,464 | 12,094 | 603.2 | |
| 2001 | 50,481 | 37,590 | 33,764 | 3,827 | 12,890 | 651.4 | |
| 2002 | 54,369 | 40,002 | 36,303 | 3,700 | 14,366 | 720.5 | |
| 2003 | 61,554 | 44,943 | 40,602 | 4,341 | 16,611 | 767.1 | |
| 2004 | 67,619 | 54,316 | 49,370 | 4,946 | 13,303 | 826.9 | |
| 2005 | 75,513 | 60,535 | 55,581 | 4,954 | 14,978 | 865.2 | |
| 2006 | 88,981 | 71,581 | 66,325 | 5,256 | 17,400 | 908.7 | |
| 2007 | 98,650 | 78,696 | 72,964 | 5,732 | 19,954 | 975.0 | |

〈부표 6〉 사회복지지출(구성비)

(단위: %)

| 구 분 | 총사회복지지출(C+D) | | | | |
|------|--------------|---------------|---------|-----------|------------|
| | | 사회복지지출(C=A+B) | | | 자발적민간부문(D) |
| | | | 공공부문(A) | 법정민간부문(B) | |
| 1990 | 100.0 | 96.7 | 88.5 | 8.2 | 3.3 |
| 1991 | 100.0 | 96.8 | 88.6 | 8.2 | 3.2 |
| 1992 | 100.0 | 97.1 | 89.0 | 8.1 | 2.9 |
| 1993 | 100.0 | 96.8 | 88.9 | 7.9 | 3.2 |
| 1994 | 100.0 | 96.5 | 88.2 | 8.4 | 3.5 |
| 1995 | 100.0 | 64.6 | 59.0 | 5.7 | 35.4 |
| 1996 | 100.0 | 64.9 | 59.4 | 5.5 | 35.1 |
| 1997 | 100.0 | 67.3 | 59.6 | 7.7 | 32.7 |
| 1998 | 100.0 | 77.4 | 64.9 | 12.4 | 22.6 |
| 1999 | 100.0 | 76.3 | 69.3 | 7.0 | 23.7 |
| 2000 | 100.0 | 73.2 | 63.3 | 9.9 | 26.8 |
| 2001 | 100.0 | 74.5 | 66.9 | 7.6 | 25.5 |
| 2002 | 100.0 | 73.6 | 66.8 | 6.8 | 26.4 |
| 2003 | 100.0 | 73.0 | 66.0 | 7.1 | 27.0 |
| 2004 | 100.0 | 80.3 | 73.0 | 7.3 | 19.7 |
| 2005 | 100.0 | 80.2 | 73.6 | 6.6 | 19.8 |
| 2006 | 100.0 | 80.4 | 74.5 | 5.9 | 19.6 |
| 2007 | 100.0 | 79.8 | 74.0 | 5.8 | 20.2 |

〈부표 7〉 사회복지지출(증감률)

(단위: %)

| 구 분 | 총사회복지지출(C+D) | | | | |
|------|--------------|---------------|---------|-----------|------------|
| | | 사회복지지출(C=A+B) | | | 자발적민간부문(D) |
| | | | 공공부문(A) | 법정민간부문(B) | |
| 1991 | 17.4 | 17.5 | 17.5 | 17.6 | 14.3 |
| 1992 | 22.3 | 22.6 | 22.8 | 20.4 | 12.2 |
| 1993 | 16.0 | 15.6 | 15.8 | 12.8 | 28.0 |
| 1994 | 18.7 | 18.4 | 17.7 | 26.7 | 26.9 |
| 1995 | 85.7 | 24.3 | 24.2 | 25.3 | 1,796.6 |
| 1996 | 17.5 | 18.0 | 18.4 | 13.6 | 16.6 |
| 1997 | 18.1 | 22.5 | 18.5 | 65.4 | 10.0 |
| 1998 | 24.7 | 43.3 | 35.7 | 102.5 | -13.7 |
| 1999 | 23.3 | 21.6 | 31.6 | -30.3 | 29.0 |
| 2000 | -6.0 | -9.9 | -14.1 | 32.0 | 6.2 |
| 2001 | 11.8 | 13.8 | 18.2 | -14.3 | 6.6 |
| 2002 | 7.7 | 6.4 | 7.5 | -3.3 | 11.4 |
| 2003 | 13.2 | 12.4 | 11.8 | 17.3 | 15.6 |
| 2004 | 9.9 | 20.9 | 21.6 | 13.9 | -19.9 |
| 2005 | 11.7 | 11.5 | 12.6 | 0.2 | 12.6 |
| 2006 | 17.8 | 18.2 | 19.3 | 6.1 | 16.2 |
| 2007 | 10.9 | 9.9 | 10.0 | 9.1 | 14.7 |

170

〈부표 8〉 사회복지지출(GDP 대비)

(단위: %)

| 구 분 | 총사회복지지출(C+D) | | | | |
|------|--------------|------|---------------|-----------|------------|
| | | | 사회복지지출(C=A+B) | | 자발적민간부문(D) |
| | | | 공공부문(A) | 법정민간부문(B) | |
| 1990 | 3.29 | 3.18 | 2.91 | 0.27 | 0.11 |
| 1991 | 3.19 | 3.09 | 2.83 | 0.26 | 0.10 |
| 1992 | 3.42 | 3.32 | 3.05 | 0.28 | 0.10 |
| 1993 | 3.52 | 3.40 | 3.13 | 0.28 | 0.11 |
| 1994 | 3.57 | 3.44 | 3.14 | 0.30 | 0.12 |
| 1995 | 5.65 | 3.65 | 3.33 | 0.32 | 2.00 |
| 1996 | 5.90 | 3.83 | 3.51 | 0.32 | 2.07 |
| 1997 | 6.36 | 4.28 | 3.80 | 0.49 | 2.08 |
| 1998 | 8.05 | 6.23 | 5.22 | 1.00 | 1.82 |
| 1999 | 9.07 | 6.92 | 6.28 | 0.64 | 2.15 |
| 2000 | 7.48 | 5.48 | 4.74 | 0.74 | 2.00 |
| 2001 | 7.75 | 5.77 | 5.18 | 0.59 | 1.98 |
| 2002 | 7.55 | 5.55 | 5.04 | 0.51 | 1.99 |
| 2003 | 8.02 | 5.86 | 5.29 | 0.57 | 2.17 |
| 2004 | 8.18 | 6.57 | 5.97 | 0.60 | 1.61 |
| 2005 | 8.73 | 7.00 | 6.42 | 0.57 | 1.73 |
| 2006 | 9.79 | 7.88 | 7.30 | 0.58 | 1.91 |
| 2007 | 10.12 | 8.07 | 7.48 | 0.59 | 2.05 |

〈부표 9〉 기능별 사회복지지출

(단위: 십억원)

| | 사회복지지출 | | | | | | | | | | | |
|------|--------|-------------------------|-------|-------------|-------|--------|-----------------------|-------|----------|-------|------|-------|
| | 1.노령 | 정년 퇴직자의 법정 퇴직금 | 2.유족 | 3.근로 무능력 | 4.보건 | 5.가족 | 6.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 7.실업 | 실업 보상 | 8.주거 | 9.기타 | |
| | | | | | | | | | | | | |
| 1990 | 5,939 | 1,525 | 359 | 298 | 705 | 2,964 | 60 | 51 | - | - | - | 335 |
| 1991 | 6,979 | 1,895 | 424 | 409 | 944 | 3,263 | 89 | 44 | - | - | - | 336 |
| 1992 | 8,556 | 2,549 | 521 | 452 | 1,178 | 3,835 | 111 | 103 | - | - | - | 328 |
| 1993 | 9,890 | 3,258 | 597 | 494 | 1,182 | 4,300 | 154 | 144 | - | - | - | 359 |
| 1994 | 11,712 | 4,114 | 797 | 569 | 1,495 | 4,873 | 185 | 114 | - | - | - | 363 |
| 1995 | 14,557 | 5,357 | 984 | 637 | 1,744 | 5,928 | 263 | 168 | - | - | - | 459 |
| 1996 | 17,173 | 5,742 | 1,091 | 720 | 2,049 | 7,543 | 339 | 184 | 10 | 10 | - | 586 |
| 1997 | 21,036 | 7,330 | 1,872 | 819 | 2,443 | 8,746 | 515 | 360 | 79 | 79 | - | 745 |
| 1998 | 30,144 | 13,159 | 4,226 | 874 | 2,504 | 9,648 | 644 | 1,627 | 799 | 799 | - | 888 |
| 1999 | 36,655 | 15,614 | 2,606 | 900 | 2,432 | 11,352 | 685 | 3,266 | 936 | 936 | - | 1,469 |
| 2000 | 33,040 | 11,048 | 3,474 | 1,040 | 2,851 | 12,779 | 879 | 2,313 | 471 | 471 | - | 1,659 |
| 2001 | 37,590 | 9,318 | 2,599 | 1,172 | 3,327 | 17,647 | 1,252 | 1,429 | 845 | 845 | - | 2,600 |
| 2002 | 40,002 | 9,668 | 2,330 | 1,364 | 3,962 | 18,501 | 1,278 | 1,342 | 835 | 835 | - | 3,052 |
| 2003 | 44,943 | 11,663 | 2,863 | 1,597 | 4,600 | 20,248 | 1,589 | 932 | 1,030 | 1,030 | - | 3,284 |
| 2004 | 54,316 | 14,513 | 3,266 | 1,825 | 5,381 | 22,369 | 2,330 | 941 | 1,448 | 1,448 | - | 5,509 |
| 2005 | 60,535 | 15,836 | 3,182 | 2,013 | 5,713 | 25,628 | 2,518 | 1,035 | 1,752 | 1,752 | - | 6,040 |
| 2006 | 71,581 | 17,512 | 3,330 | 2,235 | 6,248 | 29,894 | 5,010 | 1,089 | 2,074 | 2,074 | - | 7,519 |
| 2007 | 78,696 | 19,724 | 3,663 | 2,471 | 6,587 | 33,702 | 4,920 | 1,267 | 2,434 | 2,434 | - | 7,591 |

〈부표 10〉 기능별 사회복지지출(구성비)

(단위: %)

| | 사회복지지출 | | | | | | | | | | | |
|------|--------|------|-------------------------|------|-------------|------|------|-----------------------|------|----------|------|------|
| | | 1.노령 | 정년 퇴직자의 법정 퇴직금 | 2.유족 | 3.근로 무능력 | 4.보건 | 5.가족 | 6.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 7.실업 | 실업 보상 | 8.주거 | 9.기타 |
| | | | | | | | | | | | | |
| 1990 | 100.0 | 25.7 | 6.1 | 5.0 | 11.9 | 49.9 | 1.0 | 0.9 | - | - | - | 5.6 |
| 1991 | 100.0 | 27.1 | 6.1 | 5.9 | 13.5 | 46.7 | 1.3 | 0.6 | - | - | - | 4.8 |
| 1992 | 100.0 | 29.8 | 6.1 | 5.3 | 13.8 | 44.8 | 1.3 | 1.2 | - | - | - | 3.8 |
| 1993 | 100.0 | 32.9 | 6.0 | 5.0 | 12.0 | 43.5 | 1.6 | 1.5 | - | - | - | 3.6 |
| 1994 | 100.0 | 35.1 | 6.8 | 4.9 | 12.8 | 41.6 | 1.6 | 1.0 | - | - | - | 3.1 |
| 1995 | 100.0 | 36.8 | 6.8 | 4.4 | 12.0 | 40.7 | 1.8 | 1.2 | - | - | - | 3.2 |
| 1996 | 100.0 | 33.4 | 6.4 | 4.2 | 11.9 | 43.9 | 2.0 | 1.1 | 0.1 | 0.1 | - | 3.4 |
| 1997 | 100.0 | 34.8 | 8.9 | 3.9 | 11.6 | 41.6 | 2.4 | 1.7 | 0.4 | 0.4 | - | 3.5 |
| 1998 | 100.0 | 43.7 | 14.0 | 2.9 | 8.3 | 32.0 | 2.1 | 5.4 | 2.7 | 2.7 | - | 2.9 |
| 1999 | 100.0 | 42.6 | 7.1 | 2.5 | 6.6 | 31.0 | 1.9 | 8.9 | 2.6 | 2.6 | - | 4.0 |
| 2000 | 100.0 | 33.4 | 10.5 | 3.1 | 8.6 | 38.7 | 2.7 | 7.0 | 1.4 | 1.4 | - | 5.0 |
| 2001 | 100.0 | 24.8 | 6.9 | 3.1 | 8.8 | 46.9 | 3.3 | 3.8 | 2.2 | 2.2 | - | 6.9 |
| 2002 | 100.0 | 24.2 | 5.8 | 3.4 | 9.9 | 46.2 | 3.2 | 3.4 | 2.1 | 2.1 | - | 7.6 |
| 2003 | 100.0 | 26.0 | 6.4 | 3.6 | 10.2 | 45.1 | 3.5 | 2.1 | 2.3 | 2.3 | - | 7.3 |
| 2004 | 100.0 | 26.7 | 6.0 | 3.4 | 9.9 | 41.2 | 4.3 | 1.7 | 2.7 | 2.7 | - | 10.1 |
| 2005 | 100.0 | 26.2 | 5.3 | 3.3 | 9.4 | 42.3 | 4.2 | 1.7 | 2.9 | 2.9 | - | 10.0 |
| 2006 | 100.0 | 24.5 | 4.7 | 3.1 | 8.7 | 41.8 | 7.0 | 1.5 | 2.9 | 2.9 | - | 10.5 |
| 2007 | 100.0 | 25.1 | 4.7 | 3.1 | 8.4 | 42.8 | 6.3 | 1.6 | 3.1 | 3.1 | - | 9.6 |

〈부표 11〉 기능별 사회복지지출(증감률)

(단위: %)

| | 사회복지지출 | | | | | | | | | | | |
|------|--------|-------|-------------------------|------|-------------|------|------|-----------------------|-------|----------|------|------|
| | | 1.노령 | 정년 퇴직자의 법정 퇴직금 | 2.유족 | 3.근로 무능력 | 4.보건 | 5.가족 | 6.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 7.실업 | 실업 보상 | 8.주거 | 9.기타 |
| | | | | | | | | | | | | |
| 1990 | | | | | | | | | | | | |
| 1991 | 17.5 | 24.2 | 18.0 | 37.2 | 33.9 | 10.1 | 48.2 | -14.0 | - | - | - | 0.2 |
| 1992 | 22.6 | 34.6 | 22.9 | 10.3 | 24.8 | 17.5 | 24.9 | 136.5 | - | - | - | -2.3 |
| 1993 | 15.6 | 27.8 | 14.6 | 9.3 | 0.3 | 12.1 | 38.7 | 39.6 | - | - | - | 9.3 |
| 1994 | 18.4 | 26.3 | 33.4 | 15.2 | 26.5 | 13.3 | 20.2 | -20.6 | - | - | - | 1.1 |
| 1995 | 24.3 | 30.2 | 23.5 | 12.1 | 16.6 | 21.7 | 42.4 | 46.9 | - | - | - | 26.6 |
| 1996 | 18.0 | 7.2 | 10.8 | 13.0 | 17.5 | 27.2 | 28.8 | 9.2 | - | - | - | 27.6 |
| 1997 | 22.5 | 27.7 | 71.6 | 13.8 | 19.2 | 15.9 | 52.0 | 95.8 | 652.8 | 652.8 | - | 27.1 |
| 1998 | 43.3 | 79.5 | 125.8 | 6.7 | 2.5 | 10.3 | 25.1 | 352.6 | 915.3 | 915.3 | - | 19.2 |
| 1999 | 21.6 | 18.7 | -38.3 | 3.0 | -2.9 | 17.7 | 6.3 | 100.7 | 17.1 | 17.1 | - | 65.5 |
| 2000 | -9.9 | -29.2 | 33.3 | 15.5 | 17.2 | 12.6 | 28.3 | -29.2 | -49.7 | -49.7 | - | 12.9 |
| 2001 | 13.8 | -15.7 | -25.2 | 12.7 | 16.7 | 38.1 | 42.5 | -38.2 | 79.5 | 79.5 | - | 56.7 |
| 2002 | 6.4 | 3.8 | -10.3 | 16.4 | 19.1 | 4.8 | 2.1 | -6.0 | -1.2 | -1.2 | - | 17.3 |
| 2003 | 12.4 | 20.6 | 22.8 | 17.1 | 16.1 | 9.4 | 24.3 | -30.6 | 23.4 | 23.4 | - | 7.6 |
| 2004 | 20.9 | 24.4 | 14.1 | 14.3 | 17.0 | 10.5 | 46.6 | 0.9 | 40.6 | 40.6 | - | 67.7 |
| 2005 | 11.5 | 9.1 | -2.6 | 10.3 | 6.2 | 14.6 | 8.0 | 10.0 | 21.0 | 21.0 | - | 9.6 |
| 2006 | 18.2 | 10.6 | 4.6 | 11.0 | 9.4 | 16.6 | 99.0 | 5.3 | 18.4 | 18.4 | - | 24.5 |
| 2007 | 9.9 | 12.6 | 10.0 | 10.6 | 5.4 | 12.7 | -1.8 | 16.3 | 17.4 | 17.4 | - | 1.0 |

〈부표 12〉 기능별 사회복지지출(GDP 대비)

(단위: %)

| | 사회복지지출 | | | | | | | | | | | |
|------|--------|------|-------------------------|------|-------------|------|------|-----------------------|------|----------|------|------|
| | | 1.노령 | 정년 퇴직자의 법정 퇴직금 | 2.유족 | 3.근로 무능력 | 4.보건 | 5.가족 | 6.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 7.실업 | 실업 보상 | 8.주거 | 9.기타 |
| 1990 | 3.18 | 0.82 | 0.19 | 0.16 | 0.38 | 1.59 | 0.03 | 0.03 | - | - | - | 0.18 |
| 1991 | 3.09 | 0.84 | 0.23 | 0.18 | 0.42 | 1.44 | 0.04 | 0.02 | - | - | - | 0.15 |
| 1992 | 3.32 | 0.99 | 0.28 | 0.18 | 0.46 | 1.49 | 0.04 | 0.04 | - | - | - | 0.13 |
| 1993 | 3.40 | 1.12 | 0.32 | 0.17 | 0.41 | 1.48 | 0.05 | 0.05 | - | - | - | 0.12 |
| 1994 | 3.44 | 1.21 | 0.43 | 0.17 | 0.44 | 1.43 | 0.05 | 0.03 | - | - | - | 0.11 |
| 1995 | 3.65 | 1.34 | 0.53 | 0.16 | 0.44 | 1.49 | 0.07 | 0.04 | - | - | - | 0.12 |
| 1996 | 3.83 | 1.28 | 0.58 | 0.16 | 0.46 | 1.68 | 0.08 | 0.04 | 0.00 | 0.00 | - | 0.13 |
| 1997 | 4.28 | 1.49 | 1.00 | 0.17 | 0.50 | 1.78 | 0.10 | 0.07 | 0.02 | 0.02 | - | 0.15 |
| 1998 | 6.23 | 2.72 | 2.26 | 0.18 | 0.52 | 1.99 | 0.13 | 0.34 | 0.17 | 0.17 | - | 0.18 |
| 1999 | 6.92 | 2.95 | 1.40 | 0.17 | 0.46 | 2.14 | 0.13 | 0.62 | 0.18 | 0.18 | - | 0.28 |
| 2000 | 5.48 | 1.83 | 1.86 | 0.17 | 0.47 | 2.12 | 0.15 | 0.38 | 0.08 | 0.08 | - | 0.28 |
| 2001 | 5.77 | 1.43 | 1.39 | 0.18 | 0.51 | 2.71 | 0.19 | 0.22 | 0.13 | 0.13 | - | 0.40 |
| 2002 | 5.55 | 1.34 | 1.25 | 0.19 | 0.55 | 2.57 | 0.18 | 0.19 | 0.12 | 0.12 | - | 0.42 |
| 2003 | 5.86 | 1.52 | 1.53 | 0.21 | 0.60 | 2.64 | 0.21 | 0.12 | 0.13 | 0.13 | - | 0.43 |
| 2004 | 6.57 | 1.76 | 1.75 | 0.22 | 0.65 | 2.71 | 0.28 | 0.11 | 0.18 | 0.18 | - | 0.67 |
| 2005 | 7.00 | 1.83 | 1.70 | 0.23 | 0.66 | 2.96 | 0.29 | 0.12 | 0.20 | 0.20 | - | 0.70 |
| 2006 | 7.88 | 1.93 | 1.78 | 0.25 | 0.69 | 3.29 | 0.55 | 0.12 | 0.23 | 0.23 | - | 0.83 |
| 2007 | 8.07 | 2.02 | 1.96 | 0.25 | 0.68 | 3.46 | 0.50 | 0.13 | 0.25 | 0.25 | - | 0.78 |

〈부표 13〉 재원별 사회복지지출 현황

(단위: 십억원)

| 재원 | 세부재원 | 1990 | 1991 | 1992 | 1993 | 1994 | 1995 |
|----------|--------------|-------|-------|-------|-------|--------|--------|
| 합 계 | | 5,939 | 6,979 | 8,556 | 9,890 | 11,712 | 14,557 |
| 공공 부문 | 소 계 | 5,437 | 6,389 | 7,845 | 9,088 | 10,695 | 13,282 |
| | 정 부 | 1,902 | 2,275 | 2,587 | 2,891 | 3,361 | 3,890 |
| | 사회보험 | 3,534 | 4,115 | 5,256 | 6,198 | 7,334 | 9,392 |
| | 연 금 | 1,235 | 1,571 | 2,141 | 2,785 | 3,453 | 4,482 |
| | 의료보장 | 1,760 | 1,842 | 2,183 | 2,560 | 2,902 | 3,774 |
| | 산업재해 보상보험 | 539 | 702 | 932 | 853 | 979 | 1,134 |
| | 고용보험 | - | - | - | - | - | 2 |
| 민간 부문 | 민 간 | 502 | 591 | 711 | 802 | 1,017 | 1,220 |
| | 법정퇴직금 | 359 | 424 | 521 | 597 | 797 | 984 |
| | 산전후 휴가급여 | - | - | - | - | - | - |
| | 유급질병 휴가급여 | 143 | 166 | 190 | 205 | 220 | 235 |
| | 민간복지서비스 | - | - | - | - | - | 55 |

〈부표 13〉 계속

(단위: 십억원)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세부재원 | 재원 |
|--------|--------|--------|--------|--------|--------|--------------|----------|
| 17,173 | 21,036 | 30,144 | 36,655 | 33,040 | 37,590 | 합 계 | |
| 15,725 | 18,641 | 25,292 | 33,273 | 28,575 | 33,764 | 소 계 | 공공 부문 |
| 5,040 | 6,050 | 7,280 | 9,273 | 8,996 | 9,728 | 정 부 | |
| 10,685 | 12,592 | 18,018 | 23,999 | 19,579 | 24,036 | 사회보험 | |
| 4,728 | 5,511 | 8,945 | 13,052 | 7,656 | 6,712 | 연 금 | |
| 4,578 | 5,407 | 6,512 | 8,235 | 9,545 | 14,218 | 의료보장 | |
| 1,355 | 1,556 | 1,451 | 1,274 | 1,456 | 1,745 | 산업재해 보상보험 | |
| 24 | 118 | 1,110 | 1,438 | 922 | 1,361 | 고용보험 | |
| 1,380 | 2,299 | 4,717 | 3,210 | 4,193 | 3,479 | 민 간 | 민간 부문 |
| 1,091 | 1,872 | 4,226 | 2,606 | 3,474 | 2,599 | 법정퇴직금 | |
| - | 85 | 94 | 153 | 212 | 309 | 산전후 휴가급여 | |
| 289 | 343 | 397 | 451 | 506 | 571 | 유급질병 휴가급여 | |
| 68 | 96 | 134 | 172 | 272 | 348 | 민간복지서비스 | |

177

부
록

〈부표 13〉 계속

(단위: 십억원)

| 재원 | 세부재원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
| 합 계 | | 40,002 | 44,943 | 54,316 | 60,535 | 71,581 | 78,696 |
| 공공 부문 | 소 계 | 36,303 | 40,602 | 49,370 | 55,581 | 66,325 | 72,964 |
| | 정 부 | 10,760 | 11,685 | 16,611 | 18,504 | 23,991 | 25,581 |
| | 사회보험 | 25,542 | 28,916 | 32,765 | 37,070 | 42,335 | 47,383 |
| | 연 금 | 7,330 | 8,912 | 10,294 | 12,095 | 13,332 | 15,100 |
| | 의료보장 | 14,849 | 15,881 | 17,479 | 19,357 | 22,798 | 25,398 |
| | 산업재해 보상보험 | 2,016 | 2,482 | 2,860 | 3,026 | 3,164 | 3,242 |
| | 고용보험 | 1,347 | 1,641 | 2,132 | 2,592 | 3,041 | 3,642 |
| | 민 간 | 3,269 | 3,816 | 4,329 | 4,240 | 4,453 | 4,817 |
| 민간 부문 | 법정퇴직금 | 2,330 | 2,863 | 3,266 | 3,182 | 3,330 | 3,663 |
| | 산전후 휴가급여 | 260 | 321 | 362 | 307 | 366 | 459 |
| | 유급질병 휴가급여 | 679 | 633 | 701 | 751 | 757 | 695 |
| | 민간복지서비스 | 430 | 525 | 617 | 715 | 803 | 915 |
| | | | | | | | |

〈부표 14〉 재원별 사회복지지출 현황(증감률)

(단위: %)

| 재원 | 세부재원 | 1990 | 1991 | 1992 | 1993 | 1994 | 1995 | 1996 | 1997 | 1998 |
|----------|--------------|------|------|------|------|------|------|---------|-------|-------|
| 합 계 | | | 17.5 | 22.6 | 15.6 | 18.4 | 24.3 | 18.0 | 22.5 | 43.3 |
| 공공 부문 | 소 계 | | 17.5 | 22.8 | 15.8 | 17.7 | 24.2 | 18.4 | 18.5 | 35.7 |
| | 정 부 | | 19.6 | 13.7 | 11.8 | 16.3 | 15.7 | 29.6 | 20.0 | 20.3 |
| | 사회보험 | | 16.4 | 27.7 | 17.9 | 18.3 | 28.1 | 13.8 | 17.8 | 43.1 |
| | 연 금 | | 27.2 | 36.3 | 30.1 | 24.0 | 29.8 | 5.5 | 16.6 | 62.3 |
| | 의료보장 | | 4.7 | 18.5 | 17.3 | 13.4 | 30.0 | 21.3 | 18.1 | 20.4 |
| | 산업재해 보상보험 | | 30.2 | 32.8 | -8.5 | 14.8 | 15.8 | 19.5 | 14.8 | -6.7 |
| | 고용보험 | | - | - | - | - | - | 1,100.0 | 391.7 | 840.7 |
| 민간 부문 | 민 간 | | 17.6 | 20.4 | 12.8 | 26.7 | 19.9 | 13.1 | 66.7 | 105.1 |
| | 법정퇴직금 | | 18.0 | 22.9 | 14.6 | 33.4 | 23.5 | 10.8 | 71.6 | 125.8 |
| | 산전후 휴가급여 | | - | - | - | - | - | - | - | 10.6 |
| | 유급질병 휴가급여 | | 16.7 | 14.3 | 7.9 | 7.3 | 6.8 | 23.0 | 18.7 | 15.7 |
| | 민간복지서비스 | | - | - | - | - | - | 24.1 | 40.7 | 40.1 |

〈부표 14〉 계속

(단위: %)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세부재원 | 재원 |
|-------|-------|-------|-------|------|------|-------|------|------|--------------|----------|
| 21.6 | -9.9 | 13.8 | 6.4 | 12.4 | 20.9 | 11.5 | 18.2 | 9.9 | 합 계 | |
| 31.6 | -14.1 | 18.2 | 7.5 | 11.8 | 21.6 | 12.6 | 19.3 | 10.0 | 소 계 | 공공 부문 |
| 27.4 | -3.0 | 8.1 | 10.6 | 8.6 | 42.2 | 11.4 | 29.7 | 6.6 | 정 부 | |
| 33.2 | -18.4 | 22.8 | 6.3 | 13.2 | 13.3 | 13.1 | 14.2 | 11.9 | 사회보험 | |
| 45.9 | -41.3 | -12.3 | 9.2 | 21.6 | 15.5 | 17.5 | 10.2 | 13.3 | 연 금 | |
| 26.5 | 15.9 | 49.0 | 4.4 | 6.9 | 10.1 | 10.7 | 17.8 | 11.4 | 의료보장 | |
| -12.2 | 14.3 | 19.8 | 15.5 | 23.1 | 15.2 | 5.8 | 4.6 | 2.5 | 산업재해 보상보험 | |
| 29.5 | -35.9 | 47.6 | -1.0 | 21.8 | 29.9 | 21.6 | 17.3 | 19.8 | 고용보험 | |
| -31.9 | 30.6 | -17.0 | -6.0 | 16.7 | 13.4 | -2.1 | 5.0 | 8.2 | 민 간 | 민간 부문 |
| -38.3 | 33.3 | -25.2 | -10.3 | 22.8 | 14.1 | -2.6 | 4.6 | 10.0 | 법정퇴직금 | |
| 63.2 | 38.7 | 45.7 | -15.8 | 23.2 | 12.7 | -15.1 | 19.4 | 25.3 | 산전후 휴가급여 | |
| 13.6 | 12.2 | 12.9 | 18.8 | -6.8 | 10.8 | 7.1 | 0.9 | -8.2 | 유급질병 휴가급여 | |
| 28.0 | 58.2 | 27.9 | 23.9 | 21.9 | 17.5 | 15.8 | 12.3 | 14.0 | 민간복지서비스 | |

181

부
록

〈부표 15〉 재원별 사회복지지출 현황(구성비)

(단위: %)

| 재원 | 세부재원 | 1990 | 1991 | 1992 | 1993 | 1994 | 1995 | 1996 | 1997 | 1998 |
|----------|--------------|-------|-------|-------|-------|-------|-------|-------|-------|-------|
| 합 계 |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공공 부문 | 소 계 | 91.5 | 91.5 | 91.7 | 91.9 | 91.3 | 91.2 | 91.6 | 88.6 | 83.9 |
| | 정 부 | 32.0 | 32.6 | 30.2 | 29.2 | 28.7 | 26.7 | 29.3 | 28.8 | 24.2 |
| | 사회보험 | 59.5 | 59.0 | 61.4 | 62.7 | 62.6 | 64.5 | 62.2 | 59.9 | 59.8 |
| | 연 금 | 20.8 | 22.5 | 25.0 | 28.2 | 29.5 | 30.8 | 27.5 | 26.2 | 29.7 |
| | 의료보장 | 29.6 | 26.4 | 25.5 | 25.9 | 24.8 | 25.9 | 26.7 | 25.7 | 21.6 |
| | 산업재해 보상보험 | 9.1 | 10.1 | 10.9 | 8.6 | 8.4 | 7.8 | 7.9 | 7.4 | 4.8 |
| | 고용보험 | - | - | - | - | - | 0.0 | 0.1 | 0.6 | 3.7 |
| 민간 부문 | 민 간 | 8.5 | 8.5 | 8.3 | 8.1 | 8.7 | 8.4 | 8.0 | 10.9 | 15.6 |
| | 법정퇴직금 | 6.1 | 6.1 | 6.1 | 6.0 | 6.8 | 6.8 | 6.4 | 8.9 | 14.0 |
| | 산전후 휴가급여 | - | - | - | - | - | - | - | 0.4 | 0.3 |
| | 유급질병 휴가급여 | 2.4 | 2.4 | 2.2 | 2.1 | 1.9 | 1.6 | 1.7 | 1.6 | 1.3 |
| | 민간복지서비스 | - | - | - | - | - | 0.4 | 0.4 | 0.5 | 0.4 |

〈부표 15〉 계속

(단위: %)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세부재원 | 재원 |
|-------|-------|-------|-------|-------|-------|-------|-------|-------|--------------|----------|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합 계 | |
| 90.8 | 86.5 | 89.8 | 90.8 | 90.3 | 90.9 | 91.8 | 92.7 | 92.7 | 소 계 | 공공 부문 |
| 25.3 | 27.2 | 25.9 | 26.9 | 26.0 | 30.6 | 30.6 | 33.5 | 32.5 | 정 부 | |
| 65.5 | 59.3 | 63.9 | 63.9 | 64.3 | 60.3 | 61.2 | 59.1 | 60.2 | 사회보험 | |
| 35.6 | 23.2 | 17.9 | 18.3 | 19.8 | 19.0 | 20.0 | 18.6 | 19.2 | 연 금 | |
| 22.5 | 28.9 | 37.8 | 37.1 | 35.3 | 32.2 | 32.0 | 31.8 | 32.3 | 의료보장 | |
| 3.5 | 4.4 | 4.6 | 5.0 | 5.5 | 5.3 | 5.0 | 4.4 | 4.1 | 산업재해 보상보험 | |
| 3.9 | 2.8 | 3.6 | 3.4 | 3.7 | 3.9 | 4.3 | 4.2 | 4.6 | 고용보험 | |
| 8.8 | 12.7 | 9.3 | 8.2 | 8.5 | 8.0 | 7.0 | 6.2 | 6.1 | 민 간 | 민간 부문 |
| 7.1 | 10.5 | 6.9 | 5.8 | 6.4 | 6.0 | 5.3 | 4.7 | 4.7 | 법정퇴직금 | |
| 0.4 | 0.6 | 0.8 | 0.7 | 0.7 | 0.7 | 0.5 | 0.5 | 0.6 | 산전후 휴가급여 | |
| 1.2 | 1.5 | 1.5 | 1.7 | 1.4 | 1.3 | 1.2 | 1.1 | 0.9 | 유급질병 휴가급여 | |
| 0.5 | 0.8 | 0.9 | 1.1 | 1.2 | 1.1 | 1.2 | 1.1 | 1.2 | 민간복지서비스 | |

183

부
록

〈부표 16〉 제도별 사회복지지출 현황

(단위: 십억원)

| 제도 | 세부제도 | 1990 | 1991 | 1992 | 1993 | 1994 | 1995 | 1996 | 1997 | 1998 |
|-----------------|---------------|-------|-------|-------|-------|--------|--------|--------|--------|--------|
| 합 계 | | 5,939 | 6,979 | 8,556 | 9,890 | 11,712 | 14,557 | 17,173 | 21,036 | 30,144 |
| 공공 부조 | 소 계 | 861 | 1,035 | 1,127 | 1,258 | 1,324 | 1,524 | 1,781 | 2,077 | 2,512 |
| | 생활구호 | 821 | 1,014 | 1,126 | 1,246 | 1,320 | 1,490 | 1,751 | 2,069 | 2,449 |
| (사회 보장) | 재해구호 | 40 | 21 | 1 | 12 | 4 | 33 | 29 | 7 | 62 |
| | 북한이탈 주민지원 | - | - | - | - | - | 1 | 1 | 1 | 1 |
| | 고엽제, 위안부보호 | - | - | - | - | - | - | - | - | - |
| 공공 복지 서비스 | 소 계 | 1,041 | 1,240 | 1,460 | 1,633 | 2,037 | 2,366 | 3,259 | 3,973 | 4,768 |
| | 시설보호 | 52 | 64 | 74 | 85 | 123 | 138 | 163 | 216 | 216 |
| | 재가복지 | 104 | 128 | 174 | 239 | 297 | 424 | 580 | 797 | 840 |
| | 근로복지 | 38 | 30 | 90 | 107 | 237 | 319 | 355 | 601 | 1,516 |
| | 보건의료 | 847 | 1,018 | 1,122 | 1,202 | 1,380 | 1,485 | 2,161 | 2,359 | 2,004 |
| | 주거복지 | - | - | - | - | - | - | - | - | - |
| | 교육복지 | - | - | - | - | - | - | - | - | 192 |
| 사회 보험 | 소 계 | 3,534 | 4,115 | 5,256 | 6,198 | 7,334 | 9,392 | 10,685 | 12,592 | 18,018 |
| | 연 금 | 1,235 | 1,571 | 2,141 | 2,785 | 3,453 | 4,482 | 4,728 | 5,511 | 8,945 |
| | 의료보장 | 1,760 | 1,842 | 2,183 | 2,560 | 2,902 | 3,774 | 4,578 | 5,407 | 6,512 |
| | 산업재해 보상보험 | 539 | 702 | 932 | 853 | 979 | 1,134 | 1,355 | 1,556 | 1,451 |
| | 고용보험 | - | - | - | - | - | 2 | 24 | 118 | 1,110 |
| 민간복지서비스 | | - | - | - | - | - | 55 | 68 | 96 | 134 |
| 기업 복지 | 소 계 | 502 | 591 | 711 | 802 | 1,017 | 1,220 | 1,380 | 2,299 | 4,717 |
| | 법정퇴직금 | 359 | 424 | 521 | 597 | 797 | 984 | 1,091 | 1,872 | 4,226 |
| | 산전후 휴가급여 | - | - | - | - | - | - | - | 85 | 94 |
| | 유급질병 휴가급여 | 143 | 166 | 190 | 205 | 220 | 235 | 289 | 343 | 397 |

〈부표 16〉 계속

(단위: 십억원)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세부제도 | 제도 |
|--------|--------|--------|--------|--------|--------|--------|--------|--------|---------------|-----------------|
| 36,655 | 33,040 | 37,590 | 40,002 | 44,943 | 54,316 | 60,535 | 71,581 | 78,696 | 합 계 | |
| 3,352 | 3,810 | 5,265 | 5,850 | 6,370 | 7,545 | 9,246 | 11,044 | 11,805 | 소 계 | 공공 부조 |
| 3,286 | 3,784 | 5,239 | 5,528 | 6,137 | 7,468 | 9,167 | 10,831 | 11,673 | 생활구호 | |
| 65 | 19 | 10 | 297 | 197 | 35 | 28 | 168 | 79 | 재해구호 | (사회 보장) |
| 1 | 7 | 16 | 25 | 36 | 42 | 50 | 43 | 52 | 북한이탈 주민지원 | |
| - | - | - | - | - | - | 1 | 2 | 2 | 고엽제, 위안부보호 | |
| 5,921 | 5,186 | 4,463 | 4,910 | 5,315 | 9,066 | 9,258 | 12,947 | 13,776 | 소 계 | 공공 복지 서비스 |
| 197 | 258 | 362 | 442 | 458 | 752 | 161 | 1,004 | 760 | 시설보호 | |
| 915 | 1,152 | 1,357 | 2,138 | 2,548 | 2,755 | 3,129 | 4,874 | 5,536 | 재가복지 | |
| 3,015 | 2,149 | 1,266 | 860 | 366 | 320 | 269 | 248 | 252 | 근로복지 | |
| 1,626 | 1,421 | 1,101 | 1,118 | 1,543 | 1,602 | 2,358 | 2,470 | 3,439 | 보건의료 | |
| - | - | - | - | - | 3,161 | 2,776 | 3,763 | 3,159 | 주거복지 | |
| 168 | 206 | 377 | 352 | 400 | 476 | 565 | 588 | 631 | 교육복지 | 사회 보험 |
| 23,999 | 19,579 | 24,036 | 25,542 | 28,916 | 32,765 | 37,070 | 42,335 | 47,383 | 소 계 | |
| 13,052 | 7,656 | 6,712 | 7,330 | 8,912 | 10,294 | 12,095 | 13,332 | 15,100 | 연 금 | |
| 8,235 | 9,545 | 14,218 | 14,849 | 15,881 | 17,479 | 19,357 | 22,798 | 25,398 | 의료보장 | |
| 1,274 | 1,456 | 1,745 | 2,016 | 2,482 | 2,860 | 3,026 | 3,164 | 3,242 | 산업재해 보상보험 | |
| 1,438 | 922 | 1,361 | 1,347 | 1,641 | 2,132 | 2,592 | 3,041 | 3,642 | 고용보험 | |
| 172 | 272 | 348 | 430 | 525 | 617 | 715 | 803 | 915 | 민간복지서비스 | |
| 3,210 | 4,193 | 3,479 | 3,269 | 3,816 | 4,329 | 4,240 | 4,453 | 4,817 | 소 계 | 기업 복지 |
| 2,606 | 3,474 | 2,599 | 2,330 | 2,863 | 3,266 | 3,182 | 3,330 | 3,663 | 법정퇴직금 | |
| 153 | 212 | 309 | 260 | 321 | 362 | 307 | 366 | 459 | 산전후 휴가급여 | |
| 451 | 506 | 571 | 679 | 633 | 701 | 751 | 757 | 695 | 유급질병 휴가급여 | |

〈부표 17〉 제도별 사회복지지출 현황(증감률)

(단위: %)

| 제도 | 세부제도 | 1990 | 1991 | 1992 | 1993 | 1994 | 1995 | 1996 | 1997 | 1998 |
|-----------------|---------------|------|-------|-------|---------|-------|-------|---------|-------|-------|
| 합 계 | | | 17.5 | 22.6 | 15.6 | 18.4 | 24.3 | 18.0 | 22.5 | 43.3 |
| 공공 부조 | 소 계 | | 20.2 | 8.9 | 11.6 | 5.2 | 15.1 | 16.9 | 16.6 | 20.9 |
| | 생활구호 | | 23.5 | 11.0 | 10.7 | 5.9 | 12.9 | 17.5 | 18.2 | 18.4 |
| (사회 보장) | 재해구호 | | -47.5 | -95.2 | 1,100.0 | -66.7 | 725.0 | -12.1 | -75.9 | 785.7 |
| | 북한이탈 주민지원 | | - | - | - | - | - | - | - | - |
| | 고엽제, 위안부보호 | | - | - | - | - | - | - | - | - |
| 공공 복지 서비스 | 소 계 | | 19.1 | 17.7 | 11.8 | 24.7 | 16.2 | 37.7 | 21.9 | 20.0 |
| | 시설보호 | | 23.1 | 15.6 | 14.9 | 44.7 | 12.2 | 18.1 | 32.5 | - |
| | 재가복지 | | 23.1 | 35.9 | 37.4 | 24.3 | 42.8 | 36.8 | 37.4 | 5.4 |
| | 근로복지 | | -21.1 | 200.0 | 18.9 | 121.5 | 34.6 | 11.3 | 69.3 | 152.2 |
| | 보건의료 | | 20.2 | 10.2 | 7.1 | 14.8 | 7.6 | 45.5 | 9.2 | -15.0 |
| | 주거복지 | | - | - | - | - | - | - | - | - |
| | 교육복지 | | - | - | - | - | - | - | - | - |
| 사회 보험 | 소 계 | | 16.4 | 27.7 | 17.9 | 18.3 | 28.1 | 13.8 | 17.8 | 43.1 |
| | 연 금 | | 27.2 | 36.3 | 30.1 | 24.0 | 29.8 | 5.5 | 16.6 | 62.3 |
| | 의료보장 | | 4.7 | 18.5 | 17.3 | 13.4 | 30.0 | 21.3 | 18.1 | 20.4 |
| | 산업재해 보상보험 | | 30.2 | 32.8 | -8.5 | 14.8 | 15.8 | 19.5 | 14.8 | -6.7 |
| | 고용보험 | | - | - | - | - | - | 1,100.0 | 391.7 | 840.7 |
| 민간복지서비스 | | | - | - | - | - | - | 24.1 | 40.7 | 40.1 |
| 기업 복지 | 소 계 | | 17.6 | 20.4 | 12.8 | 26.7 | 19.9 | 13.1 | 66.7 | 105.1 |
| | 법정퇴직금 | | 18.0 | 22.9 | 14.6 | 33.4 | 23.5 | 10.8 | 71.6 | 125.8 |
| | 산전후 휴가급여 | | - | - | - | - | - | - | - | 10.6 |
| | 유급질병 휴가급여 | | 16.7 | 14.3 | 7.9 | 7.3 | 6.8 | 23.0 | 18.7 | 15.7 |

〈부표 17〉 계속

(단위: %)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세부제도 | 제도 |
|-------|-------|-------|---------|-------|-------|-------|-------|-------|---------------|-----------------|
| 21.6 | -9.9 | 13.8 | 6.4 | 12.4 | 20.9 | 11.5 | 18.2 | 9.9 | 합 계 | |
| 33.4 | 13.7 | 38.2 | 11.1 | 8.9 | 18.4 | 22.5 | 19.4 | 6.9 | 소 계 | 공공 부조 |
| 34.2 | 15.2 | 38.5 | 5.5 | 11.0 | 21.7 | 22.8 | 18.2 | 7.8 | 생활구호 | |
| 4.8 | -70.8 | -47.4 | 2,870.0 | -33.7 | -82.2 | -20.0 | 500.0 | -53.0 | 재해구호 | |
| - | 600.0 | 128.6 | 56.3 | 44.0 | 16.7 | 19.0 | -14.0 | 20.1 | 북한이탈 주민지원 | (사회 보장) |
| - | - | - | - | - | - | - | 100.0 | -14.0 | 고엽제, 위안부보호 | |
| 24.2 | -12.4 | -13.9 | 10.0 | 8.2 | 70.6 | 2.1 | 39.8 | 6.4 | 소 계 | 공공 복지 서비스 |
| -8.8 | 31.0 | 40.3 | 22.1 | 3.6 | 64.2 | -78.6 | 523.6 | -24.3 | 시설보호 | |
| 8.9 | 25.9 | 17.8 | 57.6 | 19.2 | 8.1 | 13.6 | 55.8 | 13.6 | 재가복지 | |
| 98.9 | -28.7 | -41.1 | -32.1 | -57.4 | -12.6 | -15.9 | -7.8 | 1.7 | 근로복지 | |
| -18.9 | -12.6 | -22.5 | 1.5 | 38.0 | 3.8 | 47.2 | 4.7 | 39.2 | 보건의료 | |
| - | - | - | - | - | - | -12.2 | 35.6 | -16.1 | 주거복지 | |
| -12.5 | 22.6 | 83.0 | -6.6 | 13.6 | 19.0 | 18.7 | 4.1 | 7.3 | 교육복지 | |
| 33.2 | -18.4 | 22.8 | 6.3 | 13.2 | 13.3 | 13.1 | 14.2 | 11.9 | 소 계 | 사회 보험 |
| 45.9 | -41.3 | -12.3 | 9.2 | 21.6 | 15.5 | 17.5 | 10.2 | 13.3 | 연 금 | |
| 26.5 | 15.9 | 49.0 | 4.4 | 6.9 | 10.1 | 10.7 | 17.8 | 11.4 | 의료보장 | |
| -12.2 | 14.3 | 19.8 | 15.5 | 23.1 | 15.2 | 5.8 | 4.6 | 2.5 | 산업재해 보상보험 | |
| 29.5 | -35.9 | 47.6 | -1.0 | 21.8 | 29.9 | 21.6 | 17.3 | 19.8 | 고용보험 | |
| 28.0 | 58.2 | 27.9 | 23.9 | 21.9 | 17.5 | 15.8 | 12.3 | 14.0 | 민간복지서비스 | |
| -31.9 | 30.6 | -17.0 | -6.0 | 16.7 | 13.4 | -2.1 | 5.0 | 8.2 | 소 계 | 기업 복지 |
| -38.3 | 33.3 | -25.2 | -10.3 | 22.8 | 14.1 | -2.6 | 4.6 | 10.0 | 법정퇴직금 | |
| 63.2 | 38.7 | 45.7 | -15.8 | 23.2 | 12.7 | -15.1 | 19.4 | 25.3 | 산전후 휴가급여 | |
| 13.6 | 12.2 | 12.9 | 18.8 | -6.8 | 10.8 | 7.1 | 0.9 | -8.2 | 유급질병 휴가급여 | |

〈부표 18〉 제도별 사회복지지출 현황(구성비)

(단위: %)

| 제도 | 세부제도 | 1990 | 1991 | 1992 | 1993 | 1994 | 1995 | 1996 | 1997 | 1998 |
|-----------------|---------------|-------|-------|-------|-------|-------|-------|-------|-------|-------|
| 합 계 |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공공 부조 | 소 계 | 14.5 | 14.8 | 13.2 | 12.7 | 11.3 | 10.5 | 10.4 | 9.9 | 8.3 |
| | 생활구호 | 13.8 | 14.5 | 13.2 | 12.6 | 11.3 | 10.2 | 10.2 | 9.8 | 8.1 |
| (사회 보장) | 재해구호 | 0.7 | 0.3 | 0.0 | 0.1 | 0.0 | 0.2 | 0.2 | 0.0 | 0.2 |
| | 북한이탈 주민지원 | - | - | - | - | - | 0.0 | 0.0 | 0.0 | 0.0 |
| | 고엽제, 위안부보호 | - | - | - | - | - | - | - | - | - |
| 공공 복지 서비스 | 소 계 | 17.5 | 17.8 | 17.1 | 16.5 | 17.4 | 16.3 | 19.0 | 18.9 | 15.8 |
| | 시설보호 | 0.9 | 0.9 | 0.9 | 0.9 | 1.1 | 0.9 | 0.9 | 1.0 | 0.7 |
| | 재가복지 | 1.8 | 1.8 | 2.0 | 2.4 | 2.5 | 2.9 | 3.4 | 3.8 | 2.8 |
| | 근로복지 | 0.6 | 0.4 | 1.1 | 1.1 | 2.0 | 2.2 | 2.1 | 2.9 | 5.0 |
| | 보건의료 | 14.3 | 14.6 | 13.1 | 12.2 | 11.8 | 10.2 | 12.6 | 11.2 | 6.6 |
| | 주거복지 | - | - | - | - | - | - | - | - | - |
| | 교육복지 | - | - | - | - | - | - | - | - | 0.6 |
| 사회 보험 | 소 계 | 59.5 | 59.0 | 61.4 | 62.7 | 62.6 | 64.5 | 62.2 | 59.9 | 59.8 |
| | 연 금 | 20.8 | 22.5 | 25.0 | 28.2 | 29.5 | 30.8 | 27.5 | 26.2 | 29.7 |
| | 의료보장 | 29.6 | 26.4 | 25.5 | 25.9 | 24.8 | 25.9 | 26.7 | 25.7 | 21.6 |
| | 산업재해 보상보험 | 9.1 | 10.1 | 10.9 | 8.6 | 8.4 | 7.8 | 7.9 | 7.4 | 4.8 |
| | 고용보험 | - | - | - | - | - | 0.0 | 0.1 | 0.6 | 3.7 |
| 민간복지서비스 | | - | - | - | - | - | 0.4 | 0.4 | 0.5 | 0.4 |
| 기업 복지 | 소 계 | 8.5 | 8.5 | 8.3 | 8.1 | 8.7 | 8.4 | 8.0 | 10.9 | 15.6 |
| | 법정퇴직금 | 6.1 | 6.1 | 6.1 | 6.0 | 6.8 | 6.8 | 6.4 | 8.9 | 14.0 |
| | 산전후 휴가급여 | - | - | - | - | - | - | - | 0.4 | 0.3 |
| | 유급질병 휴가급여 | 2.4 | 2.4 | 2.2 | 2.1 | 1.9 | 1.6 | 1.7 | 1.6 | 1.3 |

〈부표 18〉 계속

(단위: %)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세부제도 | 제도 |
|-------|-------|-------|-------|-------|-------|-------|-------|-------|---------------|-----------------|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합 계 | |
| 9.1 | 11.5 | 14.0 | 14.6 | 14.2 | 13.9 | 15.3 | 15.4 | 15.0 | 소 계 | 공공 부조 |
| 9.0 | 11.5 | 13.9 | 13.8 | 13.7 | 13.7 | 15.1 | 15.1 | 14.8 | 생활구호 | |
| 0.2 | 0.1 | 0.0 | 0.7 | 0.4 | 0.1 | 0.0 | 0.2 | 0.1 | 재해구호 | |
| 0.0 | 0.0 | 0.0 | 0.1 | 0.1 | 0.1 | 0.1 | 0.1 | 0.1 | 북한이탈 주민지원 | (사회 보장) |
| - | - | - | - | - | - | 0.0 | 0.0 | 0.0 | 고엽제, 위안부보호 | |
| 16.2 | 15.7 | 11.9 | 12.3 | 11.8 | 16.7 | 15.3 | 18.1 | 17.5 | 소 계 | |
| 0.5 | 0.8 | 1.0 | 1.1 | 1.0 | 1.4 | 0.3 | 1.4 | 1.0 | 시설보호 | 공공 복지 서비스 |
| 2.5 | 3.5 | 3.6 | 5.3 | 5.7 | 5.1 | 5.2 | 6.8 | 7.0 | 재가복지 | |
| 8.2 | 6.5 | 3.4 | 2.1 | 0.8 | 0.6 | 0.4 | 0.3 | 0.3 | 근로복지 | |
| 4.4 | 4.3 | 2.9 | 2.8 | 3.4 | 2.9 | 3.9 | 3.5 | 4.4 | 보건의료 | |
| - | - | - | - | - | 5.8 | 4.6 | 5.3 | 4.0 | 주거복지 | |
| 0.5 | 0.6 | 1.0 | 0.9 | 0.9 | 0.9 | 0.9 | 0.8 | 0.8 | 교육복지 | |
| 65.5 | 59.3 | 63.9 | 63.9 | 64.3 | 60.3 | 61.2 | 59.1 | 60.2 | 소 계 | |
| 35.6 | 23.2 | 17.9 | 18.3 | 19.8 | 19.0 | 20.0 | 18.6 | 19.2 | 연 금 | 사회 보험 |
| 22.5 | 28.9 | 37.8 | 37.1 | 35.3 | 32.2 | 32.0 | 31.8 | 32.3 | 의료보장 | |
| 3.5 | 4.4 | 4.6 | 5.0 | 5.5 | 5.3 | 5.0 | 4.4 | 4.1 | 산업재해 보상보험 | |
| 3.9 | 2.8 | 3.6 | 3.4 | 3.7 | 3.9 | 4.3 | 4.2 | 4.6 | 고용보험 | |
| 0.5 | 0.8 | 0.9 | 1.1 | 1.2 | 1.1 | 1.2 | 1.1 | 1.2 | 민간복지서비스 | |
| 8.8 | 12.7 | 9.3 | 8.2 | 8.5 | 8.0 | 7.0 | 6.2 | 6.1 | 소 계 | 기업 복지 |
| 7.1 | 10.5 | 6.9 | 5.8 | 6.4 | 6.0 | 5.3 | 4.7 | 4.7 | 법정퇴직금 | |
| 0.4 | 0.6 | 0.8 | 0.7 | 0.7 | 0.7 | 0.5 | 0.5 | 0.6 | 산전후 휴가급여 | |
| 1.2 | 1.5 | 1.5 | 1.7 | 1.4 | 1.3 | 1.2 | 1.1 | 0.9 | 유급질병 휴가급여 | |

〈부표 19〉 총사회복지지출 및 순사회복지지출 현황

(단위: 십억원)

| 구 성 항 목 | 1990 | 1991 | 1992 | 1993 | 1994 | 1995 |
|-------------|-----------|-----------|-----------|-----------|-----------|-----------|
| 총사회복지지출 | 6,141 | 7,210 | 8,815 | 10,221 | 12,132 | 22,524 |
| 요소GDP 대비 % | 3.70 | 3.57 | 3.83 | 3.93 | 4.01 | 6.35 |
| 총공공지출 | 5,437 | 6,389 | 7,845 | 9,088 | 10,695 | 13,282 |
| 총법정민간지출 | 502 | 591 | 711 | 802 | 1,017 | 1,274 |
| 총자발적민간지출 | 202 | 231 | 259 | 331 | 420 | 7,967 |
| 조세부담(-) | - | - | - | - | - | 864 |
| 직접세 및 사회보험료 | - | - | - | - | - | 44 |
| 간접세 | - | - | - | - | - | 819 |
| 조세혜택(+) | - | - | - | - | - | 230 |
| T1 | - | - | - | - | - | 230 |
| T2 | - | - | - | - | - | - |
| 순사회복지지출 | 6,141 | 7,210 | 8,815 | 10,221 | 12,132 | 21,890 |
| 요소GDP 대비 % | 3.70 | 3.57 | 3.83 | 3.93 | 4.01 | 6.17 |
| 요소GDP(1-3) | 165,998.7 | 202,091.3 | 229,965.4 | 259,869.0 | 302,570.3 | 354,739.5 |
| 1. 피용자보수 | 83,883.7 | 104,186.7 | 118,626.0 | 134,213.7 | 157,146.9 | 186,997.5 |
| 2. 영업잉여 | 61,304.0 | 73,634.1 | 83,773.3 | 93,800.5 | 109,202.2 | 119,610.5 |
| 3. 고정자본소모 | 20,811.0 | 24,270.5 | 27,566.1 | 31,854.8 | 36,221.2 | 48,131.5 |

〈부표 19〉 계속

(단위: 십억원)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구 성 항 목 |
|-----------|-----------|-----------|-----------|-----------|-----------|-------------|
| 26,464 | 31,259 | 38,966 | 48,038 | 45,134 | 50,481 | 총사회복지지출 |
| 6.67 | 7.22 | 9.00 | 10.28 | 8.47 | 8.80 | 요소GDP 대비 % |
| 15,725 | 18,641 | 25,292 | 33,273 | 28,575 | 33,764 | 총공공지출 |
| 1,448 | 2,395 | 4,851 | 3,382 | 4,464 | 3,827 | 총법정민간지출 |
| 9,292 | 10,223 | 8,823 | 11,383 | 12,094 | 12,890 | 총자발적민간지출 |
| 1,022 | 1,334 | 2,035 | 2,583 | 2,246 | 2,535 | 조세부담(-) |
| 43 | 66 | 109 | 119 | 131 | 244 | 직접세 및 사회보험료 |
| 980 | 1,267 | 1,926 | 2,464 | 2,115 | 2,292 | 간접세 |
| 568 | 627 | 576 | 712 | 1,660 | 2,024 | 조세혜택(+) |
| 568 | 627 | 576 | 712 | 1,660 | 2,024 | T1 |
| - | - | - | - | - | - | T2 |
| 26,009 | 30,552 | 37,508 | 46,168 | 44,547 | 49,970 | 순사회복지지출 |
| 6.55 | 7.06 | 8.66 | 9.88 | 8.36 | 8.71 | 요소GDP 대비 % |
| 396,823.0 | 432,686.4 | 433,000.6 | 467,237.7 | 532,815.4 | 573,531.7 | 요소GDP(1-3) |
| 214,430.4 | 226,608.1 | 216,974.3 | 227,934.0 | 258,943.6 | 284,226.4 | 1. 피용자보수 |
| 125,608.4 | 139,931.4 | 141,677.7 | 160,297.2 | 190,695.2 | 201,102.6 | 2. 영업잉여 |
| 56,784.2 | 66,146.9 | 74,348.6 | 79,006.5 | 83,176.6 | 88,202.7 | 3. 고정자본소모 |

〈부표 19〉 계속

(단위: 십억원)

| 구 성 항 목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
| 총사회복지지출 | 54,369 | 61,554 | 67,619 | 75,513 | 88,981 | 98,650 |
| 요소GDP 대비 % | 8.60 | 9.11 | 9.21 | 9.83 | 11.06 | 11.44 |
| 총공공지출 | 36,303 | 40,602 | 49,370 | 55,581 | 66,325 | 72,964 |
| 총법정민간지출 | 3,700 | 4,341 | 4,946 | 4,954 | 5,256 | 5,732 |
| 총자발적민간지출 | 14,366 | 16,611 | 13,303 | 14,978 | 17,400 | 19,954 |
| 조세부담(-) | 2,932 | 3,534 | 3,947 | 4,307 | 4,610 | 4,592 |
| 직접세 및 사회보험료 | 239 | 267 | 374 | 392 | 449 | 534 |
| 간접세 | 2,693 | 3,267 | 3,573 | 3,914 | 4,161 | 4,058 |
| 조세혜택(+) | 3,990 | 4,709 | 4,840 | 5,659 | 6,107 | 7,121 |
| T1 | 3,990 | 4,709 | 4,840 | 5,659 | 6,107 | 7,121 |
| T2 | - | - | - | - | - | - |
| 순사회복지지출 | 55,427 | 62,729 | 68,512 | 76,865 | 90,478 | 101,179 |
| 요소GDP 대비 % | 8.76 | 9.28 | 9.33 | 10.00 | 11.24 | 11.73 |
| 요소GDP(1-3) | 632,506.4 | 675,946.8 | 734,544.8 | 768,312.9 | 804,771.3 | 862,453.9 |
| 1. 피용자보수 | 312,680.2 | 340,921.5 | 369,205.3 | 396,337.9 | 419,926.8 | 448,993.8 |
| 2. 영업잉여 | 226,755.0 | 235,294.5 | 258,345.4 | 258,129.3 | 264,450.7 | 284,555.9 |
| 3. 고정자본소모 | 93,071.2 | 99,730.8 | 106,994.1 | 113,845.7 | 120,393.8 | 128,904.2 |

〈부표 20〉 총사회복지지출 및 순사회복지지출 현황(증감률)

(단위: %)

| 구 성 항 목 | | 1990 | 1991 | 1992 | 1993 | 1994 | 1995 | 1996 | 1997 | 1998 |
|------------|-------------|------|-------|-------|-------|-------|----------|--------|-------|--------|
| 총사회복지지출 | | | 17.41 | 22.26 | 15.96 | 18.70 | 85.66 | 17.49 | 18.12 | 24.66 |
| 요소GDP 대비 % | | | -3.56 | 7.44 | 2.61 | 1.95 | 58.35 | 5.03 | 8.33 | 24.57 |
| | 총공공지출 | | 17.51 | 22.79 | 15.84 | 17.69 | 24.19 | 18.39 | 18.55 | 35.68 |
| | 총법정민간지출 | | 17.61 | 20.44 | 12.82 | 26.74 | 25.31 | 13.60 | 65.45 | 102.54 |
| | 총자발적민간지출 | | 14.27 | 12.16 | 28.04 | 26.89 | 1,796.60 | 16.62 | 10.02 | -13.69 |
| | 조세부담(-) | | - | - | - | - | - | 18.37 | 30.45 | 52.56 |
| | 직접세 및 사회보험료 | | - | - | - | - | - | -3.24 | 54.84 | 64.28 |
| | 간접세 | | - | - | - | - | - | 19.54 | 29.38 | 51.94 |
| | 조세혜택(+) | | - | - | - | - | - | 147.25 | 10.43 | -8.10 |
| | T1 | | - | - | - | - | - | 147.25 | 10.43 | -8.10 |
| | T2 | | - | - | - | - | - | - | - | - |
| 순사회복지지출 | | | 17.41 | 22.26 | 15.96 | 18.70 | 80.43 | 18.82 | 17.47 | 22.77 |
| 요소GDP 대비 % | | | -3.56 | 7.44 | 2.61 | 1.95 | 53.89 | 6.22 | 7.73 | 22.68 |

〈부표 20〉 계속

(단위: %)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구 성 항 목 |
|--------|--------|--------|-------|-------|--------|-------|-------|-------|----------------|
| 23.28 | -6.05 | 11.85 | 7.70 | 13.22 | 9.85 | 11.67 | 17.84 | 10.87 | 총사회복지지출 |
| 14.25 | -17.61 | 3.91 | -2.34 | 5.94 | 1.09 | 6.77 | 12.50 | 3.45 | 요소GDP 대비 % |
| 31.55 | -14.12 | 18.16 | 7.52 | 11.84 | 21.59 | 12.58 | 19.33 | 10.01 | 총공공지출 |
| -30.28 | 32.00 | -14.28 | -3.32 | 17.33 | 13.93 | 0.17 | 6.09 | 9.06 | 총법정민간지출 |
| 29.02 | 6.24 | 6.59 | 11.45 | 15.62 | -19.91 | 12.59 | 16.18 | 14.68 | 총자발적민간지출 |
| 26.93 | -13.04 | 12.89 | 15.63 | 20.55 | 11.68 | 9.12 | 7.03 | -0.38 | 조세부담(-) |
| 8.85 | 10.15 | 86.36 | -1.94 | 11.81 | 39.95 | 4.92 | 14.40 | 18.91 | 직접세 및 사회보험료 |
| 27.96 | -14.16 | 8.34 | 17.50 | 21.33 | 9.36 | 9.56 | 6.29 | -2.47 | 간접세 |
| 23.56 | 133.16 | 21.97 | 97.10 | 18.02 | 2.77 | 16.93 | 7.91 | 16.61 | 조세혜택(+) |
| 23.56 | 133.16 | 21.97 | 97.10 | 18.02 | 2.77 | 16.93 | 7.91 | 16.61 | T1 |
| - | - | - | - | - | - | - | - | - | T2 |
| 23.09 | -3.51 | 12.17 | 10.92 | 13.17 | 9.22 | 12.19 | 17.71 | 11.83 | 순사회복지지출 |
| 14.07 | -15.39 | 4.21 | 0.58 | 5.90 | 0.51 | 7.26 | 12.38 | 4.35 | 요소GDP 대비 % |

〈부표 21〉 총사회복지지출 및 순사회복지지출 현황(구성비)

(단위: %)

| 구 성 항 목 | 1990 | 1991 | 1992 | 1993 | 1994 | 1995 | 1996 | 1997 | 1998 |
|-------------|-------|-------|-------|-------|-------|-------|-------|-------|-------|
| 총사회복지지출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총공공지출 | 88.54 | 88.61 | 89.00 | 88.91 | 88.15 | 58.97 | 59.42 | 59.63 | 64.91 |
| 총법정민간지출 | 8.18 | 8.19 | 8.07 | 7.85 | 8.38 | 5.66 | 5.47 | 7.66 | 12.45 |
| 총자발적민간지출 | 3.29 | 3.20 | 2.93 | 3.24 | 3.46 | 35.37 | 35.11 | 32.70 | 22.64 |
| 조세부담(-) | - | - | - | - | - | 3.83 | 3.86 | 4.27 | 5.22 |
| 직접세 및 사회보험료 | - | - | - | - | - | 0.20 | 0.16 | 0.21 | 0.28 |
| 간접세 | - | - | - | - | - | 3.64 | 3.70 | 4.05 | 4.94 |
| 조세혜택(+) | - | - | - | - | - | 1.02 | 2.15 | 2.01 | 1.48 |
| T1 | - | - | - | - | - | 1.02 | 2.15 | 2.01 | 1.48 |
| T2 | - | - | - | - | - | - | - | - | - |
| 순사회복지지출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97.18 | 98.28 | 97.74 | 96.26 |

〈부표 21〉 계속

(단위: %)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구 성 항 목 |
|-------|-------|-------|--------|--------|--------|-------|-------|-------|----------------|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총사회복지지출 |
| 69.26 | 63.3 | 66.9 | 66.8 | 66.0 | 73.0 | 73.6 | 74.5 | 74.0 | 총공공지출 |
| 7.04 | 9.9 | 7.6 | 6.8 | 7.1 | 7.3 | 6.6 | 5.9 | 5.8 | 총법정민간지출 |
| 23.70 | 26.8 | 25.5 | 26.4 | 27.0 | 19.7 | 19.8 | 19.6 | 20.2 | 총자발적민간지출 |
| 5.38 | 5.0 | 5.0 | 5.4 | 5.7 | 5.8 | 5.7 | 5.2 | 4.7 | 조세부담(-) |
| 0.25 | 0.3 | 0.5 | 0.4 | 0.4 | 0.6 | 0.5 | 0.5 | 0.5 | 직접세 및 사회보험료 |
| 5.13 | 4.7 | 4.5 | 5.0 | 5.3 | 5.3 | 5.2 | 4.7 | 4.1 | 간접세 |
| 1.48 | 3.7 | 4.0 | 7.3 | 7.7 | 7.2 | 7.5 | 6.9 | 7.2 | 조세혜택(+) |
| 1.48 | 3.7 | 4.0 | 7.3 | 7.7 | 7.2 | 7.5 | 6.9 | 7.2 | T1 |
| - | - | - | - | - | - | - | - | - | T2 |
| 96.11 | 98.70 | 98.99 | 101.95 | 101.91 | 101.32 | 101.8 | 101.7 | 102.6 | 순사회복지지출 |

〈부표 22〉 연도별 사회복지지출

(단위: 십억원, %)

| 연 도 | GDP | 사회지출 | 공공 | 민간 | 사회지출 | 공공 | 민간 |
|----------------------|---------|--------|--------|-------|------|------|------|
| 1990 | 186,691 | 5,939 | 5,437 | 502 | 3.18 | 2.91 | 0.27 |
| 1991 | 226,008 | 6,979 | 6,389 | 591 | 3.09 | 2.83 | 0.26 |
| 1992 | 257,525 | 8,556 | 7,845 | 711 | 3.32 | 3.05 | 0.28 |
| 1993 | 290,676 | 9,890 | 9,088 | 802 | 3.40 | 3.13 | 0.28 |
| 1994 | 340,208 | 11,712 | 10,695 | 1,017 | 3.44 | 3.14 | 0.30 |
| 1995 | 398,838 | 14,557 | 13,282 | 1,274 | 3.65 | 3.33 | 0.32 |
| 1996 | 448,596 | 17,173 | 15,725 | 1,448 | 3.83 | 3.51 | 0.32 |
| 1997 | 491,135 | 21,036 | 18,641 | 2,395 | 4.28 | 3.80 | 0.49 |
| 1998 | 484,103 | 30,144 | 25,292 | 4,851 | 6.23 | 5.22 | 1.00 |
| 1999 | 529,500 | 36,655 | 33,273 | 3,382 | 6.92 | 6.28 | 0.64 |
| 2000 | 603,236 | 33,040 | 28,575 | 4,464 | 5.48 | 4.74 | 0.74 |
| 2001 | 651,415 | 37,590 | 33,764 | 3,827 | 5.77 | 5.18 | 0.59 |
| 2002 | 720,539 | 40,002 | 36,303 | 3,700 | 5.55 | 5.04 | 0.51 |
| 2003 | 767,114 | 44,943 | 40,602 | 4,341 | 5.86 | 5.29 | 0.57 |
| 2004 | 826,893 | 54,316 | 49,370 | 4,946 | 6.57 | 5.97 | 0.60 |
| 2005 | 865,241 | 60,535 | 55,581 | 4,954 | 7.00 | 6.42 | 0.57 |
| 2006 | 908,744 | 71,581 | 66,325 | 5,256 | 7.88 | 7.30 | 0.58 |
| 2007 | 975,013 | 78,696 | 72,964 | 5,732 | 8.07 | 7.48 | 0.59 |
| 1990~2007 연평균 증가율 | 10.2 | 16.4 | 16.5 | 15.4 | | | |
| 2000~2007 연평균 증가율 | 7.1 | 13.2 | 14.3 | 3.6 | | | |

〈부표 23〉 공공사회복지지출(2005)

(단위: 경상GDP 대비 %)

| 국가명 | | 노령 | 유족 | 근로 무능력 | 보건 | 가족 | ALMP ¹⁾ | 실업 | 주거 | .기타 | 계 |
|----------|---------|-------|------|-----------|------|------|--------------------|------|------|------|-------|
| 한국 | 2005구계정 | 1.5 | 0.2 | 0.6 | 3.2 | 0.3 | 0.1 | 0.2 | a | 0.7 | 6.9 |
| | 2005신계정 | 1.43 | 0.23 | 0.52 | 2.96 | 0.26 | 0.12 | 0.20 | a | 0.70 | 6.42 |
| | 2007 | 1.61 | 0.25 | 0.55 | 3.46 | 0.46 | 0.13 | 0.25 | a | 0.77 | 7.48 |
| 호주 | | 4.45 | 0.21 | 2.43 | 5.87 | 2.83 | 0.38 | 0.55 | 0.25 | 0.14 | 17.11 |
| 오스트리아 | | 12.64 | 0.36 | 2.38 | 6.83 | 2.84 | 0.62 | 1.14 | 0.10 | 0.29 | 27.20 |
| 벨기에 | | 7.17 | 2.02 | 2.34 | 7.34 | 2.60 | 1.08 | 3.34 | 0.07 | 0.44 | 26.40 |
| 캐나다 | | 3.72 | 0.39 | 0.93 | 6.84 | 1.05 | 0.30 | 0.63 | 0.44 | 2.20 | 16.49 |
| 체코공화국 | | 7.46 | 0.17 | 2.42 | 6.31 | 1.73 | 0.25 | 0.62 | 0.08 | 0.44 | 19.50 |
| 덴마크 | | 7.25 | 0.01 | 4.31 | 5.86 | 3.38 | 1.75 | 2.82 | 0.71 | 1.00 | 27.08 |
| 핀란드 | | 8.51 | 0.90 | 3.83 | 6.21 | 2.97 | 0.89 | 2.01 | 0.28 | 0.51 | 26.10 |
| 프랑스 | | 10.91 | 1.78 | 1.85 | 7.84 | 3.02 | 0.90 | 1.71 | 0.81 | 0.36 | 29.17 |
| 독일 | | 11.22 | 0.38 | 1.87 | 7.67 | 2.17 | 0.97 | 1.65 | 0.61 | 0.21 | 26.75 |
| 그리스 | | 10.78 | 0.80 | 0.90 | 5.63 | 1.08 | 0.07 | 0.40 | 0.51 | 0.37 | 20.55 |
| 헝가리 | | 8.82 | 0.27 | 2.81 | 6.00 | 3.11 | 0.30 | 0.56 | 0.51 | 0.15 | 22.54 |
| 아일랜드 | | 3.81 | 0.03 | 2.68 | 6.32 | 2.97 | 0.08 | 0.31 | 0.21 | 0.48 | 16.91 |
| 아일랜드 | | 2.89 | 0.84 | 1.62 | 6.50 | 2.49 | 0.63 | 0.90 | 0.51 | 0.35 | 16.73 |
| 이탈리아 | | 11.58 | 2.47 | 1.71 | 6.82 | 1.30 | 0.56 | 0.49 | 0.02 | 0.03 | 24.98 |
| 일본 | | 8.61 | 1.29 | 0.70 | 6.31 | 0.81 | 0.25 | 0.33 | a | 0.26 | 18.58 |
| 룩셈부르크 | | 5.24 | 2.01 | 3.28 | 6.99 | 3.60 | 0.51 | 0.98 | 0.15 | 0.44 | 23.20 |
| 멕시코 | | 1.02 | 0.30 | 0.07 | 2.92 | 1.00 | 0.02 | a | 1.11 | 0.99 | 7.43 |
| 네덜란드 | | 5.52 | 0.30 | 3.62 | 5.96 | 1.65 | 1.33 | 1.53 | 0.34 | 0.62 | 20.88 |
| 뉴질랜드 | | 4.22 | 0.14 | 2.87 | 6.90 | 2.63 | 0.39 | 0.44 | 0.80 | 0.15 | 18.55 |
| 노르웨이 | | 6.33 | 0.28 | 4.40 | 5.78 | 2.83 | 0.74 | 0.53 | 0.14 | 0.61 | 21.64 |
| 폴란드 | | 10.44 | 1.02 | 2.69 | 4.31 | 1.13 | 0.42 | 0.54 | 0.13 | 0.36 | 21.03 |
| 슬로바키아공화국 | | 6.20 | 0.21 | 1.68 | 5.29 | 2.12 | 0.34 | 0.27 | 0.00 | 0.49 | 16.61 |
| 스페인 | | 7.87 | 0.55 | 2.49 | 5.85 | 1.14 | 0.78 | 2.21 | 0.17 | 0.18 | 21.24 |
| 스웨덴 | | 9.59 | 0.62 | 5.60 | 6.77 | 3.21 | 1.29 | 1.20 | 0.54 | 0.60 | 29.43 |
| 스위스 | | 6.62 | 0.36 | 3.29 | 6.07 | 1.34 | 0.75 | 0.93 | 0.15 | 0.74 | 20.26 |
| 터키 | | 6.39 | 1.57 | 0.21 | 5.42 | 0.02 | 0.00 | 0.06 | m | m | 13.68 |
| 영국 | | 6.08 | 0.20 | 2.39 | 7.00 | 3.20 | 0.53 | 0.26 | 1.45 | 0.19 | 21.29 |
| 미국 | | 5.30 | 0.76 | 1.29 | 6.96 | 0.62 | 0.12 | 0.30 | a | 0.57 | 15.91 |
| OECD평균 | | 7.0 | 0.7 | 2.3 | 6.2 | 2.0 | 0.6 | - | - | 0.7 | 20.6 |

주: 1) ALMP는 적극적노동시장 프로그램을 뜻함.

2) a: 자료없음

m: 미생산

〈부표 24〉 법정사회복지지출(2005)

(단위: 경상GDP 대비 %)

| 국가명 | | 노령 | 유족 | 근로 무능력 | 보건 | 가족 | ALMP ¹⁾ | 실업 | 주거 | .기타 | 계 |
|----------|---------|------|------|-----------|------|------|--------------------|------|----|------|------|
| 한국 | 2005구계정 | 0.4 | 0.0 | 0.1 | a | 0.0 | a | a | a | 0.0 | 0.6 |
| | 2005신계정 | 0.40 | a | 0.14 | a | 0.04 | a | a | a | 0.00 | 0.57 |
| | 2007 | 0.41 | a | 0.12 | a | 0.05 | a | a | a | 0.00 | 0.59 |
| 호주 | | 0.40 | a | 0.65 | a | a | a | a | a | a | 1.06 |
| 오스트리아 | | a | a | 0.88 | a | a | a | a | a | a | 0.88 |
| 벨기에 | | 0.00 | 0.00 | 0.00 | a | 0.00 | a | a | a | 0.00 | 0.00 |
| 캐나다 | | a | a | a | a | a | a | a | a | a | a |
| 체코공화국 | | 0.20 | 0.01 | 0.00 | a | a | a | a | a | 0.03 | 0.24 |
| 덴마크 | | a | a | 0.23 | a | a | a | a | a | a | 0.23 |
| 핀란드 | | a | a | a | a | a | a | a | a | a | a |
| 프랑스 | | 0.10 | 0.11 | 0.14 | a | 0.00 | a | a | a | a | 0.35 |
| 독일 | | a | a | 1.07 | a | 0.06 | a | a | a | a | 1.13 |
| 그리스 | | a | a | a | a | a | a | a | a | a | a |
| 헝가리 | | a | a | a | a | a | a | a | a | a | a |
| 아일랜드 | | a | 0.00 | 1.48 | a | a | a | a | a | a | 1.48 |
| 아일랜드 | | a | a | a | a | a | a | a | a | a | a |
| 이탈리아 | | 1.10 | 0.03 | 0.31 | a | 0.06 | a | a | a | a | 1.49 |
| 일본 | | 0.35 | a | 0.18 | a | a | a | a | a | a | 0.53 |
| 룩셈부르크 | | a | a | 0.25 | a | a | a | a | a | a | 0.25 |
| 멕시코 | | a | a | a | a | a | a | a | a | a | a |
| 네덜란드 | | 0.00 | 0.00 | 0.70 | a | a | a | a | a | a | 0.71 |
| 뉴질랜드 | | a | a | a | a | a | a | a | a | a | a |
| 노르웨이 | | a | a | 1.26 | a | a | a | a | a | a | 1.26 |
| 폴란드 | | a | a | a | a | a | a | a | a | a | a |
| 슬로바키아공화국 | | 0.08 | a | 0.04 | a | 0.05 | a | a | a | a | 0.17 |
| 스페인 | | a | a | a | a | a | a | a | a | a | a |
| 스웨덴 | | a | a | 0.41 | a | a | a | a | a | a | 0.41 |
| 스위스 | | 5.28 | 0.72 | 1.21 | a | 0.08 | a | a | a | a | 7.29 |
| 터키 | | a | a | a | a | a | a | a | a | a | a |
| 영국 | | 0.55 | a | 0.03 | a | a | a | 0.25 | a | a | 0.83 |
| 미국 | | a | a | 0.19 | 0.16 | a | a | a | a | a | 0.35 |

주: 1) ALMP는 적극적노동시장 프로그램을 뜻함.

2) a: 자료없음

m: 미생산

〈부표 25〉 사회복지지출(2005)

(단위: 경상GDP 대비 %)

| 국가명 | | 노령 | 유족 | 근로 무능력 | 보건 | 가족 | ALMP ¹⁾ | 실업 | 주거 | .기타 | 계 |
|----------|---------|-------|------|-----------|------|------|--------------------|------|------|------|-------|
| 한국 | 2005구계정 | 2.0 | 0.2 | 0.7 | 3.2 | 0.3 | 0.1 | 0.2 | a | 0.7 | 7.5 |
| | 2005신계정 | 1.83 | 0.23 | 0.66 | 2.96 | 0.30 | 0.12 | 0.20 | a | 0.70 | 6.99 |
| | 2007 | 2.02 | 0.25 | 0.67 | 3.46 | 0.51 | 0.13 | 0.25 | a | 0.77 | 8.07 |
| 호주 | | 4.85 | 0.21 | 3.08 | 5.87 | 2.83 | 0.38 | 0.55 | 0.25 | 0.14 | 18.16 |
| 오스트리아 | | 12.64 | 0.36 | 3.26 | 6.83 | 2.84 | 0.62 | 1.14 | 0.10 | 0.29 | 28.08 |
| 벨기에 | | 7.17 | 2.02 | 2.34 | 7.34 | 2.60 | 1.08 | 3.34 | 0.07 | 0.44 | 26.41 |
| 캐나다 | | 3.72 | 0.39 | 0.93 | 6.84 | 1.05 | 0.30 | 0.63 | 0.44 | 2.20 | 16.49 |
| 체코공화국 | | 7.66 | 0.18 | 2.43 | 6.31 | 1.73 | 0.25 | 0.62 | 0.08 | 0.47 | 19.73 |
| 덴마크 | | 7.25 | 0.01 | 4.54 | 5.86 | 3.38 | 1.75 | 2.82 | 0.71 | 1.00 | 27.31 |
| 핀란드 | | 8.51 | 0.90 | 3.83 | 6.21 | 2.97 | 0.89 | 2.01 | 0.28 | 0.51 | 26.10 |
| 프랑스 | | 11.01 | 1.88 | 1.99 | 7.84 | 3.02 | 0.90 | 1.71 | 0.81 | 0.36 | 29.53 |
| 독일 | | 11.22 | 0.38 | 2.95 | 7.67 | 2.22 | 0.97 | 1.65 | 0.61 | 0.21 | 27.88 |
| 그리스 | | 10.78 | 0.80 | 0.90 | 5.63 | 1.08 | 0.07 | 0.40 | 0.51 | 0.37 | 20.55 |
| 헝가리 | | 8.82 | 0.27 | 2.81 | 6.00 | 3.11 | 0.30 | 0.56 | 0.51 | 0.15 | 22.54 |
| 아일랜드 | | 3.81 | 0.04 | 4.16 | 6.32 | 2.97 | 0.08 | 0.31 | 0.21 | 0.48 | 18.39 |
| 아일랜드 | | 2.89 | 0.84 | 1.62 | 6.50 | 2.49 | 0.63 | 0.90 | 0.51 | 0.35 | 16.73 |
| 이탈리아 | | 12.68 | 2.49 | 2.01 | 6.82 | 1.36 | 0.56 | 0.49 | 0.02 | 0.03 | 26.47 |
| 일본 | | 8.96 | 1.29 | 0.88 | 6.31 | 0.81 | 0.25 | 0.33 | a | 0.26 | 19.10 |
| 룩셈부르크 | | 5.24 | 2.01 | 3.52 | 6.99 | 3.60 | 0.51 | 0.98 | 0.15 | 0.44 | 23.45 |
| 멕시코 | | 1.02 | 0.30 | 0.07 | 2.92 | 1.00 | 0.02 | a | 1.11 | 0.99 | 7.43 |
| 네덜란드 | | 5.53 | 0.30 | 4.32 | 5.96 | 1.65 | 1.33 | 1.53 | 0.34 | 0.62 | 21.58 |
| 뉴질랜드 | | 4.22 | 0.14 | 2.87 | 6.90 | 2.63 | 0.39 | 0.44 | 0.80 | 0.15 | 18.55 |
| 노르웨이 | | 6.33 | 0.28 | 5.65 | 5.78 | 2.83 | 0.74 | 0.53 | 0.14 | 0.61 | 22.90 |
| 폴란드 | | 10.44 | 1.02 | 2.69 | 4.31 | 1.13 | 0.42 | 0.54 | 0.13 | 0.36 | 21.03 |
| 슬로바키아공화국 | | 6.28 | 0.21 | 1.72 | 5.29 | 2.17 | 0.34 | 0.27 | 0.00 | 0.49 | 16.78 |
| 스페인 | | 7.87 | 0.55 | 2.49 | 5.85 | 1.14 | 0.78 | 2.21 | 0.17 | 0.18 | 21.24 |
| 스웨덴 | | 9.59 | 0.62 | 6.02 | 6.77 | 3.21 | 1.29 | 1.20 | 0.54 | 0.60 | 29.85 |
| 스위스 | | 11.90 | 1.08 | 4.50 | 6.07 | 1.42 | 0.75 | 0.93 | 0.15 | 0.74 | 27.55 |
| 터키 | | 6.39 | 1.57 | 0.21 | 5.42 | 0.02 | 0.00 | 0.06 | a,m | a,m | 13.68 |
| 영국 | | 6.63 | 0.20 | 2.42 | 7.00 | 3.20 | 0.53 | 0.51 | 1.45 | 0.19 | 22.12 |
| 미국 | | 5.30 | 0.76 | 1.47 | 7.12 | 0.62 | 0.12 | 0.30 | a | 0.57 | 16.26 |
| OECD평균 | | 7.3 | 0.8 | 2.6 | 6.2 | 2.0 | 0.6 | - | - | 0.7 | 21.2 |

주: 1) ALMP는 적극적노동시장 프로그램을 뜻함.

2) a: 자료없음

m: 미생산

〈부표 26〉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2005)

(단위: 경상GDP 대비 %)

| 국가명 | | 노령 | 유족 | 근로 무능력 | 보건 | 가족 | ALMP ¹⁾ | 실업 | 주거 | .기타 | 계 |
|----------|---------|------|----|-----------|------|----|--------------------|----|----|------|------|
| 한국 | 2005구계정 | 0.00 | m | 0.00 | 0.2 | m | m | m | m | 1.6 | 1.8 |
| | 2005신계정 | 0.00 | m | 0.00 | 0.19 | m | m | m | m | 1.53 | 1.73 |
| | 2007 | 0.00 | m | 0.00 | 0.26 | m | m | m | m | 1.78 | 2.05 |
| 호주 | | 1.95 | m | a | 0.65 | m | m | m | m | 0.01 | 2.61 |
| 오스트리아 | | 0.53 | m | a | 0.48 | m | m | m | m | 0.00 | 1.01 |
| 벨기에 | | 2.66 | m | 0.56 | 0.51 | m | m | m | m | 0.82 | 4.54 |
| 캐나다 | | 4.28 | m | a | 1.23 | m | m | m | m | a | 5.51 |
| 체코공화국 | | a | m | 0.04 | 0.02 | m | m | m | m | 0.07 | 0.13 |
| 덴마크 | | 2.25 | m | a | 0.14 | m | m | m | m | a | 2.39 |
| 핀란드 | | 0.20 | m | 0.64 | 0.18 | m | m | m | m | 0.08 | 1.10 |
| 프랑스 | | 0.06 | m | 0.51 | 1.41 | m | m | m | m | 0.66 | 2.64 |
| 독일 | | 0.72 | m | 0.08 | 0.98 | m | m | m | m | 0.08 | 1.86 |
| 그리스 | | 0.41 | m | 0.58 | a | m | m | m | m | 0.71 | 1.69 |
| 헝가리 | | a | m | a | 0.09 | m | m | m | m | a | 0.09 |
| 아이스란드 | | 2.31 | m | 0.60 | 0.00 | m | m | m | m | 0.51 | 3.43 |
| 아일랜드 | | 0.78 | m | a | 0.56 | m | m | m | m | 0.00 | 1.34 |
| 이탈리아 | | 0.18 | m | 0.01 | 0.08 | m | m | m | m | 0.29 | 0.56 |
| 일본 | | 2.29 | m | a | 0.20 | m | m | m | m | a | 2.49 |
| 룩셈부르크 | | 0.41 | m | 0.07 | 0.18 | m | m | m | m | 0.21 | 0.87 |
| 멕시코 | | a | m | a | 0.21 | m | m | m | m | a | 0.21 |
| 네덜란드 | | 3.49 | m | 0.53 | 1.79 | m | m | m | m | 1.79 | 7.60 |
| 뉴질랜드 | | a | m | a | 0.42 | m | m | m | m | a | 0.42 |
| 노르웨이 | | 0.57 | m | 0.23 | a | m | m | m | m | a | 0.80 |
| 폴란드 | | a | m | a | 0.03 | m | m | m | m | a | 0.03 |
| 슬로바키아공화국 | | 0.42 | m | 0.11 | a | m | m | m | m | 0.29 | 0.82 |
| 스페인 | | 0.00 | m | a | 0.49 | m | m | m | m | a | 0.49 |
| 스웨덴 | | 1.97 | m | 0.34 | a | m | m | m | m | 0.07 | 2.38 |
| 스위스 | | 0.01 | m | 0.03 | 1.01 | m | m | m | m | 0.06 | 1.11 |
| 터키 | | a | m | a | a | m | m | m | m | a | a |
| 영국 | | 4.20 | m | 0.44 | 1.02 | m | m | m | m | 0.66 | 6.31 |
| 미국 | | 3.83 | m | 0.30 | 5.62 | m | m | m | m | 0.02 | 9.77 |

주: 1) ALMP는 적극적노동시장 프로그램을 뜻함.

2) a: 자료없음

m: 미생산

〈부표 27〉 총사회복지지출(2005)

(단위: 경상GDP 대비 %)

| 국가명 | | 노령 | 유족 | 근로 무능력 | 보건 | 가족 | ALMP ¹⁾ | 실업 | 주거 | .기타 | 계 |
|----------|---------|-------|------|-----------|-------|------|--------------------|------|------|------|-------|
| 한국 | 2005구계정 | 2.0 | 0.2 | 0.7 | 3.4 | 0.3 | 0.1 | 0.2 | a | 2.3 | 9.3 |
| | 2005신계정 | 1.83 | 0.23 | 0.67 | 3.15 | 0.30 | 0.12 | 0.20 | a | 2.23 | 8.72 |
| | 2007 | 2.02 | 0.25 | 0.67 | 3.72 | 0.51 | 0.13 | 0.25 | a | 2.55 | 10.12 |
| 호주 | | 6.80 | 0.21 | 3.08 | 6.52 | 2.83 | 0.38 | 0.55 | 0.25 | 0.15 | 20.77 |
| 오스트리아 | | 13.17 | 0.36 | 3.26 | 7.31 | 2.84 | 0.62 | 1.14 | 0.10 | 0.29 | 29.08 |
| 벨기에 | | 9.83 | 2.02 | 2.90 | 7.85 | 2.60 | 1.08 | 3.34 | 0.07 | 1.26 | 30.95 |
| 캐나다 | | 8.00 | 0.39 | 0.93 | 8.07 | 1.05 | 0.30 | 0.63 | 0.44 | 2.20 | 22.01 |
| 체코공화국 | | 7.66 | 0.18 | 2.47 | 6.33 | 1.73 | 0.25 | 0.62 | 0.08 | 0.54 | 19.87 |
| 덴마크 | | 9.50 | 0.01 | 4.54 | 6.00 | 3.38 | 1.75 | 2.82 | 0.71 | 1.00 | 29.70 |
| 핀란드 | | 8.70 | 0.90 | 4.47 | 6.39 | 2.97 | 0.89 | 2.01 | 0.28 | 0.59 | 27.20 |
| 프랑스 | | 11.07 | 1.88 | 2.50 | 9.25 | 3.02 | 0.90 | 1.71 | 0.81 | 1.02 | 32.17 |
| 독일 | | 11.94 | 0.38 | 3.03 | 8.65 | 2.22 | 0.97 | 1.65 | 0.61 | 0.29 | 29.74 |
| 그리스 | | 11.19 | 0.80 | 1.48 | 5.63 | 1.08 | 0.07 | 0.40 | 0.51 | 1.08 | 22.24 |
| 헝가리 | | 8.82 | 0.27 | 2.81 | 6.09 | 3.11 | 0.30 | 0.56 | 0.51 | 0.15 | 22.63 |
| 아일랜드 | | 6.13 | 0.04 | 4.77 | 6.32 | 2.97 | 0.08 | 0.31 | 0.21 | 1.00 | 21.82 |
| 아일랜드 | | 3.68 | 0.84 | 1.62 | 7.06 | 2.49 | 0.63 | 0.90 | 0.51 | 0.35 | 18.07 |
| 이탈리아 | | 12.86 | 2.49 | 2.03 | 6.90 | 1.36 | 0.56 | 0.49 | 0.02 | 0.32 | 27.03 |
| 일본 | | 11.25 | 1.29 | 0.88 | 6.52 | 0.81 | 0.25 | 0.33 | a,m | 0.26 | 21.59 |
| 룩셈부르크 | | 5.65 | 2.01 | 3.59 | 7.17 | 3.60 | 0.51 | 0.98 | 0.15 | 0.65 | 24.31 |
| 멕시코 | | 1.02 | 0.30 | 0.07 | 3.13 | 1.00 | 0.02 | a,m | 1.11 | 0.99 | 7.65 |
| 네덜란드 | | 9.02 | 0.30 | 4.85 | 7.74 | 1.65 | 1.33 | 1.53 | 0.34 | 2.42 | 29.18 |
| 뉴질랜드 | | 4.22 | 0.14 | 2.87 | 7.32 | 2.63 | 0.39 | 0.44 | 0.80 | 0.15 | 18.97 |
| 노르웨이 | | 6.89 | 0.28 | 5.88 | 5.78 | 2.83 | 0.74 | 0.53 | 0.14 | 0.61 | 23.70 |
| 폴란드 | | 10.44 | 1.02 | 2.69 | 4.34 | 1.13 | 0.42 | 0.54 | 0.13 | 0.36 | 21.06 |
| 슬로바키아공화국 | | 6.70 | 0.21 | 1.83 | 5.29 | 2.17 | 0.34 | 0.27 | 0.00 | 0.78 | 17.60 |
| 스페인 | | 7.87 | 0.55 | 2.49 | 6.33 | 1.14 | 0.78 | 2.21 | 0.17 | 0.18 | 21.72 |
| 스웨덴 | | 11.56 | 0.62 | 6.36 | 6.77 | 3.21 | 1.29 | 1.20 | 0.54 | 0.67 | 32.23 |
| 스위스 | | 11.91 | 1.08 | 4.54 | 7.08 | 1.42 | 0.75 | 0.93 | 0.15 | 0.80 | 28.67 |
| 터키 | | 6.39 | 1.57 | 0.21 | 5.42 | 0.02 | 0.00 | 0.06 | a,m | a,m | 13.68 |
| 영국 | | 10.83 | 0.20 | 2.86 | 8.02 | 3.20 | 0.53 | 0.51 | 1.45 | 0.84 | 28.43 |
| 미국 | | 9.13 | 0.76 | 1.77 | 12.74 | 0.62 | 0.12 | 0.30 | a,m | 0.59 | 26.03 |

주: 1) ALMP는 적극적노동시장 프로그램을 뜻함.

2) a: 자료없음

m: 미생산

〈부표 28〉 순사회복지지출(GDP대비,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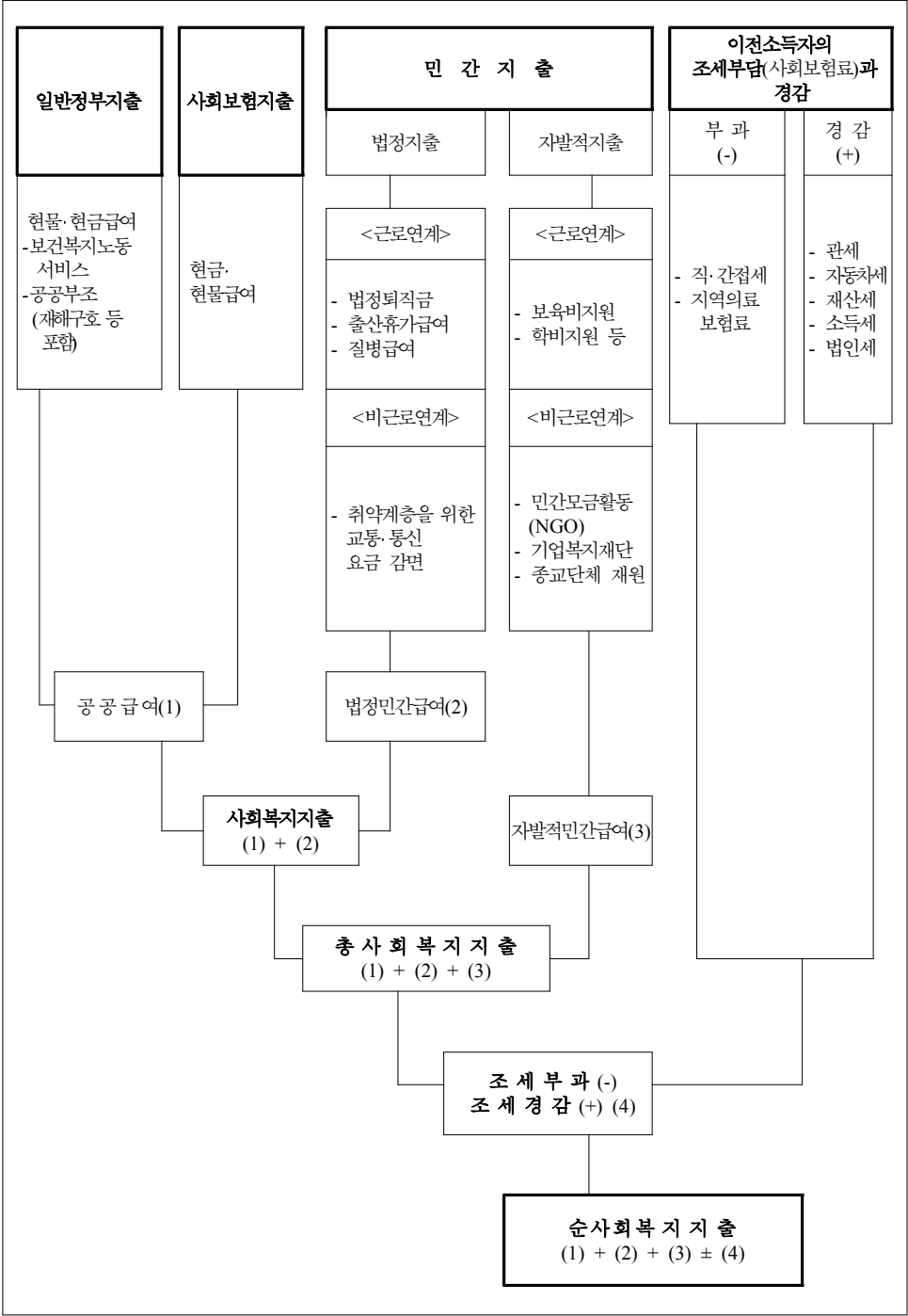
(단위: 요소 GDP대비 %)

| 국가명 | | 총공공 지출 | 순공공 지출 | 총법정 민간지출 | 순법정 민간지출 | 총자발적 민간지출 | 순자발적 민간지출 | 총사회 복지지출 | T2 | 순사회 복지지출 |
|-------------|---------|-----------|-----------|-------------|-------------|--------------|--------------|-------------|-----|-------------|
| 한국 | 2005구계정 | 7.8 | 8.0 | 0.7 | 0.6 | 2.1 | 2.1 | 10.6 | 0.0 | 10.7 |
| | 2005신계정 | 7.2 | 7.5 | 0.6 | 0.5 | 2.0 | 2.0 | 9.8 | 0.0 | 10.0 |
| | 2007 | 8.5 | 8.9 | 0.7 | 0.6 | 2.3 | 2.3 | 11.4 | 0.0 | 11.7 |
| 호주 | | 19.2 | 18.5 | 1.2 | 0.9 | 2.9 | 2.5 | 23.3 | 0.3 | 21.7 |
| 덴마크 | | 31.7 | 23.8 | 0.3 | 0.1 | 2.8 | 1.5 | 34.8 | 0.0 | 25.4 |
| 핀란드 | | 29.8 | 23.5 | 0.0 | 0.0 | 1.3 | 0.9 | 31.1 | 0.0 | 24.4 |
| 프랑스 | | 33.8 | 30.4 | 0.4 | 0.3 | 3.1 | 2.9 | 37.3 | 0.0 | 33.6 |
| 독일 | | 29.9 | 28.1 | 1.3 | 0.7 | 2.1 | 1.8 | 33.3 | 0.5 | 30.2 |
| 이탈리아 | | 28.8 | 24.8 | 1.7 | 1.4 | 0.6 | 0.6 | 31.1 | 0.1 | 26.6 |
| 일본 | | 20.1 | 19.8 | 0.6 | 0.5 | 2.7 | 2.5 | 23.4 | 0.0 | 22.8 |
| 네덜란드 | | 23.6 | 20.0 | 0.8 | 0.4 | 8.6 | 6.2 | 33.0 | 0.3 | 26.3 |
| 뉴질랜드 | | 21.2 | 18.4 | 0.0 | 0.0 | 0.5 | 0.5 | 21.7 | 0.1 | 18.8 |
| 노르웨이 | | 24.1 | 19.9 | 1.4 | 0.8 | 0.9 | 0.5 | 26.4 | 0.0 | 21.2 |
| 스웨덴 | | 34.6 | 27.2 | 0.5 | 0.3 | 2.8 | 1.8 | 37.9 | 0.0 | 29.2 |
| 영국 | | 24.3 | 22.9 | 0.9 | 0.8 | 7.2 | 6.0 | 32.4 | 0.1 | 29.5 |
| 미국 | | 17.1 | 18.4 | 0.4 | 0.3 | 10.5 | 9.8 | 28.0 | 1.4 | 27.2 |
| OECD(26)-평균 | | 23.6 | 20.8 | 0.5 | 0.4 | 2.7 | 2.2 | 26.8 | - | 23.2 |

〈부표 29〉 중앙행정부처의 정권시기별 명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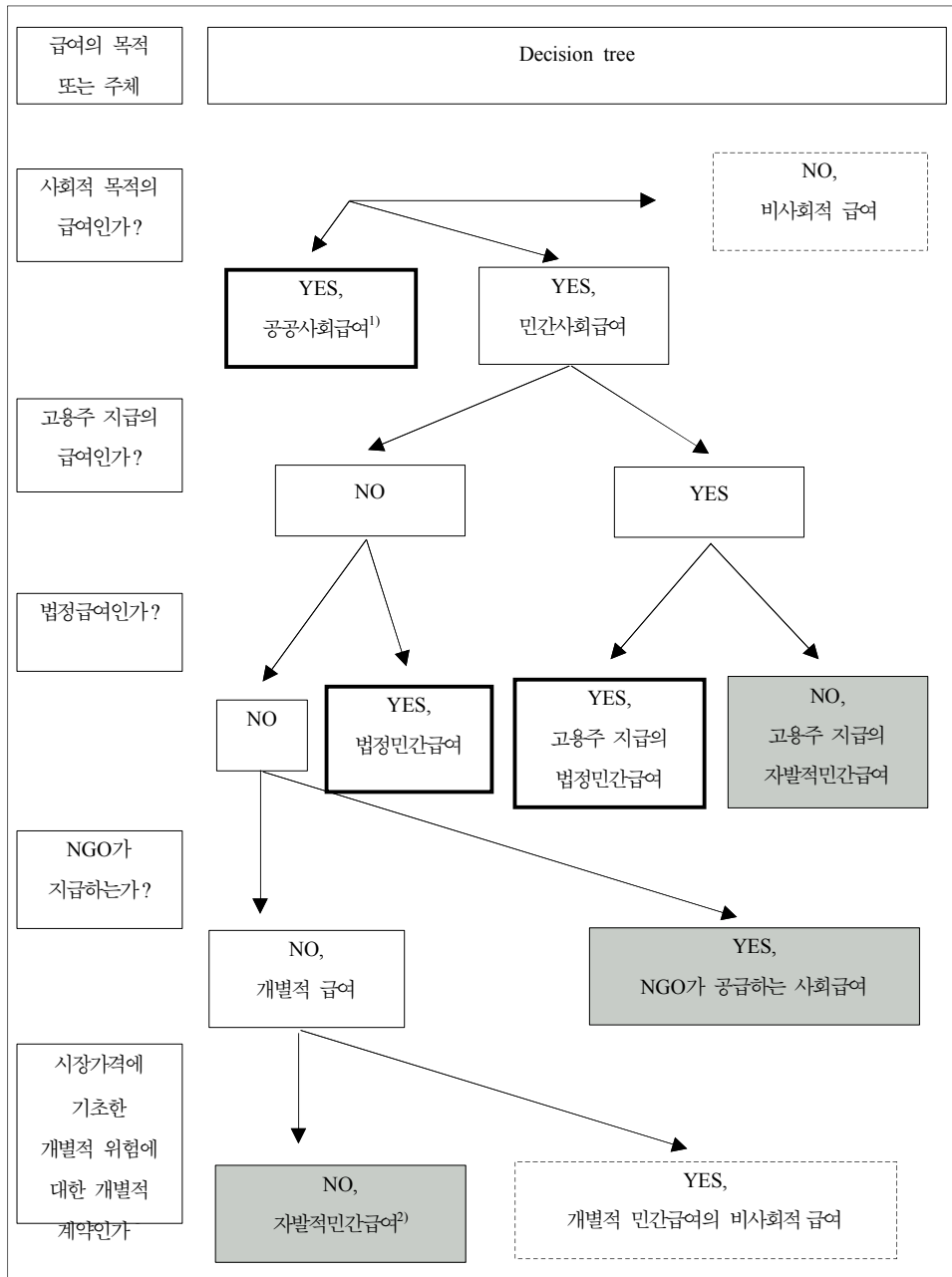
| 2003. 2. ~ 2008. 2.(참여정부) | 2008. 2. ~ 현재(이명박정부) |
|---------------------------|----------------------|
| 재정경제부 | 기획재정부 |
|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 |
| 행정자치부 | 행정안전부 |
| 문화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 |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가족부 |
| 여성가족부 | 여성부 |
| 건설교통부 | 국토해양부 |
| 정보통신부 | 방송통신위원회 |
| 통일부 | 좌동 |
| 법무부 | 좌동 |
| 국방부 | 좌동 |
| 노동부 | 좌동 |
| 국가보훈처 | 좌동 |
| 국세청 | 좌동 |
| 관세청 | 좌동 |
| 소방방재청 | 좌동 |
| 문화재청 | 좌동 |
| 식품의약품안전청 | 좌동 |

[부도 1] 순사회복지지출 구성도: 추계과정 측면



주: 1) 사회보험료는 사회보험수령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임.
2) 간접세액은 총사회복지지출에서 현물급여를 제외하고 평균간접세율을 곱하여 구함.

[부도 2] 사회적 급여의 범위: 의사결정나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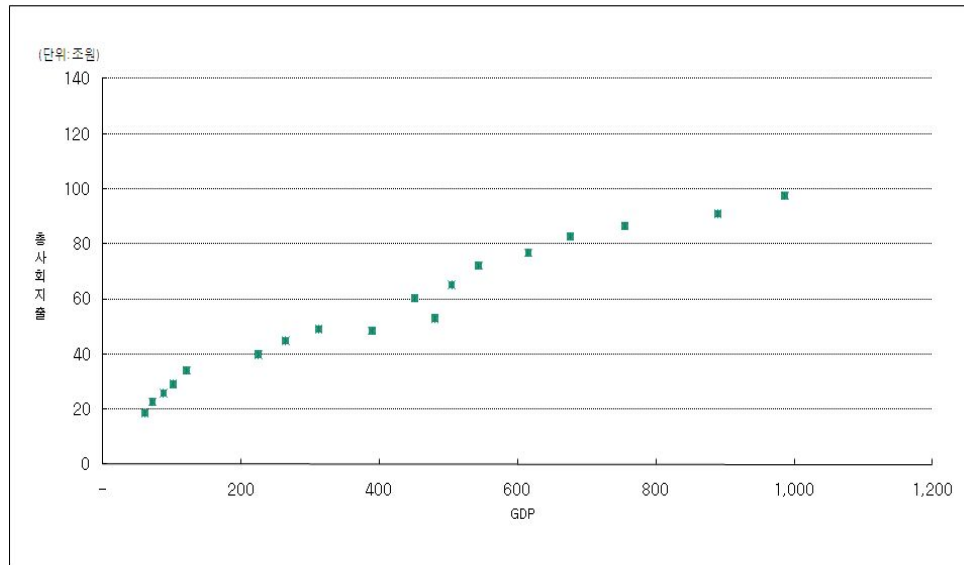
주: □ 은 사회복지지출 영역, ■ 은 총사회복지지출 추계를 위한 추가 영역, □ 부분은 총사회복지지출 제외 영역임.

1) 공공: 급여에 대한 재정적 흐름이 정부(사회보험기금을 포함하여 중앙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에 의해 통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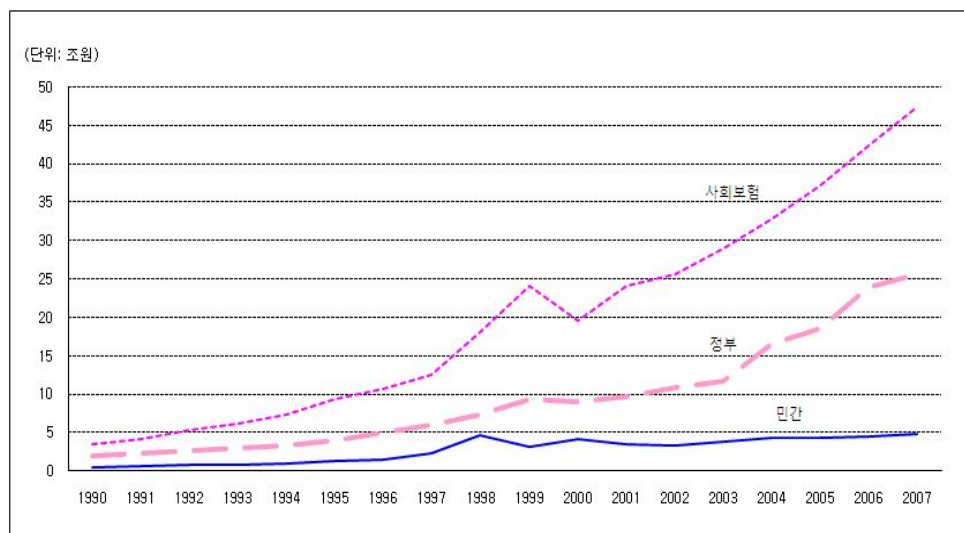
2) 민간사회부조의 범위에서 상부상조형식의 사회적 위험에 대비해 계약된 개별보험계약(예, 특별직업군, 단체 피고용인 그룹)임. “위험을 공유”하는 이러한 유형의 “그룹 보험”은 개별적인 기여가 개인의 위험 프로파일에 따른 시장 가격으로 결정되지 않는 경향이 있음.

자료: OECD, Net Social Expenditure, 1999에서 재편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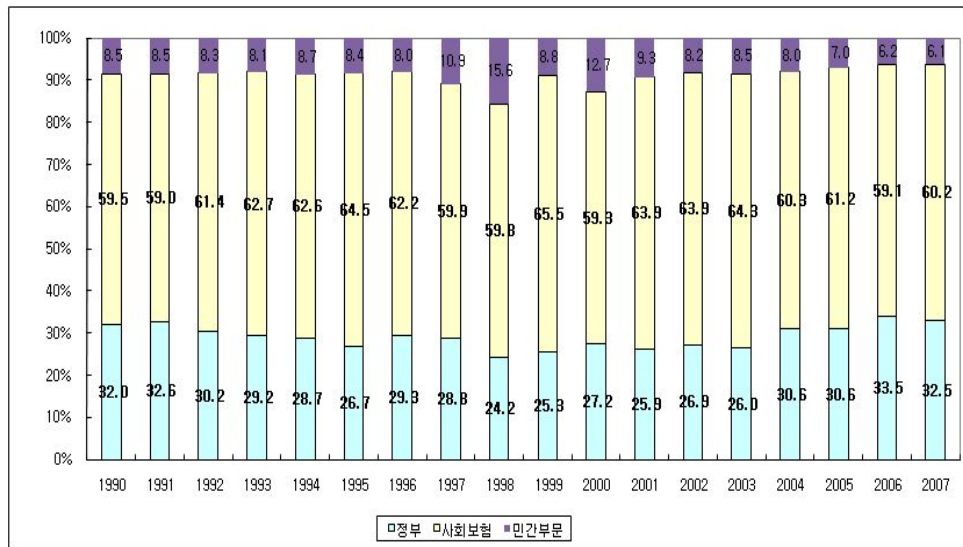
[부도 3] GDP와 총사회지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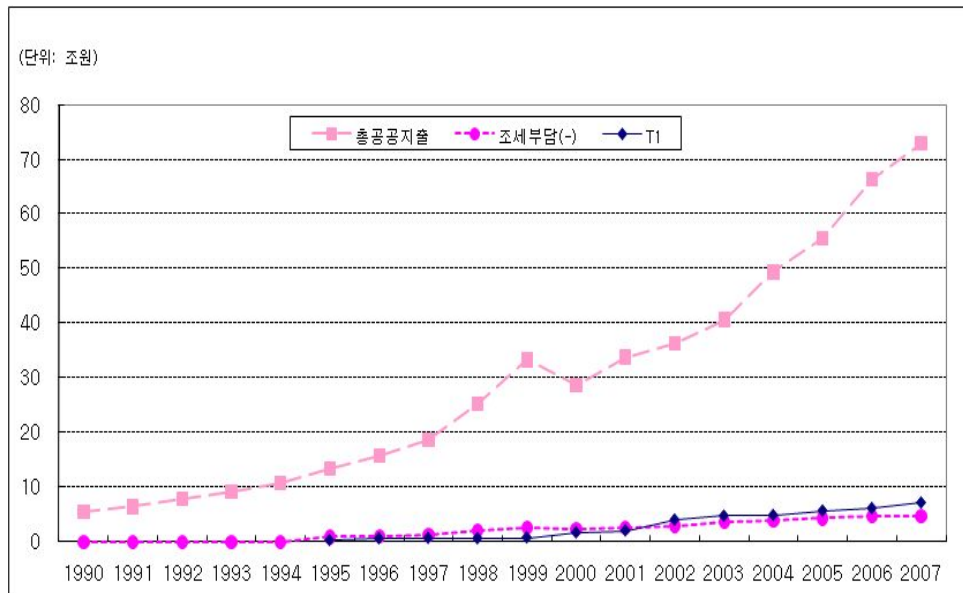
[부도 4] 재원별 사회복지지출 현황



[부도 5] 재원별 사회복지지출 현황(구성비)



[부도 6] 총사회복지지출 및 순사회복지지출 현황



[부도 7] 총사회복지지출 및 순사회복지지출 현황(구성비)

